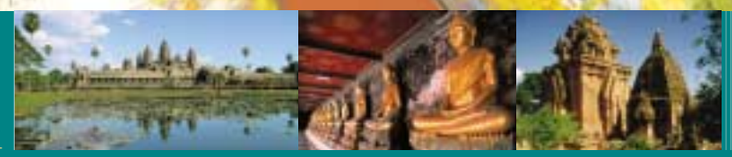
ISSN 1739-5593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5년 제4호

국제협력동향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10-78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Tel. 740-5114 Fax. 744-1092 http://www.koica.go.kr

KOICA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4호

한국국제협력단

목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논단

1. ODA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자세 ····· 11
장현식 _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장

2. 교육 및 직업훈련분야 개발사업 실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24
오기윤 _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사회팀

Ⅱ. 개발협력동향

1. OECD/DAC 및 국제기구 원조동향
-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후속조치 ····· 39
- 아프리카 지원에 관한 Camdessus 전 IMF 총재 강연 ····· 42
- 소액신용 고위급 회의 ····· 44
- ODA 규모 확대 시뮬레이션 ····· 47
- World Bank의 對파키스탄 경제원조 ····· 49

2. 공여국 원조 동향

1) 선진국 개발원조 개관
- 스웨덴 대외원조 개관 ····· 50
- 뉴질랜드 대외원조 개관 ····· 66

2) 공여국 원조동향
- 아일랜드 ODA 현황 ····· 76
- 핀란드의 對이라크 지원(IRFFI 원조공여국 제4차 회의) ····· 79
- 한-인니 ODA 정책대화 개최 ····· 81

3. 수원국 원조동향
- 제4차 이라크 원조공여국회의 결과 ····· 85
- 對스리랑카 원조동향 ····· 92
- 對인도네시아 무상원조 ····· 95

Ⅲ. 기타

1. 지역연구 ····· 105
- 對중남미 원조평가와 정책 제언
최원식 _ 한국국제협력단 봉사기획팀장

2.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소개 ····· 133
- 유엔개발계획
송기순 _ UNDP 인도네시아 사무소 Programme Specialist

3. 개발 NGO 소개 ····· 141
- 월드비전
김보경 _ 월드비전 홍보팀장

I. 논단

ODA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자세

장 현 식 /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장

Ⅰ. 새로운 국제협력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개도국의 소외화와 빈곤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를 맞이하여 개도국이 당면한 빈곤, 질병, 환경오염 등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0년 UN 총회에서는 빈곤완화를 포함한 8개의 기본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계획(MDGs)이 발표되었으며, 동 선언에 기초하여 공여국들은 ODA 증대, 조직 개편 및 전략수정 등 기존과 다른 다양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MDGs 선언 이후 동 선언의 실천을 위한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동 회의에서 채택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는 권장 혹은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지속가능발전회의, 2002)에서는 지구촌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해 ODA 증액, 시민사회 참여가 제안되었으며, 또한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개발재원회의에서는 개도국의 Ownership에 의거한 Governance, 제도, 정책 개선 등의 노력과 함께 ODA 확대, 무역개방 및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다.

2005년 3월에는 파리에서 MDGs 달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개최 후 발표한 파리선언에서는 수원국의 개발전략 강화, 수원국 우선순위에 공여국의 원조정책 일치, 공여국간 원조의 중복 축소, 개발정책 수립 시 국민과 의회에 대한 책임성 강화, 원조일치를 위한 공여국 개발정책 개혁 및 재정관리와 조달 관련 성과평가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12개 지표를 개발하고 이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또한 2005년 9월에는 MDGs 중간점검을 위한 MDGs+5 UN 정상회의가 UN 본부에서 개최되어 각국 정상들이 MDGs 선언 후 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MDGs의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MDGs 완

결년도인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심도있게 개진되었다.

동 보고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제협력의 내용과 함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MDGs의 수립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최근에 발표한 파리 선언의 의미와 함께 2001년 OECD/DAC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Ⅱ. MDGs 수립배경 및 의미

1. 수립배경

MDGs는 먼저 OECD/DAC(개발원조위원회)의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협력의 정책수립 및 공여국간 의견조정을 담당하는 DAC는 1996년에 개최된 제34차 고위급 회의에서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을 채택하였다. 이는 1990년 이후 범세계적인 이슈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여러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목표를 종합하여 측정가능한 수치의 목표를 설정하고[1]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의 강화 및 상호간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라다임 형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의 강화 및 상호간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라다임 형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개최된 UN 총회는 21세기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2]로 자유, 평등, 연대, 관용, 자연 존중, 책임 분담 등 6개를 들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 설정과 이를 주류화하기 위한 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가 포함된 MDGs를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개도국 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지구촌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3] MDGs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MDGs는 무엇인가?

가.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 세부목표 1: 1990~2015년간 1일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 세부목표 2: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나.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세부목표 3: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남녀 어린이들이 똑같이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함.

다. 목표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 세부목표 4: 교육에서의 성별간 차이를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는 2005년까지 모든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2015년까지 제거

라.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 세부목표 5: 1990~2015년간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감소

마.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 세부목표 6: 1990~2015년간 출산 시 산모사망률을 3/4 감소

바.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세부목표 7: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 세부목표 8: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저지 및 감소

사.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 세부목표 9: 지속가능개발 원칙을 각 개별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 손실 보전

□ 세부목표 10: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환경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

□ 세부목표 11: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슬럼거주자들 생활여건의 상당한 개선

아. 목표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세부목표 12: 이전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시스템 발전. Good governance, 개발 및 빈곤감소에 대한 국가적 및 국제적 공약 포함

□ 세부목표 13: 최빈국들의 특별한 수요 수용.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수량제한조치 면제, 중채무국가들(HIPC)에 대한 부채경감 및 양자간 국가채무 면제, 그리고 빈곤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개도국들에 대한 보다 관대한 ODA 지원 등 포함

□ 세부목표 14: 내륙국과 군소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수요 수용. '군소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과 제22차 UN특별총회의 결의사항을 통하여 추진

□ 세부목표 15: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의 포괄적 해결

□ 세부목표 16: 개도국들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한 적정하고도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발 및 시행

□ 세부목표 17: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 국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필수의 약품을 구입할 수 있

1) 목표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절대빈곤층을 2015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둘째, 무상 초등교육을 2015년까지 모든 국가에 실시하며, 셋째, 2005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성차별을 없애고, 넷째, 2015년까지 모자보호를 위해 영아사망율을 2/3수준으로, 모든 모성사망율을 3/4까지 낮추며, 모자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다섯째, 2005년까지 국별 지속가능한 환경전략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현재의 환경자원 손실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2) 동 가치는 200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A/res/55/2)에 포함되어 있다.
3) MDGs와 세부목표는 2000년 9월 147개국 정상을 포함한 189개국이 서명한 새천년 선언에 수록되어 있음(www.un.org 참조). MDGs와 세부목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MDGs와 세부목표는 새천년 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파트너쉽을 나타냄.

도록 함.

□ 세부목표 18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MDGs 선언의 의미

MDGs가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과 '파트너십(Partnership)' 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선언은 지금까지 단일 이슈로 취급되었던 빈곤완화, 환경, 교육, 여성개발 등의 범세계적인 이슈의 해결을 위해 각국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선언으로 공여국의 책임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책임도 향후 원조효과에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으며, 원조의 효과 제고를 위해 원조정책과 개발도상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역, 투자 및 환경정책 등과의 일관성유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몇몇 시민단체들은 MDGs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예전에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고려 시 MDGs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s는 몇 가지 측면에서 예전의 국제회의에서의 합의된 약속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4)]

가. 이해 당사자간 목표합의

MDGs는 예전의 UN에서 정한 목표와 달리 UN체제 및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목표이며, 또한 범세계적이고 개별국가적인 레벨에서 성취 가능한 기회를 의미하고 있다. 사실 MDGs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이의 달성을 위해 NGO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MDGs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다른 목표들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나. ODA 규모 합의

MDGs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의 출발과 함께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모든 정부로 하여금 GNP 대비 ODA 규모를 0.7%로 합의한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동 선언을 계기로 ODA 규모의 감소추세가 역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2년에는 몬테레이에서 ODA 재원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공여국들의 ODA 증액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다. 국제협력의 시금석 제공

MDGs 선언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정한 것이며, 이는 모든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선언 후 국제무역관련 '도하라운드(2001년)',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회의(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개발 정상회의(2002년)' 에서 MDGs의 목표 및 정신이 계승되었으며, 원조효과제고를 위한 로마선언(2003), 파리선언(2005)이 채택되어 수원국 중심의 원조전략 수립과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라. 범세계적인 안보와 직결

MDGs는 경제적 목표, 정의 및 인권신장 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안보 및 안정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빈곤이 국제적인 테러나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 시 MDGs 선언은 향후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보나 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MDGs 달성을 위한 국별, 지역별 대응방안

현재 개별 국가들은 MDGs를 국가개발계획에 통합하여 부처별 예산배정과 우선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70개국 이상의 개도국에서 빈곤감소 전략을 수립하였는 바, 이를 국별, 지역별, 범지구적 차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별 차원

UN총회에서는 모든 개도국들이 2004년 말까지 국별 MDGs Report를 발간, UN에 제출토록 권고하였으며, 현재 65개국이 1권 이상 MDGs Report를 발간하였다. 한편 공여국들도 MDG8 Report를 제출토록 권고받고 있으며 현재 벨기에, 덴마크, EU,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미 동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나. 지역별 차원

MDGs 달성을 위해 지역별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UN 기구와 회원국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차원의 MDGs 보고서를 제작키로 하였으며 현재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중부 유럽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다. 범지구적 차원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UN 기구들의 보고를 받아 매년 사무총장이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3월에 통합 보고서인 'In Larger Freedom-Towards Secur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 for All' 이 발간되었고, 2005년 6월에는 'MDGs Progress Report' 가 발간되었다.

라. Millennium Project

동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2002년 사무총장이 지원하는 독립적 자문사업이 설립되었으며, Jeffrey Sachs가 사무총장 특별 자문관으로 임명되었고, 2005년 1월에 'Investing in Development'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마. Millennium Campaign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한 남과 북의 공조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경우 ODA의 효율성, 개도국/최빈국들에 대한 시장개방, 부채탕감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증진 캠페인을, 개도국의 경우 가능한 국내자원의 총동원, MDGs 달성을 위한 예산배정 우선 등을 강조하

4) UN(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p.2-15

였다. 동 캠페인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한국의 경우 해원협과 경실련 주최로 'White Band Campaign'이 실시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MDGs에 대한 Advocacy campaign을 시작하였다.

〈참고 : In Larger Freedom 제안사항〉

1. 개발

□ 개도국 : 2006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선진국 :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7%까지 증액해야 함(2006년까지 상당한 증액을 요하며, 2009년까지는 0.5% 달성).

□ MDGs를 대부분 달성한 Middle-income 국가들은 'MDGs-plus' 전략을 채택

□ 2005년까지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국가계획을 수립한 개도국들은 충분한 원조를 받아야 함.

□ 2005년까지 국제사회는 '국제재정기금(IFF: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을 창설하여 ODA 활용을 지원. 'Quick Win(저비용, 고효과 방안)'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

□ 기존의 국내외 역량을 활용한 전 세계적 조기 재난경보 시스템 설립

2. 평화와 안보

□ 테러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으로 테러방지 조약합의

□ 핵 확산 감소를 위한 핵물질중지조약의 수립과 합의

□ 분쟁국가들의 지속적 평화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 'Peace-building Commission' 창설

3. 인권과 법률

□ 기존의 인권위원회(HR Commission)를 새로운 인권협의회(HR Council)로 대체하는 결정

□ 모든 회원국들은 대량인종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책임'을 수용해야 함. 국가가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모니터링, 외교적 압력 등을 통한 행동의 책임을 갖게 됨.

□ 민주주의 수립 및 강화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위한 'Democracy Fund'의 수립

4. UN의 강화

□ 국제적 공동체의 보다 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 경제사회이사회가 UN 개발정책 수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이를 위해 매년 개발목표 달성의 진전사항을 장관급 회의에서 평가

□ 회원국들의 우선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재조정

□ 총회의 업무 합리화, 의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등 과감한 대책 수립

5. 공여국의 MDGs 후속조치

MDGs선언 후 공여국들은 자국의 원조정책을 MDGs에 맞추어 재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실시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 조직 및 관리체계를 바꾸고 있다.

가. 영국[5]

영국 정부는 2002. 6월 제정된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제1조 (1)항에서 '빈곤퇴치에의 기여'를 ODA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 발간된 ODA백서 'Eliminating World Poverty : Making Globalization Work for the Poor'에서 MDGs에 기초하여 '빈곤퇴치'를 영국 ODA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나. 미국[6]

미국의 2002년도 ODA 규모는 132억불이며 이는 전체 DAC 회원국 총액의 22.8%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총액 기준으로는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지만 GNI 비중으로는 가장 낮다는 국제적 지적에 따라 2002년 부시 행정부는 2004~2006년 중에 50억 달러 규모의 원조예산을 증액시키는 새천년개발기금(Millenium Challenge Account)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미국 공적개발원조 총액을 약 50% 증액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MDGs를 달성하기 위해 GNP 대비 ODA 규모를 0.7%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일본[7]

일본 정부는 1992년에 수립한 ODA 헌장을 2003년에 개정하였으며, 이는 MDGs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특히 OECD/DAC에서 수립한 '21세기 원조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MDGs 달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헌장에 따르면 일본 ODA 목적은 "국제사회의 개발과 평화에 기여하고, 일본의 안보와 번영에의 기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빈곤완화는 헌장에서 명시된 네 가지 ODA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자국의 경험을 기초로 빈곤완화를 경제성장과 연계하고 있다.

일본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최근 들어 주요 개혁들과 구조조정을 거쳐 왔다. ODA 헌장의 개정과 함께, 2003년에는 JICA의 지위가 독자적으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 일본수출입은행(JEXIM)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으로 합병되었다. 외무성은 법적으로 ODA 실행기관들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일본이 개발이슈에 대한 주요 회의들을 주최함으로써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MDGs 및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원조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등 자국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개발협력이 단지 자금문제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 하에 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5) DAC Peer Review of United Kingdom, Full Report 2001
6) DAC Peer Review of United States, Full Report 2004
7) DAC Peer Review of Japan, Full Report 2004

특히 성과에 기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양한 MDGs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서 2004년 말에 시행되었으며, 또한 MDG8의 달성을 위해서 네덜란드는 WTO 체제를 따르고 국가 농업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개도국의 부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부채탕감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MDGs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2004년 5월에 어떻게 그들이 M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보고하기 위해서 MDGs 목표 8 관련 진행보고서[8] 를 발간하였다.

마. 프랑스[9]

프랑스 정부는 2000년 MDGs가 UN 총회에서 비준된 후 개발협력의 목표를 개도국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두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접근법은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을 범세계적인 개입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2년은 프랑스의 개발협력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 대통령이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 프랑스 정부의 ODA 규모를 GNI 대비 20007년에는 0.5%, 2012년까지 0.7%까지 올리기로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동 규모의 절반 이상을 MDGs 달성을 위해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에 할당키로 하였다.

〈참고:MDGs달성을 위한 10대 권고사항〉[10]

(Investing in Development)

1. 목적 및 과정(Purpose and Process)

- ㅁ MDGs를 ODA의 기본목표로 설정
- ㅁ 수원국의 개발우선순위에 따라 자국의 개발정책을 일치
- ㅁ 공여국은 3~5년간의 다년계획에 근거하여 수원국 지원

2. 기술협력(Technical Support)

- ㅁ 기술지원은 수원국 정부가 MDGs에 근거한 빈곤완화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ㅁ UN 해외사무소의 개발조정체제가 강화되어야 함.

3.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

- ㅁ 적정한 ODA 규모는 MDGs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정도가 되야 함. 특히 Governance가 좋은 LIC 국가에는 더욱 많은 지원이 되어야함.
- ㅁ 각 개도국의 적정 외채규모는 MDGs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외채규모를 말하며, 특히 HIPC 국가에는 외채를 대규모로 포기해야 함.
- ㅁ Governance가 좋은 국가에는 예산지원형태로 ODA를 지원해야 하며 대부분의 개도국에게도 파리선언에 기초하여 ODA를 지원해야 함.

4. ODA체제(System Issues)

- ㅁ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과학능력, 환경보호, 지역통합, 생식보건 및 국가간 인프라 건설 등 중·장기적인 이슈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 ㅁ 공여국들은 MDGs 지원을 위해서 개발, 재정, 외교 및 무역정책 사이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며, 특히 투명성의 측면에서 모든 개도국에게 같은 잣대를 유지할 것

8) Progress Report, "Millennium Development Goal 8: Developing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2004, 네덜란드 외교부
9) DAC Peer Review of France, Full Report 2004
10) UN(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p.200

Ⅲ. 파리선언의 의미와 내용

1. 선언문 개요

동 선언은 고위급 포럼(HLF) 운영위원회(WB, 주최국 프랑스, ADB, EC, UN, 개도국, DAC 회원국, OECD 사무국 대표로 구성)에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동 선언문은 총 3부(Section), 54개항(Para), 12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어 있다.

〈원조효과성 발전 12개 지표(Indicators of Progress)〉

	1.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1	수원국은 실제 이용가능한 개발전략을 마련함 – 중기 재정지출 체제와 연계되어 있는 명료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고 의회에도 보고된 국가개발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number)	수원국의 75%
2	신뢰할 수 있는 국가체계 : 공공재정관리체제 *CPIA: 세계은행이 개도국의 예산 및 재정관리 체제를 분석.평가하는 등급	50% 개도국 CPIA상 최소 1등급(0.5점) 개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체계 : 조달체제	33%의 개도국이 최소 1등급(총 4개 등급 중) 개선
	2. 원조일치(Aligment)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3	원조흐름이 국가개발전략과 일치됨: 수원국 예산계획에 보고된 원조흐름의 비율(percent)	수원국 국가예산계획에 보고된 원조흐름 85%
4	개도국이 개발전략과 일치된 조정프로그램을 통한 개도국 역량배양 지원: 기술협력(분자) 규모와 총 기술협력규모(분모)의 비율	50% 이상
5	수원국 체제의 활용: 수원국 정부조달 및(또는) 공공재정관리 체제를 적어도 자국의 국별 개발원조 프로그래밍에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공여국의 비율(percent)	CPIA 5점 이상 개도국은공공재정관리체제를 통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흐름 2/3 감축하고 100%의 공여국이 개도국 체제를 이용
6	중복되는 제도마련을 피하여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 국가 당 설치된 특별 원조실행부서(units)의 수	특별 원조실행부서의 수를 현재의 2/3으로 감축함
7	원조의 예측가능성 증대 : 연간 예산지원 지출액 중 사전에 합의된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비율	예산지원의 90%가 사전 스케줄에 따라 집행됨
8	원조의 언타이드화 : 언타이드된 양자간 원조비율	발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3. 원조조화(Harmonization)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9	전체원조중에서 program-based approach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규모	66% 이상
10	공여국의 공통 사절단 파견 및 국가분석작업의 공통 실시 : 원조현장에 파견되는 공통사절단과 전체사절단의 비율과 전체 국가분석작업과 공통 국가분석작업 비율	공통사절단: 최소 30% 공통국가분석작업: 2/3 이상
	4. 원조성과 관리(Management for result)	**2010년도까지 달성목표**
11	원조성과 평가시스템 : 투명하고 심사가능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수원국 비율	33% 이하로 감축
12	상호책임성 : 원조효과성에 대한 합의된 공약사항 공동평가 참여 수원국 비율	평가과정에 모든 수원국 참여

2. 주요 내용

동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원국은 건실한 개발정책을 정의하고 개발행동을 조정해야 하며, 반면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의제와 일치,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수원국은 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수원국의 공적자금운영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수원국의 건실한 조달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원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공여국간 원조를 조정하고 원조 절차를 간소화하며 성과가 큰 분야 또는 사업으로 원조를 집중화하고, 공여국간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야 하며, 공여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취약국가에 대한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가 실시되어야 하며 분야별, 국가별 건실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성과중심의 원조 결과관리 체계 구축 및 개발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OECD/DAC는 파리선언 제3부에 명시된 원조효과성 제고관련 성과를 평가할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고 이행시한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Ⅳ. 언타이드 원조(Untying Aid)

1. 배경

DAC는 1998년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제안한 후 DAC 금융문제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최빈국의 국제수지 및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지원, 외채경감, 분야 및 주제별 지원, 투자프로젝트 등의 부문에 대한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결의하였다.

기술협력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 준비나 수행과 무관한 FTC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는 동 권고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지원을 위한 투자관련 기술협력(IRTC)의 경우 약 19만달러 이상 사업의 경우 언타이드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 : IRTC의 정의〉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기본/상세설계, 건축엔지니어링 입찰절차를 자문 관리하는 구매관련 기술지원(Procurement-related technical assistance: PRTA) 등의 기술협력을 의미함.

2.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언타이드화 적용범위

시한	2002.1월 시행
적용대상사업	국제수지 및 구조조정지원, 부채탕감, 프로그램원조, 투자사업 원조, 수입현물지원, 상업서비스계약, 구매가 따르는 NGO에 대한 ODA, 투자관련 기술협력
적용제외사업	독립적인 기술협력(FTC), 식량원조
최소적용규모	일반사업 : 70만 SDR(약 1백만 달러)이상 IRTC : 13만 SDR(약 19만달러)이상

3. DAC회원국 양자원조의 타이드/언타이드 비중

국가명		DAC회원국(%)	한국(%)
2001	언타이드	79.1	1.5
	부분언타이드	3.1	4.2
	타이드	17.8	94.3
2002	언타이드	84.8	1.6
	부분언타이드	3.8	8.9
	타이드	11.4	89.5
2003	언타이드	92.0	2.5
	부분언타이드	1.2	16.9
	타이드	6.8	80.6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가. 수출진흥과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수단으로서 제약확대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투명성 강화조치로 인한 입찰정보의 사전통보 및 공개 확대는 경쟁국들의 타이드원조 규제에 대한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강화시킴으로써 EDCF 차관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데 제약이 확대될 수 있다.

나. ODA 국내 지지기반 약화

언타이드화의 진전은 국적기업이나 일반국민의 참여에 대한 제약이 확대됨으로써 ODA 규모확대, 질적개선, 국민참여 확대측면에서 ODA 국내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5. 향후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이 아니므로 최빈국 원조 언타이드화에 대한 준수의무는 없으며, 현재 우리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KOICA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에서 무상원조사업의 물자조달은 현금지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DAC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비율확대가 국제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원조의 효율성과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화 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시한을 설정하고 동 시한 전까지의 기간을 활용하여 타국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일본의 경우〉[11]

□ 일본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수지 흑자폭의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로 국내외적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72년 10월부터 언타이드 원조 제공 시작
- 1990년대에는 일부 LDC 타이드 원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타이드 조건으로 지원

□ 그러나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9년 타이드 차관 제공을 재개하여 2000년에는 전체 차관 승인액의 34%까지 확대됨.

□ 1990년대 이후 언타이드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 엔차관 사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최근 수주율은 최하 30% 전후를 유지
- 이는 언타이드로 본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본 사업과 연계된 기술부문(설계 등)을 타이드로 제공하는 '사실상의 타이드' 공여방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정부는 2003년 개발원조 백서(ODA White Paper)에서 2001년 DAC 對최빈국 원조 언타이드화 권고안에 관련되는 개발원조는 100% 언타이드 되어 있으며, 전체 양자간 ODA의 81.1%가 언타이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11) DAC Peer Review of Japan, Full Report 2004

ㅁ그러나 그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상원조(Operational grant)의 경우 주계약자(Primary contractor)가 일본기업으로 타이드 되어 있음. 다만 이 주계약자가 물자조달(Procure)시 일본산 재화 · 용역을 사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일본 외무성(MOFA)은 이 점을 들어 일본의 무상원조가 Untied 되었다고 간주하고 그와 같이 DAC에 보고하고 있음.

Ⅴ. ODA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 MDGs 이행을 우리 개발협력 정책의 중점 과제로 수용

MDGs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새로운 국제협력의 기본방향인 바 우리도 향후 개발 관련 정책 입안 시 MDGs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MDGs 달성을 자국의 개발목표로 수용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도 ODA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MDGs 이행 검토 관련 각종 국제회의 시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 및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2. 우리의 MDG8 이행 실적 보고서 준비

2000년 이후 MDG8 이행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을 MDGs 카테고리별로 총망라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이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는 공여국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3. 원조실시 체제의 선진화

먼저 원조담당 인력 양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실시체계를 위해 해외사무소의 권한 및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리선언에서 강조한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맞는 ODA 정책 수립을 위해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강화해야 하며, 수원국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원조를 위해 ODA 실시기관의 국별 원조정책 수립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범국가에 대한 Country Programming을 하기 위한 실시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국내의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 전문가 활용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잘 파악하여 다른 공여국과 차별화된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원조담당기관 간의 원조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원조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기존의 사업실시체계를 재검토하고, 원조정책 수립과정 관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장현식(1999), OECD/DAC회원국의 원조체제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장현식(2000), 아국의 OECD/DAC 가입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정창호(2005), OECD의 타이드(tied)원조 규제가 우리나라 ODA에 미치는 영향(세미나 발표문)
한국국제협력단(2005), 국제협력동향 1, 2, 3호
한국국제협력단2005), DAC 회원국들의 개발원조 체계 및 실행
Hyun-sik Chang, Arthur M. Fell and Michael Laird(1999), A Comparision of Management System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OECD/DAC Members, OECD
Netherland(2004), Progress Report, "Millennium Development Goal 8: Developing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OECD(2001), DAC Peer Review of United Kingdom, Full Report 2001
OECD(2004), DAC Peer Review of United States, Full Report 2004
OECD(2004), DAC Peer Review of Japan, Full Report 2004
OECD(2004), DAC Peer Review of France, Full Report 2004
OECD(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ECD(2005), OECD/DAC 43차 고위급 회의 자료집
UN(2000), UN General Assembly 결의문(A/res/55/2)
UN(2005), In Larger Freedom-Towards Secur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 for All
UN(2005),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orld Bank(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Oxford University Press

교육 및 직업훈련분야 개발사업 실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오 기 윤 /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사회팀

Ⅰ. 머리말

교육 · 훈련분야는 우리나라 무상협력사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본 고에서는 동 분야에 대한 국제원조동향, 선진원조기관의 지원사례 및 개발사업의 실시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 · 훈련분야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문

1. 교육 · 훈련분야 정의

DAC 통계지침상 교육분야는 직업훈련 및 모든 수준의 일반교육 및 특정 교육목표 성취를 위한 건축을 포함하며(단, 특정분야 교육은 해당분야에 포함), 이는 다음 〈표1〉과 같이 분류된다.

〈표1_DAC 통계지침상 분류〉

구 분	주 요 항 목
교육/수준 미분류 (Education/level unspecified)	–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 교육 시설 및 훈련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 교사 훈련(Teacher training) – 교육 연구(Educational research)
기초교육 (Basic Education)	–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 청소년과 성인의 기본 생활교육 (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 –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고등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 고등교육(High education) – 고급기술, 관리자 교육 (Advanced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

본 고는 DAC 통계지침상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그간 KOICA 교육사회팀 및 재난복구지원본부에서 추진해 온 해당분야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을 대상으로 크게 직업훈련과 일반 기초교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동 통계에 IT분야 교육 · 훈련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 원조동향 및 선진원조기관 지원사례

1) 원조동향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Goal 2 Target 3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고, 성 평등 달성 관련 목표 역시 2015년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근절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 훈련분야는 원조의 주요 이슈분야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는 1990년 개최된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에서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 EFA)' 의 실현을 약속한 이래 현재까지 아동교육 확대, 무상의무교육 기회 제공, 문맹률 감소, 교육에서의 성평등 달성 및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하에 실질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전체 DAC 회원국 지원액의 8.7%, 2003년에는 7.7%가 교육 · 훈련분야에 지원되었다. 해당기간 중 이 분야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지원순위 및 각국의 지원비율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각 국별 주요 지원내용은 교육시설 개선 또는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교육정책 및 제도 개선, 문맹퇴치 및 기타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_공여국별 총 지원액 중 교육훈련분야 점유비율 순위〉

순위	2002년		2003년	
	국가명	지원비율(%)	국가명	지원비율(%)
1	뉴질랜드	28.6	그리스	35.2
2	프랑스	19.5	포르투갈	34.3
3	아일랜드	19.4	오스트리아	27.3
4	포르투갈	19.3	뉴질랜드	23.8
5	오스트리아	15.0	프랑스	17.6

2) 선진 원조기관의 지원사례

이제부터 선진 원조기관들이 교육 · 훈련분야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몇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 GTZ

교육 · 훈련분야를 중점협력분야로 채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분야 및 기초교육분야에 대한 각각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업훈련분야〉

GTZ는 효율적 직업훈련 제도 수립을 위한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소득원 창출을 통한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라는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GTZ는 직업적 경쟁력이 기술적(Technical), 방법론적(Methodological), 사회적 경쟁력(Social competencies)뿐 아니라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기술까지 아우르는 것이라는 데 기본원칙을 두고, 혁신적 교수 · 학습 방법론뿐 아니라 직업훈련 과정에도 초점을 맞춰 훈련프로그램의 고안 · 실행 · 검증에 있어 사회 및 기업과 최대한 밀접하게 협력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능력배양을 위한 정책조언 및 시범프로젝트도 진행한다.

GTZ는 각 수원국의 특수성과 개발사업 진행 과정

에 맞는 차별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며, 특히 시장조사를 통한 산업수요 파악 및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GTZ의 우간다 직업훈련 사업은 이러한 직업훈련 관련 원조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동 사업에서 GTZ는 우선 Uganda의 노동시장 수요조사 실시 후 Uganda Voc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UVQF) 개발을 지원하여, 이 UVQF에 의해 노동시장과 교육의 연관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직업윤곽 및 기준을 만들며, Uganda 교육부가 교육분야 전략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자문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Gender equality, HIV/AIDS, 환경과 같은 Cross-sectoral 이슈를 접목시킨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직장 내 HIV/AIDS 교육이나 환경 친화적 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거나 성평등 이슈 관련, 거의 모든 직업훈련 활동에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을 개발, 접목시키는 것 등은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MDGs 달성을 위한 하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초교육분야〉

기초교육부문에 있어 GTZ는 'Education for All' 개념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사회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정치 ·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MDGs 달성을 위해 학교건립과 같은 물리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성평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지속적 교육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수원국들이 EFA를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GTZ는 교육정책부터 교사훈련이나 학교 이외의 특정그룹을 위한 교과과정 관련 조언까지 지원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경우에서와 같이 HIV/AIDS, 평화적 공존과 갈등해결과 같은 주요 이슈를 기초교과 과정에 특정방법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 일본 JICA

JICA의 교육분야 원조 역시 Dakar Framework for Action의 Education for All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이 교사, 학습교재, 학습공간, 교육행정 및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의 학교 건립 위주의 사업형태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학교행정 참여, 학교중심 행정의 확산, 아동중심 학습방법의 보급, 교육행정 능력의 개발 등의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JICA는 수학교사들의 학습지도 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3~2006년간 온두라스에서 교수법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JICA가 나이지리아에 설립 추진 중인 School Management Committees(COGES)는 교장, 교사, 학부모 대표단, 종교 지도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구성원이 학교행정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JICA는 지역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Ownership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 미국 USAID

USAID는 교육을 초 · 중등교육 및 문맹자 교육과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및 성인층에 대한 기본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초등교육 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USAID가 작성한 'Education Strategy : Improving Lives Through Learning'에 의하면 USAID가 내세우는 최우선 모토는 교육기회에의 형평성 및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방해하는 물리적 · 경제적 · 사회적 장벽을 없애 빈곤, 지역, 인종, 장애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 USAID는 수원국들이 적절한 공공자금을 유치하여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 우선 교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평가자료를 만들게 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의 교육상황에 따라 사업지원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투입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었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USAID는 주요 과목을 테스트하는 등의 적절한 평가자료를 고안, 교육의 질을 측정함으로써 교육관련 사업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원국 정부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개혁 지원, 학교건립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다양한 자금확보 방안 등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3. KOICA 지원 현황

이제부터 교육훈련분야에 대한 KOICA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원실적

1991~2004년까지 KOICA 무상협력사업 중 교

〈표3_1991~2004년도 교육 · 훈련분야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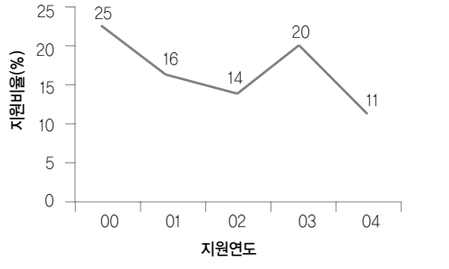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구분	총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협력사업 총액(A)	819	23	29	30	38	49	54	55	38	38	45	54	62	124	178
교육훈련 총액(B)	123	1	1	3	5	7	8	9	7	8	11	8	8	25	20
점유(B/A)	15%	4%	4%	10%	14%	15%	15%	16%	19%	21%	25%	16%	14%	20%	11%
개발사업 총액(C)	225	0.8	1.9	5.7	9.7	13.2	13.3	17.6	13.6	13.1	16.4	12.4	15.9	36.4	54.8
교육훈련 분야개발 사업(D)	83	0.4	0.4	1.5	4.3	5.6	5.6	6.5	5.7	6.2	9	4.1	4.4	17.5	10.4
점유(D/C)	37%	54%	25%	27%	45%	43%	43%	37%	42%	48%	56%	34%	28%	48%	19%

※세부 내역은 첨부 자료 참고

육 · 훈련분야의 지원비율은 대략 15%를 점유한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19% 가량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협력사업비 총액의 11%에 해당하는 20,112천불을 지원한 바 있다.

〈도표1_최근 5년간 교육 · 훈련분야 지원실적('00~'04)〉



실제로 2003년 기준으로 협력사업비 총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DAC 회원국 중 동 분야 지원 상위권 국가인 핀란드(21%), 아일랜드(19.4%), 오스트리아(20%)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4_DAC 회원국의 교육 · 훈련분야 무상협력 지원실적〉

(2002년 기준)

국 가	배분비율(%)	국 가	배분비율(%)
미국	2.3	그리스	7.8
캐나다	12.3	아일랜드	19.4
호주	4	핀란드	10.8
오스트리아	15	스웨덴	6.2
덴마크	9	스위스	4.5
독일	15.1	노르웨이	11.3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직업훈련분야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 지원액의 52%를 프로젝트형 사업(총 16건/계속 6건, 신규 10건)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 물자지원 32.8%, 연수생초청 7.8%, 봉사단파견 7.2%, 전문가파견 0.2% 순으로 지원

〈표5_2004년도 교육 · 훈련분야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구 분	사업비(천불)	점유율(%)
총 사업비	20,112	100
프로젝트	10,459	52
개발조사	–	–
물자지원	6,593	32.8
연수생초청	1,564	7.8
전문가파견	45	0.2
봉사단파견	1,451	7.2

2) 프로젝트/개발조사사업 지원 현황

가. 세부 분야별 현황

1991~2004년간 세부분야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직업훈련분야가 40건(개발조사 1건 포함)으로 가장 많고 초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분야가 각 17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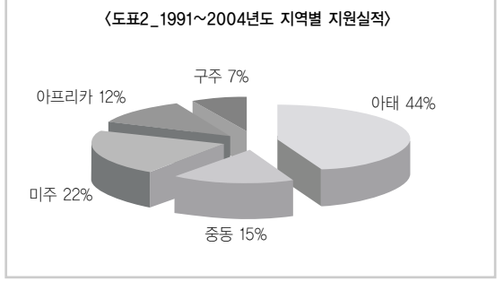
직업훈련분야의 경우, 개발조사사업 1건(튀니지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을 제외하면 모두 직업훈련원 개설 또는 기존 직업훈련원의 시설개선 지원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기초교육분야의 경우, 초 · 중등교육분야는 총 지원건수인 17건 중 초등학교 건립지원 사업이 12건으로 71%를 차지하고, 고등교육분야는 총 17건 중 대학교내 한국어과 신설 지원이 10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나. 지역별 현황

1991~2004년간 지역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아 · 태 33건(44%), 미주 16건(22%), 중동 11건(15%), 아프리카 9건(12%), 구주 5건(7%) 순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 재건사업 증가 및 주변 중동국가들에 대한 특별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동 분야에 있어서도 중동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동 지역 지원이 54.6%로 최대 규모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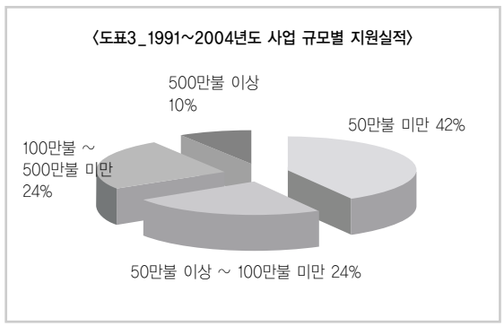
〈도표2_1991~2004년도 지역별 지원실적〉



다. 규모별 현황

사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비 총액 100만불 미만 사업이 총 49건(66%)인 반면, 100만~500만불 사업이 18건(24%), 500만불 이상인 경우는 7건(10%)에 불과하여 총 지원액에 비해 단위사업별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표3_1991~2004년도 사업 규모별 지원실적〉



4. 향후 사업추진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사회의 원조흐름 및 KOICA의 지원실적을 토대로 향후 교육 · 훈련분야의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이는 비단 동 분야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며, 여타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시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ODA 사업 규모는 2003년도 기준으로 366백만불이며, GNI 대비 0.06% 수준이다. 이는 OECD/DAC 회원국 평균 0.25%에 훨씬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이렇듯 영세한 원조규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HRD), IT 등 우리 개발경험 및 비교우위가 있는 교육훈련분야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 훈련분야가 우리나라 무상협력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간 이룩한 성과를 대변하는 동시에 교육 · 훈련분야의 개선이 對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의 질적 개선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KOICA는 원조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분야별 조직편제를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교육사회팀을 신설했다. 이러한 교육 · 훈련분야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통해 아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개도국의 기술수준, 사회제도, 경제수준, 기초인프라 등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직업훈련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지원공과 및

장비의 선정을 위해 현지 산업기술 여건 및 인력수급 전망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CNC 등 고가의 신기술 장비를 지원하고서도 현지 관련 산업 미성숙, 장비보수유지 미흡 등으로 실습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현지 산업체의 기술인력 수요에 부적합한 공과 선정으로 훈련생 선발 및 졸업생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지속발전가능성 제고

교육 · 훈련분야의 협력사업은 개도국이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HRD)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훈련분야 지원목표가 개도국 기능인력 양성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장비지원 및 기술전수는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재정적 · 기술적인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훈련원 운영계획 수립 및 정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 지원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효과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또는 후속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지원기자재 관련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훈련교사의 보수교육, 전문가의 정기적인 지도 등은 지속발전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이 우리나라 직업훈련 프로젝트에 10~20년 이상 장기간 지원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과거 40여년간 경제사회 발전을 통해 교육훈련분야에서의 모범적인 시스템 및 풍부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여건이 다른 개도국의 경제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기술자문과 사업수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개도국 교육 · 훈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전문기관에서는 실무경력과 어학능력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전문교육 및 협력사업 참여의 기회를 집중 제공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ODA 증액에 따른 교육 · 훈련분야의 지원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4)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원조사업에서 개발NGO의 참여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특히 교육훈련분야에 대한 NGO의 관심 및 참여가 많은 편이다. 아울러 협력단의 프로젝트 사업이 비교적 단기간 완료됨에 따라 종료사업의 사후관리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NGO를 통해 종료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교육 · 훈련분야에서 활동하는 NGO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협력사업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인식제고에는 물론 NGO의 전문화 및 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분야 동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초교육 확대를 주요 원조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도국의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6천만 명이 문맹상태에 있으며 취학 연령층에 속한 전 세계 어린이 1억 2천만 명이 교육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KOICA는 기존의 초등교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교육행정, 교육정책, 교사연수 등 개도국의 수요에 맞게 기초교육 지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 원조기관들처럼 MDGs 달성의 큰 틀 속에서 KOICA의 교육훈련사업에 성평등(Gender equality), HIV/AIDS, 환경 등의 국제적 이슈를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세부 사업추진 방안

교육 · 훈련분야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추진되어 왔다.

첫째,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 ·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교육 및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지속발전가능성 기반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둘째, 개도국의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무상협력사업의 인도주의 측면을 고려하고, UN의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원조 추세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기초교육분야의 세부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직업훈련

가. 추진전략

□ 중점 지원대상국 설정

직업훈련지원사업이 수원국의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이 지원시설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직업훈련원이 배출한 기능인력이 인근 산업체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훈련지원사업은 일정수준의 산업인프라와 훈련시스템이 구축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급적 대도시 또는 산업단지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별 전략 수립 및 충실한 사전 현지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사업효과의 지속성 유지 방안 모색

직업훈련원 지원에 대한 지속발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적정인력배치, 훈련재정확보, 학사운영, 교재개발 등의 훈련원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산학연계, 졸업생취업지도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지원계획단계부터 훈련원 운영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아울러 물자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여타의 협력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원내용 및 형태 다양화

그간 직업훈련원 건축 또는 시설개선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이외 여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있는 추진으로 지원효과를 제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파견사업과 연계하여 파견 전문가

를 활용함으로써 사업 발굴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중점 지원공과 선정

자동차정비, 전기/전자, 컴퓨터, 섬유분야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신기술 및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원국 산업수요에도 부합하는 세부 분야를 선정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나. 사업수행 형태

□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직업훈련원(자격확인검정센터, 기능대 등 포함) 건립 또는 시설 개 · 보수
  - 개도국의 기술인력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 건축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단위사업 규모를 500만불 규모로 확대
  - 기 지원된 훈련원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 EDCF 지원과의 연계 가능

□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 직업훈련 정책수립 및 제도 구축 또는 개선 지원
  - 선진국에서 많이 수행하는 사업유형
  -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원 가능
  - 프로젝트사업, EDCF 등 후속사업 발굴에 기여
- 관련분야 행정인력 및 교직원 능력 배양 등
  - 직업훈련분야 행정, 제도, 정책, 교수기법 등에 대한 기술 전수

2) 기초교육분야

가. 추진전략

□ 교육여건이 열악한 국가 위주로 지원규모 확대

기초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제분쟁, 재난, 빈곤 등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나 개도국의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초교육은 모든 개도국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며, 협력사업 수행 측면에서도 비교적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는 국제적인 원조추세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 새로운 사업내용 발굴 노력

그간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은 초등교육 시설확충 사업 위주로 수행되었다. 이는 협력사업 중 기초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도 있으나 시설확충 이외에 적정 사업수단을 개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초등교육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유관기관들이 개도국의 정책자문, 제도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교육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개도국 교육분야 지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관심과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나. 사업수행 형태

□ 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초 · 중등학교 건립 또는 시설(기숙사 등 부대시설 포함) 개선
  - 개도국의 기초교육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 총 사업비 대비 교육 · 훈련 사업비중 증대 및 단위사업 규모의 확대 필요
- 빈곤층 여성 또는 아동교육센터 건립(문맹퇴치, 기초기술교육)
  - 빈곤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추진도 검토
- 도서관 등 교육시설기반 구축 지원
  - 시설지원의 다양화 도모

□ 관련 정책, 제도 등 개선

-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 또는 개선 지원
  - 국내 유관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 활용
  - 기초교육 지원형태의 다양화
- 교육분야 행정인력 및 교직원 능력 배양 등
  - 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형식으로 추진

□ 기타

- 지역주민 교육문화센터 지원
  - 초등학교 시설을 기초기술교육 제공, 주민회의 및 문화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Ⅲ.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 훈련분야는 국제적 원조추세에 있어 주요 이슈 분야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무상협력에 있어서도 중점 지원분야로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여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HRD)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꾸준히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무상협력사업 예산 확대에 발맞춰 각 단위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원조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새로운 사업추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분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축적한 유관기관이 협력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수립될 국별 지원전략의 틀 속에서 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내용 및 형태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 또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1)]

1) 참고로 최근 개발사업부에서는 KOICA 주요 지원분야별 개발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사업수요 발굴 및 사업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교육 · 훈련분야 협력사업 지원실적 총괄(1991~2004)〉

(단위: 천불)

연도		총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협력사업 총액(A)		819,005	22,840	29,386	30,448	38,295	49,228	53,741	55,473	38,442	37,930	45,353	54,010	62,070	124,089	177,700
교육훈련 총액(B)		123,021	976	1,165	2,953	5,465	7,239	8,024	8,761	7,251	7,842	11,379	8,475	8,485	24,894	20,112
점유(%) (B/A)		15	4	4	10	14	15	15	16	19	21	25	16	14	20	11
사업구분	프로젝트	82,389	449	476	1,562	4,342	5,615	5,513	6,542	5,770	6,295	9,183	4,168	4,499	17,516	10,459
	개발조사	178	–	–	–	–	–	168	–	–	–	10	–	–	–	–
	기자재 공여	12,272	–	–	326	50	301	411	360	166	305	248	78	286	3,148	6,593
	연수생 초청	12,567	365	310	630	557	557	665	559	361	572	1,067	2,288	1,355	1,717	1,564
	전문가 파견	2,941	15	–	7	47	72	33	128	49	40	63	1,019	804	619	45
	봉사단 파견	9,972	148	379	429	469	636	1,079	906	466	399	539	661	1,202	1,235	1,424
	봉사요원 파견	2,706	–	–	–	–	58	156	264	440	231	270	262	338	660	27
비상지원		–	–	–	–	–	–		–	–	–	–	–	–	–	–
개발사업 총액(C)		224,759	830	1,928	5,719	9,654	13,178	13,306	17,573	13,636	13,116	16,387	12,422	15,849	36,376	54,785
교육훈련 개발사업(D)		82,567	449	476	1,562	4,342	5,615	5,681	6,542	5,770	6,295	9,193	4,168	4,499	17,516	10,459
점유(%) (D/C)		37	54	25	27	45	43	43	37	42	48	56	34	28	48	19

참고자료

〈교육 · 훈련분야 프로젝트/개발조사사업 내역(1991~2004)〉

(단위: 천불)

구분	지역	국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프로젝트	아태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02~05	2,000
			초등학교 건립	03	100
		몽골	국립원거리 교육센터 건립	98~00	340
			한-몽 기술대학 지원	00~01	700
		미얀마	라쇼대학 강당시설 개선	95~96	500
		방글라데시	다카대 한국어센터 지원	97	100
		베트남	빈딩성 초등학교 건축 지원	94~96	250
			하노이,퀴논직업훈련원 지원	94~98	2,500
			네안성 초등학교 건축	95~96	250
			산업기술학교 지원	97~01	5,000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	01~02	2,000
		스리랑카	개방대 한국어교육지원	92~93	120
			아동복지원 지원	93	120
			한-스 직업훈련원 지원	94~96	2,000
			개방대 실습실 지원	96~98	1,000
			자프나기능대학 개선사업	04~07	2,330
		인도네시아	한-인니 직업훈련원 지원	91~94	5,200
			이동식 직업훈련원 지원	94~95	228
		중국	강소성 양주직업학교 지원	95	200
			금평현 민족직업학교 지원	95	340
			도문 제3소학교 지원	95	450
			위해 한국어센터 지원	96	190
			흑룡강성 조선족사범학교 지원	96~97	500
			상해 한국어센터 지원	96~98	900
			한-중 직업훈련원 지원	97~00	10,000
		태국	찬드라카셈대 한국어센터 건립	95	100
			출라롱콘대 한국어센터 건립	95	100
			벽지학생 복지향상 지원	95~96	350
			송클라대 한국어센터 건립	96	100
			치앙마이 한국어센터 건립	96	100
		파키스탄	초등학교 건축 지원	94~96	800
		필리핀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	03~05	5,000
		PNG	카리타스여자기술학교 지원	97~98	250
	미주	자메이카	기술훈련소 지원	91~92	257
		도미니카	1차 초등학교 건립	92~93	585
			2차 초등학교 건립	96~97	600
		과테말라	제1 청소년복지원 지원	93~95	700
			제2 청소년직업훈련원 건립	97~99	500
			제3 청소년직업훈련원 건립	97~99	500

구분	지역	국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프로젝트	미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	03~04	1,200
		파라과이	기술전문학교 지원	96	200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건립	97~99	1,000
		페루	식품기술훈련원 건립	98~00	1,000
		볼리비아	기술교육훈련원 지원	00~02	750
		코스타리카	기술훈련원 지원	00	230
			우에따르노르떼 직업훈련원 지원	04~05	330
		니카라과	벽지농촌 교원주택 건립	97~99	1,000
			직업훈련센터 강화	02~03	383
			국립농업기계화훈련원 현대화	04~05	338
	아프리카	케냐	기술훈련소 지원	91	600
			나이로비공대 현대화	95~96	500
		튀니지	Amira 직업훈련원 지원	94~95	400
			국립직업훈련센터 지원	97~99	1,000
		남아공	기능검정센터 지원	97~01	3,000
		모로코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개선	04~05	500
		알제리	직업훈련원 지원	04~05	1,000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 지원	04~05	800
	중동	수단	한-수 직업훈련원 지원	92~98	4,790
		이집트	Shorabia 직업훈련원 지원	93~95	600
			자동차정비센터 지원	96~99	1,500
			알렉산드리아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04~05	1,800
		팔레스타인	PA 초등학교 증축	97~98	200
			교육시스템 개선	04~05	2,300
		아프가니스탄	공무원훈련원 건립	03~04	6,000
			한-아프간 직업훈련원 건립	03~05	9,000
			한-아프간 직훈원기숙사 건립	04~05	2,027
			파르완주 학교 건립	04~05	800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	03~06	9,000
	구주 및 CIS	러시아	사할린 한인학교 지원	95	200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대 한국어 강좌개설 지원	95~97	150
		우크라이나	Klovsky Lyceum학교 증축 지원	97~98	500
		불가리아	소피아대 한국어과 지원	01	300
		루마니아	Cluj-Napoca기술대 지원	03	220
개발조사	아프리카	튀니지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96~97	168

Ⅱ. 개발협력동향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후속조치

Ⅰ. 핵심내용

□ 12개 지표에 대한 기준선(Baselines) 및 목표(Targets)에 대하여 대체로 합의에 도달(일부 지표에 대하여 미국은 유보적 입장 표명)한 바, 우리나라도 향후 DAC 가입 준비차원에서 파리선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개도국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는 원조효과에 관한 고위급포럼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Ⅱ. 세부내용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2005년 3월 채택)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발원조위원회 원조효과작업반은 7월 7일~8일간 파리선언 이행 점검을 위한 12개 지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12개 지표에 대한 검토

□ 지표1(개도국의 실행가능한 개발전략 수립)과 관련, 최소한 75%의 개도국이 실행가능한 개발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에 합의함.

□ 지표2(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 수립)를 공공재정관리체제와 조달체제로 구분하여

- 공공재정관리체제에 대해서는 50%의 개도국이 CPIA(세계은행이 개도국의 예산 및 재정관리체제를 분석·평가하는 등급)상 최소 1등급(0.5점)을 개선키로 합의하고
- 조달체제에 대해서는 33%의 개도국이 최소 1등급(총 4개 등급 중)을 개선키로 합의함.
- 지표2(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 수립)와 지표5(공여국이 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를 이용)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어 2개 지표를 연계하여 검토한 바, 기준선 및

구체적인 목표에 관하여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커서 논란이 많았음.

- □ 지표3(개도국의 예산에 잡히는 원조흐름)과 관련, 개도국의 정부예산에 기록되는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흐름(분자)이 회계연도에 예정된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흐름(분모)의 98%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함(지표7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표7과 연계하여 검토한 바, 분자 및 분모의 정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음).
- □ 지표4(개도국의 개발전략과 일치된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와 관련, 조정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협력의 규모(분자)가 총 기술협력 규모의 64%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함(미국은 기술협력을 개도국의 능력배양의 대용물로 간주하는데 이의를 제기함).
- □ 지표5(공여국이 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 이용)와 관련
  - CPIA상 5점 이상인(즉, 공공재정관리체제가 양호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공공재정관리체제를 통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흐름을 3분의 2 감축하고 100%의 공여국이 개도국 체제를 이용한다는 목표에 합의함.
  - CPIA상 3.5 내지 4.5인(공공재정관리체제가 보통수준인)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공공재정관리체제를 통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흐름을 3분의 1 감축하고 90%의 공여국이 개도국의 체제를 이용키로 합의함(이에 대하여 미국은 유보적 입장 표명).
- □ 지표6(프로젝트관리사무소(PIU) 병행 설치를 피함으로써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과 관련, Parallel PIU의 정의를 기존 부처/기관의 프로젝트 이행조직과 별도로 설립되는 또는 기존 부처의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으로서 직원들의 보수를 외부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외부의 재정지원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외부기관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조직으로 합의한 후에 이러한 조직을 3분의 2 감축키로 하였음.
- □ 지표7(예측가능한 원조 제공)과 관련, 예측가능성의 정의를 회계연도에 지출(예정된 지출)되는 원조흐름을 분자로 하고, 공여국이 회계연도에 지원을 약속한 원조흐름을 분모로 하여 예측가능성의 목표를 90%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함.
- □ 지표8(Untied aid)은 당초부터 양자간 원조의 불구속성(Untied)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목표에 합의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 지표9(Programme-based approaches에 따른 원조 제공) 관련, 전체 원조흐름 중에서 Programme-based approach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규모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함.
- □ 지표10(공여국의 공통 사절단 파견 및 국가분석작업의 공통실시) 관련, 원조현장에 파견되는 공여국 공통사절단이 전체 사절단의 40%가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공여국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국가분석작업은 전체 국가분석작업의 3분의 2가 넘도록 하기로 합의함.
- □ 지표11(원조성과 평가시스템) 관련, 투명하고 심사가능한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공여국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합의함.
- □ 지표12(상호 책임) 관련, 원조효과에 관하여 공여국과 개도국이 합의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공통으로 평가하기로 한 바, 이러한 평가에 모든 개도국이 참가하기로 합의함.

2. 향후 계획

- □ 파리선언문은 지난 3월 채택 당시, 12개 지표별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하여 DAC의 원조효과작업반으로 하여금 2005년 9월 이전에 합의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31일간 1차 검토를 하였고 이번에 2차 검토를 통해 대체적 합의를 보았음.
- □ 지난번 1차 검토 및 금번 2차 검토에는 OECD 회원국 외에도 12개 개도국 및 WB, IMF, UNDP,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한 바, 금번 합의사항을 파리선언문에 참가한 여타 국가들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문의하기로 하였음.
- □ 또한 파리선언문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2008년도 고위급포럼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개최키로 하였음.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

아프리카 지원에 관한 Camdessus 전 IMF 총재 강연

1. Camdessus 전 IMF 총재(현 프랑스 중앙은행 명예총재)는 지난 5월 31일 프랑스 국제문제연구기관인 미래포럼(Forum du Futur) 주관 하에 'G9 정상회의와 아프리카(L' Afrique a Gleneagles, Sommet du G8)' 제하로 조찬 강연회를 가진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년 G8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의 Blair 총리는 1년 전 '아프리카를 위한 위원회(Commission for Africa)' 를 설립, 아프리카를 비롯한 각 국의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최근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동 보고서는 G8 공식 웹사이트 www.g8.gov.uk에서 다운로드 가능).

□ 상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한 Camdessus 전 IMF 총재는 아프리카 위원회가 권고한 정책들이 2005년 7월 6일~8일간 스코트랜드에서 개최될 G8 정상회담 및 9월 UN 총회, 12월 도하라운드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프리카 대륙이 그간의 혼돈에서 벗어나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2000년 밀레니엄 선언에서 선진국들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이 아프리카 지원에 선진국들이 나서야 할 적기라고 강조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1년 NEPAD(New Parter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를 채택하고 그중 일부 국가는 경제발전, 민주화 및 Governance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바, 그간 논의되어 온 부채탕감과 더불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사회 기반시설 구축에 매년 250억불의 재원이 필요하며, 선진국들은 이러한 재원부담을 위해 GDP 0.7%까지 지원금액을 늘려야 함. 이러한 지원 성과를 2010년에 재평가하여 2015년까지 매년 250억불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영국측은 아프리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각 국가의 경제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프랑스는 각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AIDS 퇴치 및 아프리카 지원 재정 조달을 위해 국제 항공권 1매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일명 국제항공세) 등을 제시, 지지 확보 노력 중임을 설명함.

□ 상기 재정지원과 더불어 Doha 라운드의 성공 및 아프리카 농업 주요 수출상품인 면화, 설탕 등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세 인하와 더불어 선진국들의 자국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해 나가야 함.

2. Camdessus 전 IMF 총재는 아프리카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특히 식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정부 대 정부 간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식수 등이 필요한 마을에 직접 식수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강연 후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 모범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 Camdessus 전 총재는 모잠비크가 최근 10년간 매년 8~9%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가나, 이디오피아, 니제르, 말리, 베넹 등의 국가들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밝힘.

[자료:주프랑스 대사관]

소액신용(Microfinance) 고위급 회의

소액신용에의 접근 확대를 위한 고위급 회의가 프랑스에서 6월 20일(월) 개최되어 빈곤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 민간 금융기관, NGO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하여 총 4개 Session이 진행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핵심요지

□ 동 회의에 참가한 정부기관, 비정부기구(NGO) 및 민간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소액신용이 빈곤 퇴치에 대한 만병통치약(Panacea)은 아니나 유용한 수단임을 인정하며, 천년개발목표(MDGs)를 위하여 동 수단이 확대, 발전되어야 함을 촉구하였음.

□ Chirac 대통령은 이 소액신용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국제적 목표 수립 필요성을 향후 G8 및 UN 정상회담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아프리카와의 연대 없이는 프랑스와 유럽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면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및 對아프리카 개발전략에 있어서의 소액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Ⅱ. 관찰 및 평가

□ 동 회의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소액신용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Chirac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프랑스는 금번 회의 결과를 향후 G8 정상회담 및 UN의 MDG+5 검토회의 등에서 계속 제기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금번 회의에는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 대표단들이 대거 참가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소액신용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 모색과 민간 금융기관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MFIs(소액신용기관: Micro Finance Institutions), NGO와 민간금융기관 간의 활발한 논쟁(이자율 등)이 진행되었으나, 금번 회의는 구체적인 결론 도출보다는 상호 입장파악 및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음. 제도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독일에서 개최될 소액신용회의(6월 22일~23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찰됨.

□ Mr. Jacques Attali(현 Planet Finance(NGO) 대표,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은 프랑스가 현재 ODA의 약 3%를 소액신용분야에 할애하고 있으나 동 비중을 6%로 증대하는 것을 중기적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동 제의는 향후 ODA의 사업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금번 회의를 계기로 소액신용이 ODA의 주요한 사업분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우리의 ODA 계획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Ⅲ. 주요내용

1. 개막식(Opening)

□ Chirac 대통령의 임석하에 프랑스 개발청장(Jean Michel Severino)의 소개로 방글라데시 Yunus(그라민은행 총재)를 포함하여 볼리비아, 모로코, 세네갈 고위급 인사들이 자국의 성공적인 소액신용 현황을 설명하고 소액신용의 확대 및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함.

□ Chirac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 소액신용은 빈곤퇴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MDG 달성을 위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Private Sector와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 G8회담과 UN정상회담에서 프랑스가 소액신용 확대 논의를 주도할 것을 천명하였음.
- 특히 對아프리카 개발에 있어서의 소액신용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對아프리카 원조 확대 및 5개 분야(안보, 보건, 교육, 인프라, 무역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며 향후 G8 회담에서 이를 제기하겠다고 밝힘.

2. Session 1: 소액신용의 수요에 대한 이해와 평가

□ Microsave 등 3개 MFI 대표 패널들은 소액신용 대상자 폭의 확대 및 대상자의 필요(Needs)를 고려한 소액신용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Vulnerable Non-Poor로의 대상자 확대, 농촌지역(Rural Area)의 수요 파악의 필요성
- Lifecycle을 고려한 다양한 소액신용상품(교육, 건강 등) 개발
- NGO, MFI의 능력 향상의 필요성 촉구

3. Session 2: 정부 및 중앙은행의 역할 모색

□ 동 세션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소액신용을 활성화(소액신용의 효율성 증대, 민간기관과의 연계, 제도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부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부터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건전한 금융환경 구축, 금융정보의 제공, 법과 제도의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정부의 보증 등)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4. Session 3 :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모색

□ 동 세션에서는 NGO, MFI와 민간 금융기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민간 금융기관은 소액신용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소액신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및 새로운 투자로서 공식 민간금융기관과 연계, 확대되는 관점을 제시함.

- 특히 Ms. Maria Nowak(Association for the Right to Economic Initiative and European Microfinance Network 대표) 및 Mr. Kimanthi Mutua(K-REP Bank, Kenya)는 소액신용이 과거와 달리 그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동 부문이 공식 금융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민간금융기관과 MFI 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방안(보조금, Regulatory institution의 필요성 등)이 논의됨.

5. Session 4 : 촉매자로서 Donors의 역할

□ 동 세션에서는 정부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 등 Donors의 역할 변화를 논의함.

-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촉진하는 역할(Catalyst)로의 전환
- 소액신용의 재원 확보에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MFI에 대한 Rating(평가), 전문성 확보, 지역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한 자금 유통 강화 등을 언급

□ Mr. Jacques Attali(Planet Finance)는 Planet Finance의 활동을 소개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액신용을 위해 MFIs에 대한 Rating System 개발 필요성, IT기술의 소액신용에의 적용 등을 제안하였음.

□ 프랑스 외무성의 Mr. Philippe Etienne 국제협력국 총국장은 아직 소액신용 분야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공공부문의 역할로 소액신용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법 고안, 공식 금융기관과의 연계 구축 및 재원 확보 증진 등을 제시하며 프랑스 개발청의 사례(소액신용의 Risk 관리 등)를 설명함.

[자료 : 주프랑스 대사관]

ODA 규모 확대 시뮬레이션

1. 금번 UN 정상회의를 앞두고 OECD 사무국이 9월 9일 발표예정인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의 ODA 규모 확대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006년에 970억불, 2010년에 1,270억불(ODA/GNI 비율은 0.36%)이 될 것으로 예상됨(별첨 도표 참조).

□ 2010년도 ODA 규모 1,270억불은 2004년도 ODA 규모 787억불에 비해 약 480억불이 증가될 예정인 바, 이는 금년도 Gleneagles 개최 G8 정상회의시 2010년까지 500억불을 추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근접

2. 상기 ODA 규모는 각국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ODA 확대 공약을 기초로 한 바, 동 확대 공약은 다음과 같음.

□ EU 국가들은 2010년까지 ODA/GNI 비율을 최소 0.51% 내지 최대 1%(EU 평균 0.59%)로 확대하며, 규모면에서는 2004년도 429억불에서 2010년 804억불로 대폭 확대 예정

□ 미국은 2004년도 0.16%에서 0.18%로 약간 높아지나 규모면에서는 190억불에서 240억불로 대폭 확대

□ 일본은 2004년에 89억불의 ODA를 기록하였으나 2005~2009년에 합산하여 100억불을 추가 공여 예정이며, 2010년에 118억불(0.22%)로 소폭 증가 예정

[자료 : 주오이시디 대표부]

참고자료

〈OECD- DAC Secretariat Simulation of DAC Members' Net ODA Volumes in 2006 and 2010 In constant 2004 US$ million〉

The data below are not forecasts, but Secretariat projections based on public announcements by member countries of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The key figures from such announcements are shown as "Assumptions". To calculate net ODA and ODA/GNI ratios requires projections for GNI for 2006 and 2010. For 2006 the projections of real growth for each country are taken from the OECD Economic Outlook No. 77(May 2005) Annex Table 1. For the period 2006- 10, real annual GNI growth of 2% is assumed for all countries. While calculations have been discussed at technical level with national authorities, the DAC Secretariat is responsible for the methodology and the final published results.

20 September 2005

Country	2004		Assumptions	2006				2010			
						Real change in ODA compared with 2004				Real change in ODA compared with 2004	
	Net ODA	ODA/GNI		Net ODA	ODA/GNI	($ m)	Per cent	($ m)	Net ODA	ODA/GNI	Per cent
Austria	678	0.23%	0.33% in 2006 and 0.51% in 2010	1000	0.33%	322	48%	1 673	0.51%	995	147%
Belgium[1]	1463	0.41%	0.7% in 2010	1815	0.49%	351	24%	2807	0.70%	1344	92%
Denmark	037	0.85%	Minimum 0.8%	2037	0.81%	0	0%	2185	0.80%	148	7%
Finland[1] [2]	655	0.35%	0.44% in 2007 and 0.7% in 2010	797	0.41%	141	22%	1475	0.70%	820	125%
France[1]	8475	0.42%	0.5% in 2007 and 0.7% in 2012	9877	0.47%	1403	17%	13885	0.61%	5410	64%
Germany	7534	0.28%	0.33% in 2006 and 0.51% in 2010	9271	0.33%	1737	23%	15509	0.51%	7975	106%
Greece	465	0.23%	0.33% in 2006 and 0.51% in 2010	715	0.33%	251	54%	1196	0.51%	732	158%
Ireland	586	0.39%	0.5% in 2007 and 0.7% in 2012	731	0.44%	146	25%	1072	0.60%	486	83%
Italy	2462	0.15%	0.33% in 2006 and 0.51% in 2010	5537	0.33%	3075	125%	9262	0.51%	6801	276%
Luxembourg[1]	241	0.85%	1% in 2009	275	0.91%	34	14%	327	1.00%	87	36%
Netherlands	4235	0.74%	Minimum 0.8%[7]	4801	0.82%	567	13%	5070	0.80%	836	20%
Portugal[3]	1031	0.63%	0.33% in 2006 and 0.51% in 2010	558	0.33%	-474	-46%	933	0.51%	-98	-10%
Spain[1] [2]	2547	0.26%	0.5% in 2008 and 0.7% in 2012	3446	0.33%	899	35%	6687	0.59%	4140	163%
Sweden	2722	0.78%	1% in 2006	3719	1.00%	997	37%	4025	1.00%	1303	48%
United Kingdom[1] [2]	7836	0.36%	0.47% in 2007-08 and 0.7% in 2013	9553	0.42%	1716	22%	14525	0.59%	6689	85%
EU Members, Total	42966	0.35%		53993	0.43%	11166	26%	80472	0.59%	37667	88%
Australia	1465	0.25%	0.36% in 2010	1768	0.28%	303	21%	2460	0.36%	995	68%
Canada	2537	0.26%	8% annual increase until 2010	2959	0.29%	422	17%	4026	0.36%	1489	59%
Japan[4]	8859	0.19%	See footnote 4	9859	0.20%	1000	11%	11859	0.22%	3000	34%
New Zealand	210	0.23%	0.27% in 2005-06 and 0.28% in 2007-08	262	0.27%	51	24%	294	0.28%	84	40%
Norway	2200	0.87%	1% over 2006-09	2657	1.00%	458	21%	2876	1.00%	677	31%
Switzerland[5]	1545	0.41%	See footnote 5	1596	0.41%	51	3%	1728	0.41%	183	12%
United States[6]	18999	0.16%	See footnote 6	24000	0.19%	5001	26%	24000	0.18%	5001	26%
DAC Members, Total	78780	0.25%		97233	0.30%	18453	23%	127876	0.36%	49096	62%

※ 1) ODA/GNI ratios interpolated between 2004 and year target scheduled to be attained.
2) Finland aim to achieve 0.7% by 2010 'subject to economic circumstances': Spain aim for a minimum of 0.5% by 2008, with the intention then to aim for 0.7% by 2012 : the UK has announced a timetable to reach 0.7% by 2013.
3) Portugal's ODA in 2004 was above trend due to an exceptional debt relief operation for Angola.
4) Japan intends to increase its ODA volume by $10 billion in aggregate over the next five years (2005~2009) compared to its net ODA in 2004. The Secretariat's estimate assumes $1 billion extra in 2006 and $3 billion extra in 2010.
5) Switzerland's ODA will increase by 8% in nominal terms from 2005 to 2008. A new goal will be determined for the following years. The Secretariat's estimate assumes maintenance of 0.41% of GNI in 2006 and 2010.
6) Secretariat estimate based on 2004 ODA plus $5 billion per annum to cover the Gleneagles G8 commitments on increased aid to Africa,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and initiatives on HIV/AIDS, malaria and humanitarian aid.
7) The Netherlands' ODA in 2004 was below its target, as India repaid all its outstanding Dutch aid loans. The Netherlands intends to maintain its target of 0.8% of GNI, on average, over the period 2004~07.

World Bank의 對파키스탄 경제원조

1. 세계은행 Paul D. Wolfowitz 총재는 8월 15일~17일간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Musharraf 대통령, S. Aziz 총리 및 수전력청장 등 주요인사와 면담,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이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평가하면서 지속성장과 경제성장 과실의 공평한 분배가 향후 파키스탄 정치사회 안정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파키스탄의 경제성장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개발, 빈곤퇴치분야 등의 분야에 향후 수년간 매년 약 15억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2. S. Aziz 총리 등은 Wolfowitz 총재 면담 계기에 ①지난 60년대 WB가 인더스강 유역문제를 둘러싼 파키스탄 · 인도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양국간 관계안정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WB가 '제2의 Indus Initiative'를 통해 인더스강 유역 개발을 주도하여 이를 통해 파키스탄 · 인도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망하는 한편, ②파키스탄 경제의 지속성장에 불가결한 에너지 수급문제 등 사회인프라 개발을 위해 향후 15년간 약 100억불 정도의 원조를 WB에 요청함.

- Jatoi 수전력청 장관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더스강 유역에 수십억불 규모의 댐(Bashar댐, Kalabah댐 Project)과 중소 규모 다목적댐 건설계획을 제시하면서 WB의 원조를 요청
- Hafeez 회계감사원장은 파키스탄이 돈세탁방지법 등 국제적인 불법자금유출 방지 체제를 정비 중임을 설명하면서 파키스탄으로부터 불법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WB의 지원을 요청

[자료:주파키스탄 대사관]

스웨덴 대외원조 개관[1)]

Ⅰ. 전략적 맥락과 새로운 동향

1. 스웨덴 개발협력의 전략적 문맥

1) 개발원조의 전통

□ 빈곤국들이 적절한 개발원조를 통해서 빈곤을 감소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개발원조의 절차에 필수적이라는 믿음 하에 스웨덴은 45년 전부터 교회, NGO, 시민참여를 통해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실시해 옴.

□ 식민역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해 왔으며, 유엔 등의 다자간 기구를 지지하여 개도국 사회에서 높은 인정을 받고 있음.

2) 중앙집권적인 개발원조 체계

□ 스웨덴 정부체계는 중앙집권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회가 법률체계를 설립하고 규모가 작고 집중적인 정부부처에서 정책결정을 하며, 매년 정부로부터 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를 수령하는 준독립적 정부기관들이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음.

□ 개발원조 또한 이처럼 정부부처인 외교부(MFA)가 중앙집권적인 개발원조 정책결정 역할을 수행하고 그 시행을 스웨덴 원조기관(SIDA)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2. 국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PGD)

1) 새로운 의회 정책가이드라인

□ 스웨덴 의회가 노르딕 국가 및 발트해 국가 그룹 내, 유럽 내, 국제사회 내에서의 스웨덴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반적 국가정책선언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이 2000년 Peer Review에서 언급되었음.

□ 동 정책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스웨덴 국제개발정책위원회(Globkom)는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보고서는 '책임의 공유:국제개발을 위한 스웨덴의 정책(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이라는 정부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데 기초가 되었음.

□ 동 국제개발정책(PGD) 법안은 추가 개정을 거쳐 2003년도에 승인되었으며, 현재 스웨덴의 개발협력의 초석이 되었음. 동 법안을 통해서 스웨덴은 국제적 개발을 위한 통합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첫 번째 DAC 회원국이 되었음.

2) 국제개발정책(PGD)의 형성

□ PGD는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과 조정,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적 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

- 동 목적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대상으로 세분화되며 천년개발목표(MDGs) 또한 국제개발의 달성을 위해 중심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음.

□ 스웨덴 의회는 PGD의 시행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이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선언하였음.

- 인권 존중에 대한 관점이 정책에 기초가 될 것이나 외교부와 SIDA는 동 '인권관점(Human rights perspective)'이 인권존중협약의 간단한 해석은 아닐 것이라고 다짐하였음.
- 다른 하나의 관점은 빈곤에 대한 관점으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빈곤층의 수요, 이해, 능력, 상황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임.
-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PGD는 여덟 개의 '중점 구성요소(Central component elements)' 들을 위주로 정의되어 있음.
- 중점 구성요소들은 ①인권존중 ②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③성평등 ④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환경보호 ⑤경제성장 ⑥사회개발과 사회안정 ⑦분쟁관리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 ⑧지구공공재(Global public goods)임.

3) PGD 시행의 필수적인 이슈

□ 동 의제가 시행된지 일년이 넘은 현재, 스웨덴은 동 노력의 중요성 및 어려움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정부전체(Whole-of-government)' 를 포괄하는 PGD의 특성으로 인해 초기에는 사무국을 수상실 산하에 두었으나 곧 실질적인 이유로 인하여 외교부 내 개발협력장관 하에 신설된 '국제개발부' 로 이동함.
- 정부연간보고에 보고되었던 PGD 시행과정에 대한 의욕적인 계획들이 방법론적으로 어렵다고 판명되고, 2004년 9월의 보고서에서는 상기 계획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언급됨.
- 개발협력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구조' 설립계획은 정치적, 기술적으로 아직 논쟁 중이며 정확한

1) 본 내용은 DAC Peer Review(2005)를 요약 · 정리한 것임.

결과는 확정되지 않음.

□ 이외에도 상업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 PGD 원칙의 현장이행, PGD 시행에 대한 협력적 환경조성 등 잠재적인 과제가 잔존함.

4) 2000 Peer Review 이후의 진전 상황

□ 많은 DAC의 권고사항이 이행되었으며 이러한 개혁은 PGD에 의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었음. DAC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는 잘 기록되고 높은 정치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아직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할 단계가 남아있음.

□ ODA 수준을 유지할 필요,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적 · 실행적 정확성 향상, 빈곤감소목표에 대한 정확한 선언과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결과중심 모니터링 및 평가의 권장, 현장으로의 권한 이양 등이 DAC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개혁이 이루어진 부분임.

3. 대중적 인식

1) 개발협력의 대중적 · 정치적 지지

□ 오랫동안 지속된 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비슷하게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결과 스웨덴의 개발협력은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앞서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최근의 쓰나미 재해 및 개도국 내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 등으로 인해 대중적 지지도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함.

□ 개발협력에 대한 여론은 매해 SIDA에 의해서 업데이트되며 SIDA의 설문조사는 대중적 지지에 대한 중요지표로 사용됨.

- 2004년도 설문조사 결과, 쓰나미 재해로 인해 긍정적인 인식이 지속됨. 80%가 스웨덴이 빈곤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변, 응답자의 2/3가 개발원조가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한다고 답변함.
- 그러나 현재의 스웨덴 원조규모에 대한 지지는 약간의 하락을 보였고, 회의적인 답변이 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도 등장하였음.

2) 대중적 인식 향상

□ SIDA는 30만불 정도의 예산을 대국민인식 향상 노력에 사용함. 2/3는 NGO의 공공교육 프로그램에, 1/3는 청소년층과 일반대중, 수원국과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SIDA에서 사용됨.

- 2000년 이래 SIDA에서는 MDGs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옴.

□ 외교부에서도 PGD 지지를 위한 대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대중적, 전문적 대화(Public and professional dialogue)' 라는 접근법을 사용함.

- 이러한 접근법과 PGD의 요구로 '국제개발포럼(Forum for Global Development)' 을 설립함. 동 포럼은 독립적인 사무국을 가지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함.
- ①스웨덴 사회 내 담론의 장 활성화 ②다양한 목표와 목적, PGD 연간보고서에 대한 토론진행 ③개발과 일관성 이슈에 대한 폭넓은 토론 형성 ④협력과 조정 ⑤상호적인 배움의 기회 도모 ⑥ PGD 집행에 대한 구체적 제안
- 동 포럼의 개념은 2004년도에 기안되었고, 2005년도에 개최예정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NGO와 상업적 관점을 가져올 민간분야 등, 각 참여자들이 각각의 관점과 안건을 제시하고 그 결과 대중적 인식과 지지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됨.

Ⅱ. 스웨덴의 개발원조 내역

1. 스웨덴 ODA 지원 현황

□ 2003년도 ODA 지원규모: US$ 24억(ODA/GNI 비율: 0.79%)[2]

- 1975년 이후 매해 UN 목표치인 0.7%를 상회함.
- 1990년대 경기둔화 예산제약으로 인해 1999년에 0.7%로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2006년과 2007년까지 1%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예상됨.
- PGD는 GNI 대비 ODA 비율을 1%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지와 대중적 지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의 역사적 사례로 볼 때, 국가경제와 여타 제약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스웨덴 당국은 대중적,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인식함.

2. 2003년 스웨덴 ODA 세부 내역

1) ODA 규모: US$ 24억

- 양자간 ODA: 74%
- 다자간 ODA: 25.9%

2) 유상/무상 규모

- 1970년대 이래로 빈곤국에 대한 차관은 거의 사라졌으며, 양자간 원조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실시함. 2003년 부채탕감 관련 사업은 ODA 총액의 7%에 해당됨.

3) 지역별 지원 현황(양자간 ODA 기준)

□ PGD의 빈곤감소 목표에 따라 스웨덴 ODA는 주로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에 집중됨.

- ODA 총액의 3/4을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 국가에 배분
- ODA의 50% 이상을 아프리카(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배분하고 있으며, 2005년 정부예산

〈상위 10대 수원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명	지원금액	총 ODA 점유율
1	콩고민주공화국	115	11
2	탄자니아	92	9
3	모잠비크	84	8
4	니카라과	65	6
5	아프가니스탄	57	5
6	팔레스타인	52	5
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52	5
8	세르비나 몽테니그로	50	5
9	우간다	49	5
10	방글라데시	37	3
합계		654	61

※출처: OECD/DAC Peer Review Table B.4

2) 2004년 ODA 지원규모 : US$ 27억(ODA/GNI 비율 : 0.77%)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 및 총 ODA 대비 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순위	국명 (1982-83)	%	국명 (1992-93)	%	국명 (2002-03)	%
1	구유고슬라비아	11	탄자니아	7	콩고민주공화국	10
2	탄자니아	9	모잠비크	6	탄자니아	7
3	모잠비크	8	남아프리카	5	모잠비크	6
4	인도	6	베트남	5	니카라과	4
5	잠비아	5	에티오피아	5	아프가니스탄	4
6	니카라과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	팔레스타인	4
7	베트남	5	방글라데시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
8	짐바브웨	5	이라크	4	르비아몽테니그로	3
9	에티오피아	5	앙골라	3	우간다	3
10	방글라데시	3	짐바브웨	3	방글라데시	3
합계		62%		46%		48%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안에 의하면 최저개발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이 더욱 증가할 전망임.

4) 장기협력국(Long-term Cooperation Countries)

□ 스웨덴은 20여개의 장기협력국에 대한 양자 ODA 지원을 집중해왔는데, 최근 10년간 장기협력국의 숫자는 증가추세를 보임.

- 2000년도 Peer Review에서는 장기협력국에 대한 지원감소에 대해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
- 현재 총 수원국수는 2003년 기준 111개국, 장기협력국은 30여개국임.
-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장기협력국 지원을 중단하는 절차는 없으나, 점차적으로 지원규모를 줄이거나 비용분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전환
- 외무부와 ODA 재원을 단기적으로 폭넓게 사용하기를 원함.
- PGD에서는 실리적인 이유에서 수원국의 숫자를 감소해야 한다고 나타남.

□ SIDA에서는 현재 장기협력국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항목을 논의하는 단계임.

- 저소득국가, 빈곤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한 국가 개발의제의 유무, 스웨덴 개발가치(Value)와의 일치,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반부패, 스웨덴 원조로부터의 잠재적 부가가치 등이 고려대상임.
- '취약국(Fragile state)' 지위 또한 고려대상이며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규적인 평가를 강조함.

〈장기협력국 목록〉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케냐,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는 단계적 철수단계이고 짐바브웨에 대한 지원은 잠시 중단중임).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베트남
라틴아메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볼리비아
유럽: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루지야, 몰도바(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몽테니그로에 대한 지원양은 많지만 이들 국가는 장기협력국은 아님).

5) 분야별 지원 현황

□ 스웨덴 양자간 분야별 지원은 사회 인프라 및 긴급원조에 집중

- 사회 인프라 분야 지원비중은 DAC 평균과 유사
- 긴급원조 분야 지원비중은 24%로 DAC의 평균인 8%를 크게 상회함.
- 분야별 지원결정은 파트너십 약정에 따른 수원국의 수요에 따른 것임.
- 전체적으로 분야별 배분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경향을 보임.

□ 2003년 기준 스웨덴 양자 ODA의 18%(US$ 2억 6천만)가 NGO지원으로 배분됨.

- 현재 스웨덴 NGO는 정부로부터 사업기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체 사업비의 상한성이 10%임.
- 현 스웨덴 NGO의 자체 기금은 US$ 2억 5천만에 달함.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분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 (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교육 (기초교육)	8(2)
	보건 (기초보건)	4(3)
	인구	3
	식수 및 위생	3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	8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6
소계		33
경제인프라 (Eonomic Infrastructure & Services)	교통 및 통신	4
	에너지	1
	기타	1
소계		11
생산 (Production)	농업	5
	제조업, 광업 및 건축	2
	무역 및 관광	1
소계		6
다부분(Multisector)		8
프로그램 원조(Programme Assistance)		5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		19
긴급원조(Emergency Assistance)		8
행정성 경비(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		5
NGO 지원(Core Support to NGOs)		4
합계		100

※출처:OECD Peer Review 2005, Table B.5

6)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Channel)

□ 2003년도 기준 스웨덴 다자간 원조 비율은 25.9%이며, DAC 평균은 24%임.

- 적은 수의 기구에 분담을 집중하고 다자간 원조를 증가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임.
-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UN을 신뢰하고 지지해왔으나, 동시에 효율성과 조직개혁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왔음.
- 지난 Peer Review에서는 스웨덴이 명확한 다자전략을 갖도록 권고받았으며, SIDA에서 현재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중임.

□ 2003년 기준 스웨덴의 UN 분담금은 US$ 1억 880만이며 총 ODA의 10%로서 DAC의 평균인 6%를 상회함.

〈2002~2003년도 스웨덴의 UN 기구 분담금 현황〉

UN 기구	%
유엔개발계획(UNDP)	20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15
유엔아동기금(UNICEF)	15
세계식량계획(WFP)	10
유엔인구기금(UNFPA)	10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9
기타 유엔기구	21
합계	100

□ 스웨덴은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을 지지하며, 2002년도에는 US$ 5억을 출자하였음.

□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에 대해서는 2003년 기준 US$ 1억 8만, 총 ODA대비 6%을 출자하였으며, 이 수치 역시 DAC의 평균인 2%를 상회하는 것임.

-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의 1/4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출자되었으며 스웨덴은 AfDB의 6번째 공여국임.

□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에 대해서는 DAC의 평균인 8%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5%(US$ 1억)임.

Ⅲ. 스웨덴의 지원분야 우선순위 및 특수 사안

1. 의회의 역할

□ 스웨덴의 국제개발정책(PGD)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스웨덴 정부의 모든 정책분야에도 적용되며 지원분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

2. 빈곤감소와 천년개발목표(MDGs)

□ 빈곤감소는 이제까지도 스웨덴 개발협력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나, PGD는 보다 명확하게 스웨덴 개발협력의 목표는 "빈곤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지원"하는 것이라고 단언함.

□ MDG는 PGD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스웨덴은 MDG 캠페인을 벌이고 ODA를 증가시키며, 원조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빈곤국들의 부채를 탕감하고, 보건분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UN의 MDG 목표를 달성한 몇 안되는 선진국 중의 하나임.

3. 분야별 우선순위(Sector Priorities)

□ PGD에 의하면 8개의 중점구성요소(Central component element－인권, 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 성평등, 천연자원과 환경보호, 경제성장, 사회개발과 안보, 분쟁관리, 지구공공재)가 정해져있으며, 이중 6개의 분야는 이미 스웨덴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이었으므로 현재의 정책 및 전략과 크게 어긋나지 않음.

□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중점분야인 분쟁관리와 지구 공공재 분야를 강조하고 있음.

- 종종 무력분쟁이 빈곤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
- 지구공공재는 스웨덴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창한 지구공공재 국제작업반(International Task Force on Global Public Goods)[3] 의 핵심주제임.

3) 지구공공재 국제작업반 (International Task Force on Global Public Goods)의 목적은 지구공공재 및 지역공공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정의를 명료화하며, 어떤 공공재가 예산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함. 스톡홀름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2003년 SIDA 분야별 지원 실적〉

주요 분야	분량	%
사회분야	372	28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	363	27
인프라, 민간분야, 도시개발	262	19
천연자원	153	11
기타	199	15
합계	1349	100

※SIDA는 교육, 의료, 생식보건, 식수, 위생, 문화, 미디어는 모두 사회분야로 포함함.

□ SIDA와 외교부는 내부적 분야별 우선순위를 각각 가지고 있음.

- 외교부 : HIV/AIDS, 생식보건, 분쟁관리, 마약근절
- SIDA : HIV/AIDS, 반부패
- 외교부와 SIDA가 공동으로 PGD에 근거하여 분야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권장됨.

4. 특수 사안(Special themes)

□ 민간부문, HIV/AIDS, 인도주의적 원조 분야는 특수한 관심분야로 지정되어 검토 중임.

1) 민간부문 개발

□ 스웨덴은 민간부문 개발을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핵심요소로 간주, 공정한 재원분배와 부패척결이 동반될 때, 민간부문개발이 장기적인 국가경제 안정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의견임.

□ 2003년에 '빈곤층을 위한 시장건설(Making Markets Work for the Poor),' 'SIDA의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정책가이드라인(Policy Guidelines for SIDA's Support to Private Sector Development)' 을 발간, 빈곤층을 위한 시장과 민간부문개발에 대해 노력함.

□ 또한 '스웨덴 통상입구 개방(Open Trade Gate Sweden)' 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개도국 기업에게 스웨덴과 유럽연합시장에 대해 유익한 무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HIV/AIDS

□ 2004년도 스웨덴 정부는 HIV/AIDS 문제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 천명

□ HIV/AIDS 문제는 인권관점과 전 세계 인구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그럴만한 보호책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함.

□ 유엔인구기금, 유엔에이즈,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과 같은 유엔기구와 에이즈 · 결핵 · 말라리아 국제기금(GFATM : Global Fund for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다자간 원조를 증액하고 양자간 원조에서도 HIV/AIDS에 대한 지원 증가

□ 사업수행과 공여국들의 조정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스톡홀름에 HIV/AIDS 대사를 임명하였고, SIDA는 HIV/AIDS 그룹을 창설하였음.

3) 인도주의적 원조와 분쟁관리

□ 스웨덴은 2003년 기준 긴급구호에 US$ 3억 150만을 배분함.

□ 2004년에 스웨덴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 및 인도주의 국제법, 인도주의적 공여정신의 원칙과 모범관행(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에 기반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책, 분쟁예방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은 인도주의적 원조 정책문서(Policy document)를 생산함.

□ 조직체계로는 외무부는 정책개발 및 인도주의적 원조 조정을 담당하고 SIDA가 집행과 후속조치를 담당함.

- SIDA 내에서의 인도주의적 원조는 NGO 협력 및 인도주의적 원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원조의 중요성이 스웨덴 내에서 강조됨에 따라서 외무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전달하고 2주에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있음.

□ NGO들과 다른 집행기관들은 스웨덴의 재정지원이 신속하고 유연하다고 평가함. 다년 재정지원도 가능하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NGO들이 긴급하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할 때 절차상의 지연이 없도록 '신속대응기금(Rapid response funds)' 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함.

□ 스웨덴은 무력분쟁과 개발협력 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쟁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정의, 개발하고 있음.

- 2004년 스웨덴 외무부는 무장해제 등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법을 강화하기 위한 '무장해제(Disarmament), 군대해체(Demobilization), 재통합(Reintegration)에 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를 발안하였음.

Ⅳ. 개발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1. 개발정책일관성에 있어서 스웨덴의 역할

1) 정책일관성에 대한 합의 증가

□ OECD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지속적인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회 · 환경 정책이 일관되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함을 인식, 2002년에 개발의제 공유 행동(Action Shared Development Agenda)을 채택함.

□ '개발정책일관성의 강화' 는 진화하는 국제경제 안에서 개도국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진국 내에 다양한 이해 그룹과 정부부처들이 있으므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음.

□ 스웨덴은 유럽연합(EU) 가입 전에도 수출 보조금이 없는 자유로운 통상경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 농업, 통상 시스템을 개방하고 개도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특별조항 개설 등을 위해 노력 중임.

□ 스웨덴은 정책일관성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이며 2003년 12월 의회가 PGD를 승인함으써 초국경적인(Trans-boundary) 이슈를 다루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함.

□ 그러나 스웨덴 사회 전체에서 이러한 접근법을 승인하고 있지는 않음. 오히려 개발정책일관성에 대한 옹호론이 오랜 기간동안 중요하게 고려되어 옴에 따라 반대측면을 강조하는 공적인 논의도 활발해져옴.

- 스웨덴의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가 큰 만큼 상호호혜적으로 스웨덴의 국가적 이익에도 대응하는 개발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존재함. 이러한 여론의 추이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잠재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임.

2. 스웨덴 개발정책일관성에 대한 잠재적 이슈들

1) 무기 수출(Arms Exports)

□ 2003년 기준 스웨덴 무기 수출량은 US$ 8억에 이르고 스웨덴은 1999~2003년 평균으로 무기 공급 세계 11위를 차지

□ 무기에 관한 현 스웨덴 법률은 1993년에 제정된 것으로 1980년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임. 안보정세의 변화와 1995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스웨덴 정부는 변화를 감안하여 무기수출에 대한 법률개정을 시작, 2005년에 관련 보고서가 나올 예정임.

□ 2003년 12월에 스웨덴 의회가 PGD를 승인했을 때, 무기수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민주주의 항목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 무기 수출 원칙은 전쟁 중인 국가 및 인권 유린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의회 또한 무기 수출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해 빈곤과 개발협력에 대한 고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외교, 국방정책에 관련해서는 무기 수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원칙도 가지고 있음.

□ 2000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전투 비행기를 수출했던 전력 및 칠레, 필리핀, 브라질에 대한 무기 수출 계획 등은 상대 국가들의 빈곤,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음.

- 전시 중인 국가, 비민주 국가, 빈곤국가, 인권 유린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은 단기적 국가이익과 상충할 시 준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다수임.

□ NGO들은 이러한 무기수출정책이 국가사업이익을 빈곤층의 이익 및 권리보다 우선시하며 따라서 국가정책인 PGD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함.

- PGD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NGO에서는 '주의원칙(Caution principle)' 을 제안함.
- '주의원칙' 이란 빈곤층의 이익 및 권리와 잠재적으로 상충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임.

2) 이주(Migration)

□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스웨덴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 스웨덴 인구의 12%를 차지함.

- 스웨덴 법은 1951년 난민지위 UN 협약과 일관된 기준으로 망명지위, 난민지위 부여
- 스웨덴은 UNHCR 기준 난민할당수를 채우는 15개 국가 중 하나임.
- 스웨덴은 전반적으로 너그러운 이민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NGO 등은 실질적으로 스웨덴 이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을 비판함.

□ 스웨덴은 이주문제가 개발 이슈임을 인지하여 PGD에서 난민, 이주, 이주민 정책에 대해 다뤄짐.

- 이주 · 망명 정책 부처가 개발협력부처와 같은 부처 안에 존재하여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아직 개발협력과 이주문제의 연관성이 확실하지는 않고 외무부 및 SIDA에서는 개발원조의 사용으로 PGD와 관련하여 이주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정책선언은 아직 하지 않고 있음.

3) 언타이드 원조(Untying)

□ PGD에서는 원조를 비조건부화(Untying)함으로써 원조의 효과가 향상될 것이며, 이는 유럽연합과 OECD에서 합의된 조치를 통해서만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함.

- 스웨덴은 'Nordic Plus'[4]그룹 국가들과 함께 적당한 구매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구매비용을 완전히 비조건부화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
- 최근 DAC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은 양자원조의 96%를 언타이드로 지원하여 가장 언타이드 비율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임.

□ 스웨덴 민간분야는 사업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언타이드 원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함.

- 스웨덴 정부가 지난해 동안 실시한 언타이드 원조 노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DAC는 스웨덴이 더욱 언타이드 원조를 확대하기를 격려하며 원조효과성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효과 및 개도국에 대한 스웨덴 수출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권장함.

3. 개발정책일관성 향상

1) 제도적 구조

□ 스웨덴 정부는 PGD의 승인 이후에 바로 정책 집행에 착수하였고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함.

- '정부 전체' 접근법을 위해서 수상실 내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외무부 내의 국제개발부서의 책임으로 결정됨.

□ 동 조직적 체계 내에서는 다른 부처의 PGD에 대한 협조와 주인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범부처 간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농업과 통상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들이 외무부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짐.

2) 분석

□ 스웨덴은 PGD에 후속조치를 취하고 잠재적인 일관성 이슈들을 선별할 체계적, 조직적 분석능력이 아직 부족함.

□ 전 정부 부처에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을 외무부나 SIDA의 외부에 설립하는 것이 권장됨.

□ PGD에서는 또한 국제개발협력을 평가할 독립기관을 만들어 매년 SIDA의 사업을 평가하도록 함.

- 본 Peer Review에서는 SIDA는 이미 뛰어난 평가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SIDA 내의 평가와 중복되며, 그 기관이 PGD 시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4) 'Nordic Plus' 그룹 국가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Ⅴ. 개발협력 조직 및 운영

1. 조직

1) 현 개발협력 조직 배경

□ 현 개발원조 체계에서 결정권은 스웨덴 의회에서 정부로, 외무부에서 SIDA로 이어지며 외무부와 SIDA가 정책 집행을 담당

- 현 형태는 몇 세기에 걸쳐 내려온 스웨덴 정부형태에서 유래된 것으로 외무부와 SIDA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임.
- PGD가 점차 실행됨에 따라서 원조제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고 부가적인 개혁이 있을 예정임.

2) 개발원조 관련 조직별 임무 및 집행 방식

□ 외무부는 정책형성 및 다자간 원조 집행의 책임을, 스웨덴 원조기관인 SIDA는 양자간 원조 집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공기관 및 NGO 등이 개발원조에 관여하고 있음.

□ 외무부는 개발협력 국가 정책을 비롯하여 원조 관계자 간 조정 및 총 ODA의 37%에 해당되는 다자간 원조를 책임지고 있음.

- 외무부는 이후 '취약국(Fragile state)' 에 대한 양자간 원조 및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양자간 원조 방식에 대해 더욱 역할을 강화할 전망임.
- 외무부 내에 외교, 개발협력, 이주 관련 세 명의 장관이 있으며 개발협력은 외무부 내 국제개발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음.
- 외무부는 이외 102개의 대사관, 대사 및 영사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음.

□ SIDA는 양자간 원조 주요 기관으로서 1995년에 5개의 원조 관련 기구의 통합으로 설립됨.

- SIDA 이사회 의장인 Director-General이 기관의 장이 되며 5개의 지역부서 및 4개의 분야별 부서, 전략적 조정 기능 등의 '기획/총무 기능'을 담당하는 7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음.
- SIDA의 스톡홀름 본부 직원의 절반은 분야별 부서에 배치됨.

□ 재정부는 외무부와 협조하여 국제금융기구들을 위주로 관여하고 있으며, 스웨덴 중앙은행이 세계은행 및 IMF 와 협력하고 있음.

- 재정부는 전체 ODA 예산 중 12% 정도를 관리하며 유럽재건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부채문제, 예산지원 사안에 관련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과 협력함.
- 스웨덴 수출신용보장이사회(EKN : Swedish Export Credit Guaranteer Board)는 산업통상부처의 산하에 있으며 SIDA를 대신하여 ODA의 7%를 관장함.

□ NGO들은 개발사업 집행, 여론 형성, 개발인식 증진 등의 측면에서 스웨덴 개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PGD는 특히 NG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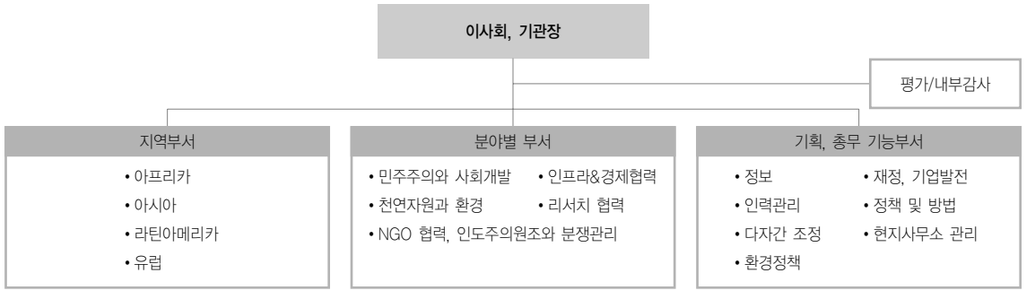
- 스웨덴 NGO는 SIDA에서의 무상원조 금액 지원 및 외무부 지원 등을 통해 총 스웨덴 ODA의 1/5정도를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를 통해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 독립적인 정책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외무부 국제개발부 조직도〉



※출처: 스웨덴 외무부

〈SIDA 조직도〉



– 현재 SIDA는 NGO들과 14개의 협력약정을 맺고, 750여개의 스웨덴 NGO와 1500개의 개도국 NGO들의 사업을 재정지원하고 있음.

2. 운영(Management)

1) 리더십과 품질관리(Quality Control)에 기반한 운영철학

□ SIDA는 원조 집행 역할에 충실하게끔 운영철학을 발전, 직원들에게 교육시켜 왔음.

– 직원들의 역할은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접근법에 기반하고, 수원국과의 대화를 강화하여 수원국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림.

– 운영절차 향상 및 간소화를 진행하면서 품질보증의 개념을 도입, 강화하였음.

2) 전략과 프로그램 운영

□ 스웨덴은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책선언을 출간하고 대중 및 의회에 배포함.

□ SIDA는 원칙적으로 정책형성기관은 아니지만 의회 및 정부가 만든 정책 집행에 관련되어 공식 성명을 많이 발표하였음.

– 2004년에 특히, SIDA에서 '정책과 방법(Policy and methodology)팀' 이 개설되어 정책 및 방법론에 대한 SIDA의 업무 조정과 현장사무소 및 SIDA 부서에서 제기되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 중임.

□ SIDA의 사업수행은 국별, 지역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국별 · 지역별 전략은 현장의 SIDA 직원과 대사관, 수원국 정부 직원 및 다른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형성됨.

– 스웨덴이 특별히 빈곤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전략은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페이퍼(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와 연관되도록 형성됨

– 정부는 대략적인 전략을 결정하고, 전략에 관련한 세부 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서는 SIDA에 권한을 이양함.

– 때로는 수원국과 직접 체결한 '개발협력약정' 이 국별 전략을 보완

□ 전략을 집행하는 첫 단계가 지역별, 국별 기획임.

– 3년간 예산이 기획되며 SIDA의 직원과 대사관 직원의 협의 하에 매년 국별, 지역별 기획이 업데이트됨.

– 사업 집행상 필요한 사항(우선순위 및 사업 크기, 정책대화 및 조정, 평가기획, 재원기획 등)이 결정되며 현장에서 사업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지침이 되는 문서임.

– 현장에서는 매년, 혹은 일년에 2번씩 국별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부에 피드백을 전달함.

□ 사업수행의 가장 후기 단계는 '사업운영(Contribution management)' 으로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원을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단계임.

3) 모니터링과 평가 운영

□ PGD에 의해서 스웨덴 개발원조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음.

– MDGs의 여덟 번째 목표(개발원조 국제파트너십 형성)에 기준하여 스웨덴의 원조방식을 검토하고 개별 수원국 내 빈곤에 대한 원조 효과를 정기적 평가하고, 수원국 자체의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해야 함.

□ 매년 PGD 정책 수행에 대한 진행보고서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4) 인력관리

□ 스웨덴 원조 체계 내에서 체계적인 인력관리계획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발원조 관련 인력이 주로 SIDA에 집중해 있음.

□ SIDA의 직원수

– 총 864명(733명 직제)

– 171명은 수원국 위치 스웨덴 대사관 근무(20%)

□ 개발관련 인력수

– 외무부/국제개발부 : 66명(총 외무부 인력의 7%)

– 재정부/국제금융과 : 7명

□ 현장으로의 권한이양이 강조되고 있고, SIDA 내에서도 본부직원과 현장 직원의 이상적인 비율을 검토 중임. 본부 직원이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

Ⅵ. DAC의 권고사항

□ 스웨덴은 PGD의 실행경험에서 의회의 역할 및 지구적 의제에 대한 정부전체의 주인의식을 장려하는 운영접근법 등의 경험을 다른 공여국들과 공유할 것

□ 현재의 개도국에 대한 우선순위는 대중적, 정치적 지지가 필요함. 현재 국제개발포럼(Forum for Global Development)는 정부고위급 차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한 가지 안이며, MDGs의 달성 등 국제적 성과에 대해서 스웨덴 대중에게 홍보하는 정부의 역량도 필요할 것임.

□ 스웨덴은 또한 GNI 대비 ODA 규모 목표치를 1%로 유지해야 함.

□ 스웨덴은 PGD와 일관되게 지역과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 집중하는 현재의 전략을 지속해야 함.

□ 외무부는 SIDA와 함께 좀 더 명확한 다자간 원조전략 및 이들 다자간 기구에 대한 개입의 근거로서 성과추적 시스템(performance tracking system)을 개발할 것이 권고됨.

□ 스웨덴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공여국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발정책일관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분석하고, 또한 동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발굴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개발할 것이 권장됨.

□ PGD 정책 일관성 실행을 위해, 신뢰성 있고 고차원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해야 함.

□ 외무부가 PGD에 근거하여 새로운 평가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므로, 현재 원조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정부전체적 접근법과 일관성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함.

□ 외무부와 Sida는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팀제를 장려하기 위한 운영관계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임. 권한이양은 원조체계상 중요한 새로운 방향이며, 스웨덴은 개도국 현지에서의 운영에 대해 규칙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함. 또한, 대사관 차원에서의 지역적 전략비전을 구축하는 것도 운영효율성에 기여할 것임.

□ 정부가 PGD를 시행에 옮김에 따라,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양 및 절차 간소화, 시스템 투명성 및 효율성에 기여하도록 시스템이 간소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인력문제도 급선무임. 정부와 SIDA에서 현장에서 운영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개발관련 인력의 규모, 형태, 기술기반 및 위치에 대해서도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음.

□ 원조조화 및 일치에 대한 스웨덴의 접근법은 무척 진보해있으며, 다른 DAC 회원국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공여국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할 것이 권장됨.

□ 스웨덴은 성과측정방법에 대해서 현재 개혁을 검토 중임. 모니터링, 평가, 성과관리접근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하도록 권장됨.

□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원조정책은 좀더 운영의 정교화가 필요함. 외무부는 시민보호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인도적 원조 예산 가이드라인의 부정적 효과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SIDA 또한 현행 전략과 입장진술서 등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전략을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음.

□ 외무부는 하나의 행정단위를 통해서 인도적 다자원조를 관리하고, 또한 Sida는 인도적 원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적 원조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뉴질랜드 대외원조 개관[1)]

Ⅰ. 뉴질랜드 원조 개요

1. 뉴질랜드의 원조 목표 및 방향

1) 정책 기조

□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궁극적 목표로 '빈곤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 지향'(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free of poverty) 및 5개년 전략(the Five Year Strategy/2004. 5~2009. 10)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음.

2) 주요 정책 방향

□ 개도국의 빈곤해소

□ 신정책체제(New Policy Framework) 및 태평양 지역 전략보고서(Pacific Regional Strategy Papers)의 틀 안에서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와 MDGs의 통합 노력

□ 국별 빈곤분석 및 프로그램 전략에 기초한 양자간 원조 실시

□ 태평양 지역의 개도국 중점 지원

□ 각 개도국의 특이한 상황을 고려, 기초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별 교육전략 개발

□ 인권, 성평등 및 환경문제의 주류화

□ 뉴질랜드 ODA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한 감시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 등

2.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 현황

□ 2004년 NZAID(뉴질랜드 국제개발청)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의 76%가 대 개도국 원조를 지지하고 있으며 동 지지자 중 61%가 GNI 대비 0.7% 수준으로 원조예산 증액을 하는데 찬성하였음. 그러나 NZAID의 활동 및 실적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30% 정도로 낮은 수준임. 또한 원조가 테러 및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원조우선 대상국으로는 태평양지역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원조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그 이유로 국내 빈곤층에 대한 우선 지원 및 개도국의 부패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들고 있음.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원조사업을 지지하였으나 정부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60%가 의구심을 나타냄.

1) 본 내용은 DAC Peer Review(2005)를 요약 · 정리한 것임.

Ⅱ. 뉴질랜드 원조 현황

1. 최근 뉴질랜드의 ODA 지원 현황

□ 2003년도 ODA 규모 : US$ 165백만(ODA/GNI 비율 : 0.23%)

- 2003년 ODA 총액기준으로 DAC 22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DA/GNI 비율 기준으로는 16위임(DAC 회원국 평균은 0.25%)
- 2003년 원조액은 전년 대비 43백만불(35%) 증가하였으나 장기적 예산규모 확대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왕성한 경제성장률에 비해 ODA 증가율은 저조한 편임.
-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적 원조규모 확대 목표는 유엔 권고수준인 ODA/GNI 비율 0.7%이나 현재 구체적 중장기 계획은 부재하며 동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미약한 실정임.

〈뉴질랜드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US$ 백만)

구분	ODA	ODA/GNI
1999년	134	0.27
2000년	113	0.25
2001년	112	0.25
2002년	122	0.22
2003년	165	0.23

※ 자료: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4

2. 2003년 뉴질랜드 ODA 세부내역

1) ODA 규모 : US$ 165백만

- 양자간 ODA 규모 : US$ 129백만(78.18%)
- 다자간 ODA 규모 : US$ 36백만(21.82%)

□ 뉴질랜드는 지정학적 특성상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평화구축 및 분쟁예방을 위해 취약국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가 지원한 과거의 주요 수원국이 남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2002~2003년 이라크에 대한 원조와 최근 남아시

〈2002~2003년도 상위 10대 수원국 지원 규모 및 점유율〉

(단위:US$ 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03년 평균)	총 ODA 대비 점유율 (2002~03 평균)
1	파푸아뉴기니	6.9	4.8%
2	니우	5.9	4.1%
3	이라크	5.8	4.0%
4	토켈라우	5.3	3.7%
5	솔로몬 군도	4.8	3.3%
6	사모아	4.8	3.3%
7	인도네시아	4.6	3.2%
8	바누아투	4.0	2.8%
9	통가	3.7	2.6%
10	쿡아일랜드	3.0	2.1%
합계		48.8	33.9%
ODA 총규모		144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 및 총 ODA 대비 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순위	국명 (1982-83)	%	국명 (1992-93)	%	국명 (2002-03)	%
1	쿡아일랜드	12.6	쿡아일랜드	7.6	파푸아뉴기니	4.8
2	니우	7.3	사모아	7.0	니우	4.1
3	인도네시아	7.1	피지	6.8	이라크	4.0
4	사모아	5.6	통가	4.1	토켈라우	3.7
5	피지	4.2	니우	4.0	솔로몬 군도	3.3
6	통가	2.8	파푸아뉴기니	3.4	사모아	3.3
7	파푸아뉴기니	2.8	토켈라우	3.3	인도네시아	3.2
8	토켈라우	1.8	인도네시아	2.8	바누아투	2.8
9	필리핀	1.6	솔로몬 군도	2.6	통가	2.6
10	태국	1.5	바누아투	1.5	쿡아일랜드	2.1
		47.3		43.1		33.9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아 쓰나미 긴급재해구호를 위한 예산 배정으로 총 ODA 중 인도적 원조 자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유상/무상원조 규모

- 무상원조(Grants and grant like contribution) : US$ 165백만(100%)
- 유상원조(Development lending and capital) : US$ - (0%)

※ 뉴질랜드의 모든 ODA 예산은 무상원조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3) 지역별 지원 현황

□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지역 19개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국 등에 집중되어 있음.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1999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라크 원조규모의 증대로 최근 중동지역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었음.

□ 주요 수원대상국이 주로 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들이나 전체 수원국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상위 20개 수원국에 대한 원조 비중이 1992~3년 96%에서 1997~8년 86%, 2002~03년 79%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원국 수는 각 66개국, 92개국 및 100개국으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유럽	-	0.2	0.0
사하라이북 아프리카	0.0	0.0	0.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4	2.1	9.1
북중미	0.1	0.4	0.7
남미	0.1	0.4	1.7
중동	0.0	0.0	6.7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1.5	0.9	6.0
극동아시아	14.3	12.1	18.5
오세아니아	83.6	83.8	57.3
합계	100	100	100

※자료: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4)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LDCs)	17.0	29.4	37.4
기타저소득국(Other LICs)	18.3	13.4	19.6
중저소득국(LMICs)	41.0	41.2	37.2
고중소득국(UMICs)	23.4	15.5	5.7
고소득국(HICs)	-	-	-
MADCT[1]	0.4	0.5	-
합계	100.0	100.0	100.0

주1) MADCT: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자료: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5) 2003년도 분야별 지원 현황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분야		2003년도
사회 및 행정 인프라[1]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	23.8(2.7)
	보건(기초보건)	5.6(4.2)
	인구	0.6
	식수 및 위생	1.0
	정부 및 시민사회	8.6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7.7
소계		47.4
경제인프라[2]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1.1
	에너지	0.6
	기타	1.9
소 계		3.6
생산(Production)	농업	2.6
	제조업, 광업 및 건축	0.4
	무역 및 관광	1.2
소 계		4.2
다부문(Multisector)		5.1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8.7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3]		-
긴급원조(Emergency aid)		13.2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8.1
기타(Unspecified)		9.8
합 계		100.0

주1) 학생 및 연수생 포함
2) 인구 및 생식보건
3) 비ODA 부채탕감 포함

※자료: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19

□ 빈곤감소를 위해 사회 및 행정 인프라 부문에 ODA를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음.

〈분야별 지원실적 추이〉

(단위:%)

지원년도	1982~83	2002~03
사회/행정 인프라	22.4	47.8
경제 인프라	27.3	4.0
농업	16.8	2.6
산업/기타생산	3.7	1.8
물자/프로그램지원	24.2	7.4
긴급지원	2.1	12.7
기타	3.5	23.7

※자료: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18

Ⅲ. 주요 의제별 정책

1. 빈곤감소

1) NZAID(뉴질랜드 국제개발청)의 설립과 빈곤문제의 중점화

□ 2002년 NZAID가 설립되면서 뉴질랜드 ODA 사업의 최대 핵심과제로 빈곤감소가 부각되었고 '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free from poverty' 및 기타 정책 보고서와 전략 등에서 빈곤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을 명시함.

□ 빈곤감소를 위해 NZAID는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과 함께 국가 · 지역 ·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의 틀을 확립하고 다양한 직 · 간접 원조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개도국의 교육, 보건, 생계유지 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 문화적 · 환경적 · 경제적 여건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생계의 촉진

▫ 태평양 연안 개도국에 대한 경제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뉴질랜드는 건실하고 역동적인 민간부문의 장려가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빈곤감소를 위해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음.

▫ 빈곤감소를 위해 거시 및 미시적 수준을 포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 정책에는 경제성장, 민간부문강화, 식량안보 및 무역 등의 주요 이슈들이 포함됨.

3) MDGs 달성 노력

▫ 뉴질랜드의 IDTs(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와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은 정책기조인 '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free of poverty'에 융해되어 있으며 수원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

▫ 분야별 원조를 하는 NZAID는 원조 목표설정과 효과분석에 MDGs를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나 MDGs 달성을 위한 ODA의 규모 증가의 국제적 움직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2. 교육부문 지원

▫ 교육분야는 뉴질랜드의 양자간 ODA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분야로서는 최대 규모임. 그동안 장학금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지원에 집중해 왔으나 2000년 동료 심사에서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 초·중등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1) 수원국의 교육제도 개선 지원

▫ NZAID의 교육정책 방향은 기초교육 및 고등교육의 균형있는 지원이며 특히 교육에서의 성평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아래의 4가지 원칙을 교육분야에 대한 우선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음.

① 교육은 기본적 인간의 권리임.

② 교육은 그 자체로서 목적임.

③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장과 '만인을 위한 교육' 달성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④ 교육은 빈곤근절, 효과적 거버넌스와 리더십 그리고 기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 최근의 교육분야 지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Sector wide approaches(SWAp)의 틀 속에서 광범위한 교육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임. 새로운 교육정책에서는 "교육분야 육성을 위한 전략은 있으나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수원국가에 대해서 재정지원, 기술지원, 장학금지원 및 연수를 통한 직접적 원조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효과적인 장학금 제도 개발

▫ 장학금 지원은 NZAID 교육부문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 20년간 양자간 ODA의 30%에 달함.

▫ 장학금 지원 규모 대비 효과에 대해 2001년 장관 심사에서 아래의 비판과 권고사항들이 제기된 바 있음.

① 장학금 지원은 국가 프로그램 전략,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수요 등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시행되어야 함.

② 뉴질랜드 자국 초청 교육보다는 수원국 내 혹은 지역내 연수프로그램실시 및 장학금 지원이 비용대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임.

③ 거래비용절감 및 효과 증대를 위해 절차의 간소화(Simplification of procedures), 수원국과의 조화(Harmonisation) 및 수원국 정부의 노력과의 일치(Aligment)가 중요함.

▫ 최근까지 7개의 장학프로그램 및 시상프로그램이 있었으나 3개는 폐쇄되었음. 이는 성과의 부진 및 목표한 개발 결과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임.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뉴질랜드 개발장학제도 및 뉴질랜드 지역개발장학제도로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음.

3. 취약국가 지원

▫ 평화와 안보는 뉴질랜드가 지원하고 있는 수원국의 발전의 기반이 되나 태평양 연안 다수의 국가들에서 분쟁과 불안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파푸아뉴기니의 내전, 솔로몬 군도에서의 정부붕괴, 피지의 쿠데타 및 바누아투의 증가되는 정치적 불안정 징후 등이 그 예임.

▫ NZAID는 취약국가의 분쟁예방 및 평화재건을 위해서 다음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거버넌스 지원과 인권존중, 성평등 이슈 해결, 사회 각 계층의 참여, 기초 사회 서비스의 개선, 경재개발 촉진 등

▫ 지역의 분쟁 예방 역량 강화와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리더십 강화, 여성 존중, 청소년 교육, HIV/AIDS 예방, 지역사회 정보 제공, 법치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Ⅳ. 원조 기관, 인력 및 관리 체계

1. 원조 실시 체계

1) NZAID(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창설

▫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2000년 동료심사에서 당시 외교통상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총괄하고 있던 뉴질랜드 ODA 정책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① 지나치게 많은 소규모 프로젝트와 전략적 집중의 부재

② 외교통상부의 단기 순환 보직에 따른 원조 전문가 육성의 어려움.

▫ 이에 정부는 2001년 빈곤감소에 초점을 두고 ODA 프로그램 전반을 재검토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2년 외교통상부 산하 준독립기관으로 NZAID(뉴질랜드 국제개발청)이 창설됨.

▫ 외교정책 전반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나 ODA 관련 사항들은 외교통상부 차관이 직접적 책임을 짐.

▫ 개발협력 관련 예산은 'Vote ODA'라는 항목으로 별도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총 ODA의 90%를 차지하며 NZAID가 관리함.

▫ NZAID는 단순한 원조 집행기관 이상의 역할을 하

고 있음. 준독립기관으로서 ODA 관련 정책 및 운영 사항에 대해 장관회의에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며 외교통상부의 견해와 다른 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국회의 감독은 연간 예산 승인 절차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발정책 입안에 정도에만 관여하는 등 NZAID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여지는 제한적임.

뉴질랜드 국제개발청(NZAID)의 창설과 뉴질랜드 ODA 정책의 변화

- NZAID의 창설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개발정책 및 관련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기관을 가지게 됨.
- 빈곤 근절(Poverty Elimination)이 NZAID의 중심 목표로 설정되어 우선순위 선택, 원조방법 선정, 원칙설정 등의 근간이 됨.
- 새로운 일련의 정책, 원조체계, 결과중심의 계획 및 실행 문화 등을 창조함.
- 수원국의 정책 및 행정기관이 취약하더라도 최신 프로그램의 전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원조 및 적절한 의사결정절차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게 됨.
- 고등교육보다 기초교육에 강조를 둠으로써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의 변화를 이룸.
- 결과 중심주의로의 원조정책 전환. 이러한 관행은 수원국 및 국제기관과 보다 대규모의(Bigger), 보다 소수와의(Fewer), 보다 깊은(Deeper), 보다 장기간의(Longer) 관계를 형성케 함.

2) NZAID와 MFAT(외교통상부)의 관계

□ NZAID 청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임명하나 그 외 임직원의 인사권은 청장에게 있음. NZAID는 외교통상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두 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서는 Letter of Expectation과 Relationship document임. NZAID 청장은 외교통상부 Senior Management Group의 임원으로 매주 외교통상부장관과 회의를 하며 두 기관의 실무자들도 정규 및 비정규 모임을 가짐.

3) NGO와 밀접한 협력체제 구축

□ NZAID는 NGO의 개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다양한 채널을 통해 NGO와 개발정책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제는 양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총 ODA의 약 14%가 NGO에 지원되고 있으나 NGO들은 전적으로 정부지원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음. 대표 NGO 협의체인 CID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총 NGO 예산 중 68%는 공공모금을 통한 것이며 정부 지원분은 27%에 지나지 않음. NGO의 기금마련의 창구가 다양하므로 투명성과 일관성이 주요 이슈로 고려되고 있음. 아울러 NZAID와 NGO 간 수원국 선정 및 활동과 전략에 관한 조정을 위해 상호 협의가 중요시되고 있음.

2. 조직 운영 및 인적 관리

1) 경영의 유연성

□ 당초 외교부 담당이었던 원조 사업을 NZAID에 이관하여 임직원의 인사권 및 임금 결정권을 청장에게 위임하고 독립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비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 타 국가들보다 효율적인 원조가 가능케 됨.

□ 직원의 70%를 신규 채용하고 분명한 전략적 집중과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원조사업 관련 인력의 질적 향상을 이룩함. NGO, 학계, 민간 및 타 원조기관(영국국제개발부/DFID, 호주국제개발청/AusAID, 캐나다국제개발청/CIDA)의 인력을 고용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있음.

2) 왕성한 학습 문화

□ NZAID 설립 당시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수행과 함께 신입직원들을 조직에 통합하는 것이었음.

□ 이에 대안으로 신입직원에 대한 학습 권장과 경력개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훈련에 집중적 투자를 실시함.

□ NZAID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가 규정되어 실제 경영상 관행이 되었음.

– "참여적인 의사결정과 평등한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된 결과중심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개방적이고 신속히 반응하며 팀에 기초한 운영을 도모 한다."

□ 직원의 경력개발과 동기부여를 위해 학습과 개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직무 고안이 이루어짐.

3) 제한적 해외 현장 경험

□ 현재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은 5명(피지, 인도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및 태국)이며 5명의 추가 인원이 파견될 예정임(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 바누아투, 베트남 등). 원칙적으로는 Wellington의 본부 인력이 원조사업을 수행하나 상기와 같이 일부 수원국에서는 사무소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여 개발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음.

〈NZAID 해외 인력 현황〉

구분	정규직 환산인원 (실제인원x노동비율)	실제 인원 (노동비율)
NZAID	5.00	5(100%)
MFAT	13.13	88(14.9%)
현지고용전문인력	19.69	33(59.7%)
현지고용인력(기타)	20.94	137(15.3%)
총계	58.76	263

□ 신규직원에게 더 많은 해외사무소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직업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뉴질랜드의 비교적 작은 ODA 규모를 고려할 때 많은 수의 직원을 해외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은 아니나,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소수의 인력이 본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원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NZAID는 이러한 문제를 Interesting team approach를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음.

※ Interesting team approach : 본부의 국장, 담당 부장, 외교통상부 대표 및 현지 파견 조정관이 정기 회의를 통해 현지 현황파악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

3. 결과 중심주의 : 평가 및 기타 책임 설정

1)기관 수행 평가

□ 결과 중심주의 평가 및 경영시스템은 뉴질랜드 관료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이는 전략목표 설정 및 실적보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NZAID는 5개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동 기관이 추구해야 할 목표 설정, 우선순위 선정 및 핵심전략 수립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

□ 외교통상부는 국회에 대한 예산보고시, NZAID의 연례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NZAID는 자체보고서를 별도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감사원의 재무감사를 받으며 특별 회계감사가 시행될 수도 있음.

2) 자체평가의 강조

□ 2001년 내각회의에서 뉴질랜드 원조의 효과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채택되었음. NZAID는 DAC의 개발원조평가원칙(Principles for the Ev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근간으로 내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음.

□ 동 평가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함.

– 프로그램 사이클과 평가의 통합, 사업수행시 고려사항, 컨설턴트의 선정과 감독, 품질 관리, 보고서 양식, 새로운 사항의 활용 및 배포, 평가에 있어서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

□ 평가시 수원국의 참여를 정례화하고 있으나 타 공여국과의 공동평가는 기관 내부의 역량부족으로 제한적인 실정임.

Ⅴ. 2005년 DAC 동료평가 주요 결과

□ 원조정책 및 對국민 인식

– NZAID 설립 초기에 개발된 정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합의된 새로운 정책 및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수원국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하고 구체적인 국가별 제도 개혁 및 정책 개혁 장려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對국민 홍보전략을 수립 · 시행하여 기관의 활동, 개발 이슈 및 성과에 관한 對국민 이해를 제고하여야 함.

□ 원조 규모 및 배분

– UN이 권고하고 있는 GNI 대비 ODA 비율을 0.7%로 확대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현실적이고 의욕적인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제기구와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 NZAID는 ODA 증액의 상당부분을 국제기구에 할애하여 다자간 개발기구에 대한 기여도와 발언권을 높여야 함.

– 원조실적이 가장 뛰어난 태평양지역에 대한 현행 지원 추세를 유지하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선별된 소수의 국가에 양자원조를 집중시켜야 함.

□ 정책일관성

– NZAID는 정책조언 권한을 가진 개발원조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뉴질랜드 정부부처 전반에 걸쳐 개발정책일관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이에 정부의 의제에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분석 능력을 배가해야 함.

– 개발정책일관성 관련, 부처간 원활한 조정을 위해 정부의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며,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목표와 정책일관성에 관한 정기 보고를 통해 업무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원조관리 및 실행

– 원조사업을 분야별 접근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아울러 수원국과의 정책 대화 및 조정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현지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수를 늘려야 하며 직원들의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국가 주도의 대규모 양자간 국별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기금마련창구, 지역 프로그램 육성, NGO와 공동 기금마련 등을 검토하고 수혜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NZAID 조직도〉



아일랜드 ODA 현황

아일랜드 개발협력단(Development Cooperation Ireland)이 최근 발간한 2004년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04년에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총 4억 8,800만 유로 규모의 대외원조(ODA)를 집행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Ⅰ. 아일랜드 ODA 지원 규모

□ 아일랜드는 총 대외원조 예산의 50%를 최빈국에 지원하고 있고, UN이 설정한 기준(GNP의 0.15%)을 초과하여 최빈국에 원조를 하는 세계 6대국의 하나임. 또한 OECD 회원국 중 9번째의 공여국임.

- 총 ODA 지원액(2004년) : 4억 8,800만 유로
  - 2003년에는 4억 4,500만 유로 지원
- GNP당 ODA 비율 : 0.40%
  - GNP(2004년) : 1,220억 유로

Ⅱ. 양자 협력 프로그램

1. 개요

□ 아일랜드는 2004년에 양자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미개발국에 3억 2,900만 유로를 지원함.

- ODA 지원 프로그램은 에티오피아, 레소토,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다 및 잠비아 등 사하라 이남 최빈국과 동티모르(2003년 이후)에 집중

□ 2004년도 지원사업은 HIV/AIDS 고아 등 개도국 내 취약 계층인 아동들에 대한 교육,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어 추진됨.

- 개도국 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는 총 원조예산의 13% 정도

2. 국가별 지원 현황

□ 에티오피아

- 2004년에 2,750만 유로 지원
- 인구 3만 6,000명당 의사가 1명인 현실을 감안,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을 각 지방에 파견하는 방안 검토 중
  - 현재까지 2,800명이 파견되었고, 7천여명이 연수 중

□ 모잠비크

- 2004년 2,840만 유로 지원
- 아일랜드 정부는 8년간 모잠비크에 대해 공적 지원을 해왔으며 빈곤 감소를 위해 새로운 Country Strategy Paper(CSP 2004~2006)를 입안, 추진 중

□ 탄자니아

- 2004년 2,200만 유로 지원
- 2004년은 탄자니아 지원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해로서 탄자니아 정부의 '빈곤 감소 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에 따라 지역 개발, 인권, 농업, 건강 및 교육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

□ 우간다

- 2004년 3,070만 유로 지원
- 우간다 정부의 '빈곤 근절 활동계획(PEAP: Poverty Eradication Action Plan)'과 연계하여 정부 기능 증대, 사법, 부패 방지 및 민주화 등을 촉진하고 북우간다 분쟁 종식을 위한 안보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타

- 잠비아에 1,660십만 유로, 레소토에 1,060만 유로, 동티모르에 370만 유로, 남아공에 950만 유로, 짐바브웨에 70만 유로, 발칸 지역 및 CIS에 620만 유로, 팔레스타인에 200만 유로 지원

3. 긴급 재난 구조기금

□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시, 아일랜드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 재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약 40여개 재난 피해국에 3,800만 유로를 지원함.

- 아프리카 : 24.6백만 유로
- 아시아 : 4.3백만 유로
- 중동지역 : 1.3백만 유로 등

□ 특히 지난해 쓰나미 사태 발생시, 아일랜드는 1백만 유로를 즉시 지원하였고 Ahern 총리는 2005년도 ODA 예산에 구조기금으로 1천만 유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4. NGO 지원

□ 아일랜드는 관련 NGO들을 통한 개도국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는 바, 2004년 주요 NGO(CONCERN, Christian Aid, GOAL 등)들이 추진 중인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MAPS : Multi Annual Programme Scheme)에 약 3,800만 유로를 지원함.

Ⅲ.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1. 개요

□ 아일랜드는 2004년 EU,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1억 5,900만 유로를 지원

2. EU 차원의 협력

□ 아일랜드는 2004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개

발협력분야에서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빈곤, HIV/AIDS 근절 및 아프리카와의 협력 증진에 두고 EU 개발 협력장관 회의(2004년 6월)를 개최하는 등 최빈국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4년에 7,400만 유로의 개발기금을 EU 집행위에 납부함.

3. UN 및 관련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

1) UN

□ 2004년 2월, 아일랜드 개발협력단 및 보건부는 UNICEF, UNAIDS, WHO의 후원하에 'Breaking the Barriers-Partnership to Fight HIV/AIDS in Europe and Central Asia'라는 제하의 각료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4년 UN(UNDP, UNICEF, UNHCR, UNAIDS, WHO 등)에 4,300만 유로의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함.

2) UN 농업 및 식량 기구

가. UN 식량 농업 기구(FAO)

□ 아일랜드는 2004년 FAO 활동을 위해 약 148만 유로를 지원함.

- 연례 기여금 : 91만 유로
- 우역(牛疫)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Global Rinderpest Eradication Programme) 지원액 : 25만 유로
- FAO/WHO 신탁 기금 : 3만 유로 등

나. 세계 식량 프로그램(WFP)

□ 2004년에 약 1,050만 유로의 기여금을 납부함.

- 개발협력단 기여금 : 4.4백만 유로
- 농업부 기여금 : 6.09백만 유로

다. 국제 농업 개발기금(IFAD)

□ 2004년에 37만 유로 지원

Ⅳ. 관찰 및 평가

□ 아일랜드 대외원조 사업은 모두 무상원조(Grant)이며 외교부 내 개발협력단(DCI : Development Cooperation Ireland)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또한 아일랜드는 총 ODA 규모의 약 67%(3억 2,900만 유로) 정도를 양자간 채널을 통해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외원조뿐 아니라 관련 NGO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공적 원조를 수행하고 있음.

□ 2004년 총 ODA 규모는 4억 8,800만 유로로서 2003년의 4억 4,500만 유로에 비해 약 9.6%가 증가한 바, 특히 2005년 ODA 예산으로 5억 4,500만 유로를 편성한 점을 감안시, 아일랜드의 대외원조 규모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주아일랜드 대사관]

핀란드의 對이라크 지원

(IRFFI 원조공여국 제4차 회의)

Ⅰ. 對이라크 재건 지원 총공약액 (2003년 10월 마드리드 국제회의시 공약)

□ 2004년도 이라크 내 UN 시설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UN을 통해 1백만 유로를 제공

□ 지원 총공약액(2004년 기간 중 5백만 유로)은 이미 IRFFI를 통해 지원 완료

- 2백만 유로는 WB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3백만 유로는 UNDG를 통해 지원

□ EU 차원의 지원액(2억 유로) 중 핀란드의 부담분 3백만 유로도 EU를 통해 기지원

Ⅱ. 對이라크 지원 실적

□ 2003년도 핀란드는 NGO와 국제기구(Finnish Red Cross, ICRC, OCHA, UNICEF 등)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4.8억 유로를 제공

- 상기 자금 지원에 따른 對이라크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부는 현재도 진행 중

Ⅲ. Project 지원 실적 (상기 금전적 지원과는 별도로 진행)

□ 2003년 핀란드 Rescue Force 인력이 이라크의 민간구조인력양성을 지원

□ 2004년 상반기 법률 전문가를 이라크의 사법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 2004년 이래 요르단 암만에 소재한 국제경찰훈련센타에 10명의 경찰 교관을 파견해 이라크 경찰에 대한 훈련에 참여 중

□ 법률 집행 분야에서 이라크 관리들을 육성하는 EU의 EUJUST LEX 프로그램에 참여 중

□ UN이 지원하는 이라크 헌법제정 과정에 핀란드 법률전문가 1명의 자문을 제공 예정

Ⅳ. 향후 지원 계획 및 금번 회의 대표단 구성

□ 핀란드는 향후에도 EU 차원을 포함한 국제기구 차원 및 양자 차원에서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 지원 계획은 금년 가을 발표할 예정임.

□ 대호 7월 18일~19일간 암만에서 개최 예정인 금번 회의에서는 對이라크 신규 지원 약속을 제시할 계획은 없음.

- 핀란드는 금번 암만 회의에 주시리아 핀란드대사와 핀란드 외교부 중동아프리카국 참사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주핀란드 대사관]

한-인니 ODA 정책대화 개최

한-인니 정책대화가 8월 9일(화) 인니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에서 박강호 국제경제국 심의관과 Prasetijono 개발자금담당 차관을 수석대표로 개최되었는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Ⅰ. 핵심 내용

□ 양측은 금번 ODA 정책대화를 유·무상원조를 함께 논의한 첫 계기로서 중장기 개발협력방향 검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 인니측은 유상원조와 관련하여 금년 하반기 작성 예정인 Country program에 자국의 중기개발수요를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였는 바, 동 프로그램 수립시 인니측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무상원조와 관련,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기(4년간) 수요조사를 통해 인니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지원을 반영해 나가기로 함.

- 또한 무상원조에서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Country program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우리측의 입장에 대해 인니측은 지지를 표하면서 인니측 요청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함.

Ⅱ. 의제별 주요 논의 내용

1. 우리의 ODA 정책방향

□ 우리측은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원조혜택을 받아 오늘날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약 403백만불의 ODA를 제공하였고 2009년에는 현 수준의 2배 정도의 ODA를 제공키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함.

- 아울러 빈곤퇴치 및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ODA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특히 인력 자원개발 및 IT분야 등을 중심으로 ODA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함.

2. 인니의 경제개발 방향

□ 인니측은 실업해소,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증대를 중기경제방향(Mid-term Indonesian Economic Direction)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으로 다음 세 가지를 설명함.

- 재정정책 : 적자재정 해소를 통한 균형재정 달성
-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 감소
- 구조조정 :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환경 조성

□ 아울러 인니측은 빈곤 감소 이슈를 설명하면서 중점지원 필요 분야로 교육, 보건, 수도 및 위생, 고용창출, 인프라, 식량 및 농업을 제시함.

3. 양국간 유상원조 협력방향 논의

□ 우리측은 대인니 EDCF 지원의 중점사항이 ①인니의 경제개발 노력 지원 ②빈곤감소전략 이바지 ③양국간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설명함.

-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전반적인 ODA 규모 확대와 함께 내년 초 실시를 목표로 개별국가특성에 맞는 국가별 지원계획(Country Program)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니가 동 지원계획 수립의 최우선 대상국가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니측의 의견을 요청함.

□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현재 검토 또는 검토 계획중인 10개 지원검토대상사업(Long list)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사업(Short list)을 구체화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함.

- 또한 인니측에서 기신청한 종합병원 개선사업의 진행현황 설명에 이어 마나도 우회도로 2차 사업, 철도차량 구매사업 등 4개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함.

□ 우리측은 EDCF 지원금리 인하, 추진단계별 업무처리 시한제(Flow chart) 도입 등 차관절차 간소화와 대출조건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함.

□ 한편 인니 경제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토대로 인니 경제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ject)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인니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

□ 특히 인니측은 우리 정부가 수립 준비 중인 Country program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동 프로그램의 수립시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동 프로그램 수립시 수요자인 인니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에 대해 우리측은 9월까지는 동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동 지원계획 수립시 인니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인니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재차 요청함.

□ 인니측은 Long list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Short list를 정해 나가자는 우리측 입장에 동의하면서, 인니측이 별도로 자체 선정한 10개 사업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요청함.

- 우리측은 상기 10개 사업 중 일부가 우리측 Long list와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중요한 것은 상기 10개 사업이 인니측의 내부조정을 거친 사업이어야 함을 강조함.

4. 양국간 무상원조 협력방향 논의

□ 우리측은 인니가 금년도 제3위의 수원국으로서 HRD, 사회 인프라 및 농림 · 수산 분야 등에서 활발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수원국 정부의 중장기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예측 가능한 무상원조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KOICA에서 4년간(2006~9년)의 중기 수요조사를 진행 중임을 설명함.

- 예를 들어 인니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 관련하여 다년간의 특별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중기 협력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을 언급함.

□ 인니측은 그동안 여러 정부기관 및 지자체들에서 무상원조 수요조사를 접수하였으나 매년 지원되는 비율은 10~20% 정도라면서 중장기 주요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구체 사업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에 우리측은 수원국의 요청사항을 수원국의 경제 개발계획에 맞추어 보다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또한 내년도에 인도네시아 관련 Country program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희망 분야 및 사업이 있을 경우,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인니측(재무부)은 우리나라가 과거 중기 경제개발계획 추진시 연도별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집행하였는지(Budget performance)에 관한 경험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

- 이에 우리측은 상기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KOICA 사무소를 통해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5. 쓰나미 재건복구 사업 관련 논의

□ 양측은 최근 쓰나미 재건복구를 위한 6개 사업에 합의하고 조만간 MOU에 서명하게 된 것에 만족을 표시하고 추후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배분 등 구체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기기로 함.

- 우리측은 상기 6개 사업에 대한 실무조사단을 9월경 파견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니측의 협조를 당부함.

※ 상기 MOU는 예정대로 BRR측과 서명하고 추후 구체사업 진행시에는 인니측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6. 차기 ODA 정책대화 개최

□ 양측은 ODA 정책대화의 정례화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내년도 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함.

Ⅲ. 관찰 및 평가

□ 금번 한-인니 ODA 정책대화시 인니측은 경제 발전계획 설명자료 및 EDCF 지원 요청 리스트 등 준비를 많이 하였는 바, 인니측의 적극적인 수원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인니측은 EDCF 관련 Country program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인니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기를 희망하였는 바, 향후 Country program 작성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무상원조 관련 Country program도 내년도에 시행하여 對인니 중장기 무상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금번 ODA 정책대화를 통해 유·무상 원조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인니 원조정책 내실화 의지를 인니측에 표명하는 하는 한편, 우리 원조사업에 대한 인니측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따라서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ODA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양국간 ODA 우량사업 발굴 계기 및 중장기 개발협력 방향 설정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제4차 이라크 원조공여국회의 결과

제4차 이라크 원조공여국회의가 7월 18일~19일까지 요르단 사해 King's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되어 6월 브뤼셀 회의에 이어 공여국들의 對이라크 재건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라크 정부의 새로운 국가개발전략 및 원조조정 메커니즘을 승인하였음.

Ⅰ. 핵심내용

□ 이라크 정부는 Barham Salih 기획개발협력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2005~2007년간 이라크 재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과 단기 재건사업 우선분야를 발표하고 참가국들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함.

□ 이라크 정부는 기존 재건사업의 조정 메카니즘을 이라크의 Ownership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새로운 원조 조정 메카니즘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며 참가국들은 이를 환영함.

□ 지난 1년간의 이라크 재건신탁기금(IRFFI)를 통한 다자원조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교훈에 대해 논의, IRFFI가 대이라크 지원에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교훈을 향후 지원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키로 함.

Ⅱ.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6월 브뤼셀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표명한 이라크 신정부에 대한 지지 및 재건지원 공약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의미를 갖는 회의로서 중요성이 회의 개최 전부터 강조되어 온 바, 동경 제3차 회의시 보다 많은 70여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음.

□ 참가국들은 이라크 정부가 제시한 4개 분야 재건 목표를 포함한 3개년 국가개발전략과 전력분야 등 단기 중점추진분야를 적극 지지하고 재건지원 조정 메카니즘 개선안을 승인한 바, 치안불안 등으로 이행실적이 높지 않은 재건지원사업들이 다자원조의 틀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금번 회의에서는 이라크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전력공급 확충, 식수문제 해결, 주택공급 확대 등을 단기 중점추진분야로 설정하였는 바, 우리나라의 對이라크 양자 및 다자지원도 이러한 이라크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라크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재건과정에서의 이라크의 Ownership과 이라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공여국과 UN 및 WB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향후 재건 지원과정에서 이라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측이 제시한 새로운 원조조정 메카니즘에서 이라크 현지에서의 공여기관과 이라크 정부간 협의 채널 강화와 분야별 실무그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나라의 對이라크 원조조정 그룹 참여 강화가 필요하며, 중점지원분야 선정 및 동 분야 실무그룹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봄.

Ⅲ. 상세 논의 내용

1. 확대회의(7. 18)

※ 주요 참가국 : 이라크 및 70여 이라크 재건 지원국, World Bank, IMF, UNDG 등

1) 이라크 국가개발전략(NDS) 및 단기 중점추진분야 발표

□ Barham Salih 기획개발협력부장관은 금번 회의가 이라크 재건 및 정치일정상 중요한 시기에 개최됨을 지적하면서 재건과정에서의 이라크의 Ownership 제고 등 노력을 통해 재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 Salih 장관은 이라크 재건사업이 지향하여야 할 단기 중점분야로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보다는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분야인 전력 및 식수공급 확대, 주택공급, 소액융자, 교육지원 등을 제시함.

– 특히 전력공급이 9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200억불 규모의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

□ 이어 향후 3년간 이라크 재건의 방향을 제시할 국가개발전략의 기본틀로서 경제성장의 기반강화, 민간부문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선정 및 치안강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재건과정에서 이라크의 Ownership 제고와 민의의 반영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것임을 설명함.

– 지역차원의 재건노력이 일부 국가들의 적극적 관심으로 바스라, 사마와 등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소개

□ 한국, 미국, EU, 호주, 이태리 등 다수 국가가 이라크 정부의 새로운 국가개발전략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책기조도 적절함을 평가하고 강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 박강호 국제경제국 심의관은 NDS가 경제성장의 토대구축에 중점을 둔 것은 적절한 접근이며, 농업 등 여타분야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변화 노력은 장기적인 이라크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임을 평가하면서 재정지출 중에서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고 보조금 축소와 동 보조금이 전체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일부 국가들은 2005년 이라크재건신탁기금(IRFFI)에의 추가지원 공약을 발표함.

– EU : 기존 2005년 지원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약(총 145백만 유로 규모로서 105백만유로는 UNDG를 통해 40백만유로는 World Bank를 통해 지원)

– 호주 : 향후 2년간 45백만불 추가지원(그중 20백만불을 IRFFI에 기여 : UNDG 12백만불, World Bank 8백만불)

– 이태리 : 10백만불 IRFFI(UNDG)를 통해 농업 관개분야 등에 추가지원

– 덴마크 : 5.5백만불 IRFFI에 추가지원

– 스페인 : 20백만불 IRFFI(UNDG)에 추가지원

– 그리스 : 1.9백만불 IRFFI(UNDG)에 추가지원

※ 미국은 양자지원 형태로 지방 긴급구제 프로그램 지원(Quick local emergency relief programme)에 3.2억불 및 지방개발 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에 26백만불을 추가지원 예정임을 언급

2) 원조 조정 메카니즘 개선

□ Salih 장관은 국제사회와 공동노력을 통한 이라크 재건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메카니즘을 보다 통합되고 일관성있고 조화된 방식으로 재건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음 세 가지 수준에서의 새로운 원조 조정 메카니즘을 제시함.

– 이라크 재건 포럼(IRFO : Iraq Reconstruction Forum) : 현재의 공여국위원회를 확대하여 포럼형태의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기획부장관과 World Bank 및 UN이 공동의장 수임. 연 2회 개최하여 재건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함.

– 바그다드 조정그룹(Baghdad Coordination Group) : 이라크 기획부와 바그다드 소재 원조기관간 회합을 정례화(매월)함으로써 전략을 구체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일관성, 지연문제를 해결

– 분야별 실무그룹(Sectoral Working Group) : 해당 이라크 정부부처(Line ministry)와 주요 공여국들이 참여하며, 이라크정부와 공여국간 분야별 지원사항을 논의하며 매주 바그다드에서 개최. 석유, 교통, 보건, 수자원, Municipality and public works, 전력, 주택, 법치, 민간분야

개발 등 9개 분야를 실무그룹 설치 대상분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은 전력, 보건 및 법치 등 3개 분야로 시작 예정

□ 상기와 병행하여 이라크전략검토위원회(ISRB)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여 조정기능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Core of coordination)을 수행토록 함.
- 다자지원뿐 아니라 양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ISRB의 승인을 거쳐 시행토록 함.
- 구성위원을 확대(재무장관, 기획장관, 중앙은행 총재, 감사원장, 해당 지방정부 의장 등)하여 사업의 일관성 제고

□ 미국, 일본, 한국 등 참가국들은 이라크의 Ownership을 강화하고 ISRB가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에 대해 환영하고 이를 통해 對이라크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3) 재건지원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

□ World Bank 대표는 World Bank 이라크 신탁기금이 지원하는 9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완료되고 8개 사업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지원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다음을 소개
- 지원사업의 성공에는 사업시행상 지역적, 분야별 유연성 유지가 중요
- 이라크 국내 노동력과 서비스를 활용(진행중인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이라크 정부의 Line ministry가 직접 수행)
- 사업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제도가 긴요

□ UNDG 대표는 이라크 재건지원 과정에서 직면하였던 장애요소로서 치안불안, 이라크측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과정과 잦은 담당직원 교체 등에서 초래되는 정책결정 지연, 신뢰할만한 정보의 부족, 현지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등을 지적하고 지원사업 성공을 위한 교훈으로 다음을 소개
- 다자지원은 지원창구 단일화를 통해 중복지원 회피 및 거래비용 절감 가능
- 이라크측의 명확한 방향제시 여부가 지원사업 성공의 관건인 바, 이라크의 Ownership 제고가 중요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중요
- 치안불안 상황 하에서 현지 전문인력 활용이 유용
- 공여국의 지원대상분야 지정(Earmarking)은 가급적 포괄적으로 하고 이라크측이 제시하는 우선분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EU 대표는 World Bank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라크 내부의 제도적 역량형성을 통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World Bank가 사업이행 속도를 보다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일본 대표는 사업추진 이전에 예산과 시행기관의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 이행에 중요함을 지적함.

□ 미국은 사업의 성공적 이행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
- 모든 과정에서 이라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 지원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이라크측에 상세 설명
- 인적자원 개발은 속도가 느리나 재건성공의 관건임.
- 지방재건개발위원(Provincial reconstruction development councils)는 지방에서의 사업추진에 중요
- 책임 확보(이라크측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동노력) 필요

4) 제헌 및 선거절차 관련 진행현황 브리핑 청취

□ 이라크 의회 제헌기초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라크 의회에서의 헌법초안 작성작업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소개함.
- 8월 15일까지 초안 완성을 목표로 6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중이며(8. 1) 일차적으로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 예정

□ 의장은 헌법 제정과 국민투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8. 15) 헌법초안 채택 이후 포스터 제작, 지방설명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함.

2. 공여국 회의(7. 19)

※ 참가국 : IRFFI 회원국(23개국), 이라크, UNDG, WB, IMF

1) 신규 회원국 확정

□ 덴마크가 1천만불 이상 지원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금번 회의부터 정규 회원국으로 참여함.

2) IRFFI 운용 현황 청취 및 승인

가. World Bank 보고

□ WB 신탁기금이 2004년 3월, 운용을 개시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총 366백만불 기여금 확보 및 9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7개 사업을 이라크 관계부처가 직접 시행함.

□ WB는 시행과정에서 이라크 정부의 Ownership을 강조하고 제도적 능력형성을 통한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의 성과 제고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됨.

□ 조달 과정을 선명하게 시행하고 사업 시행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 예산을 집행 및 치안여건을 감안, 현지 이라크 전문 감사기관을 통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

□ 사업 시행을 전국에 걸쳐 분산 시행하고 지방 및 민간분야의 참여를 조장, 효율성을 제고함.

나. UNDG 보고

□ 지난 6개월간 6.7억불 기여금을 확보, 3.9억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2.9억불을 집행하여 37%의 집행실적(Disbursement rate)을 기록함.
- 그중 공여국들은 총 기여금의 49%를 전력, 교육, 위생, 식수 등 기초 서비스 제공에 할당(20%가 전력분야)

□ 매 사업마다 추진과정에서 분명한 계약기준에 따르고 웹사이트를 통해 조달정보 및 입찰결과 공개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분야별 지원대상범주를 몇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Cluster 방식을 통해 중복지원 회피 및 사업시행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다. 공여국들의 반응

□ 회원국들은 WB 지원사업의 추진속도가 느림을 지적하고 보다 사업의 진척을 가속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WB 및 UNDG측에 요청함.

□ 이라크측은 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여액을 단기 우선분야 사업추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키로 함.

□ 우리나라는 치안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한 점을 평가하면서 치안상황을 감안, 당분간 현장사업 추진보다는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함.

□ UNDG측은 IRFFI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위원회가 지침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위원회가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한 신탁기금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신탁기금에 귀속시켜 활용키로 함.

3) 공여국지원데이터베이스(DAD) 추진현황 설명 청취

□ 이라크 기획부가 UNDP와 협조 하에 추진중인 공여국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공여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요청함.

□ 참가국들은 각 공여국들이 제공할 데이터 양식, 제출시기, 제출처 등을 문의한 바, 이라크측은 데이터 제출양식 등 관련정보를 각국에 제공키로 함.

4) 이라크 재건신탁기금이 나갈 방향

가. 다자지원 stock-taking exercise

□ 캐나다의 제안으로 다자지원 메카니즘의 Multi-donor stock-taking exercise를 추진키로 하고 구체 기금조성,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추진시기 등은 추가 협의키로 함.

나. 이라크 주도의 원조 조정 메카니즘 형성

□ 이라크가 제안한 이라크 정부 주도의 새로운 원조조정 메카니즘 시행을 위해 IRFFI 위임사항을 별첨과 같이 변경키로 함.

- 위임사항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국은 2주 내에 캐나다 대표단에 제출키로 함.

다. 외부 지원 제고 방안

□ 의장은 IRFFI에 대한 확고한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하반기에 잠재적인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및 지원확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언급함.

- 의장은 IRFFI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해 달라고 요청

5) 차기 공여국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및 시기

□ 06년 2월 터키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는 UN과 의장단 및 터키 정부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회원국들에게 통지키로 함.

Ⅳ. 기타사항

□ 금번 회의기간 중 우리 대표단은 이라크 재무장관 및 기획부장관을 접촉, 우리 기업의 對이라크 민간 채권문제 및 對이라크 재건사업 추진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음.

□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對이라크 재건지원 현황을 소개하는 자료(Koreas Assistance for the Reconstruction of Iraq)를 회의장에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음.

[자료:주요르단 대사관]

對스리랑카 원조동향

스리랑카 언론 및 각 원조기관 주재 사무소와 접촉, 확인한 지난 7월의 對스리랑카 주요 원조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교육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스리랑카 교육부에 최대 6천만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함.

□ 세계은행 관계자는 스리랑카 내 각급 학교와 지역 교육의 질, 접근의 용이성, 표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치하하는 한편, 향후 지역간 교육수준의 평준화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전략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원금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만 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활용하는 한편, 2006년부터 학교중심 경영을 도입하여 IT, 과학 및 수학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여 세계수준에 걸맞는 현대화를 도모할 예정임을 밝힘.

2.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 세계식량기구는 쓰나미 피해 주민의 식량 및 스리랑카 식량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농민으로부터 쌀 1만 8천여metric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그동안 국제기구가 스리랑카 현지농민들로부터 매입한 쌀 분량 중에서 제일 큰 규모임.

□ 세계식량기구는 이를 위해 519만불을 투자키로 스리랑카 농업, 축산 및 토지부와 서약하였으며, 일본 및 호주 정부는 쌀 매입을 위해 세계식량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함.

- 일본을 통해 13,000metric톤, 호주 정부를 통해 5,130metric톤 구입 예정

□ 전체 쌀 매입은 스리랑카 식량안전대책을 위해 활용되어질 계획이며, 특히 쓰나미 피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될 예정임. 따라서 동 쌀 매입 프로젝트는 운송과 배부에 필요한 구직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스리랑카 시장경제의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식량기구는 동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농민들로부터 8,080metric톤을 매입하였으며 그동안 55,000metric톤의 식량 저장품을 쓰나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함.

3. 호주

□ 호주 정부는 쓰나미 피해를 입은 Mannar 및 Vavunia지역 내에 생활수단을 잃은 주민들의 재배치 및 재정착을 위해 UNDP에 320만불을 지원키로 함.

□ UNDP에 의해 추진될 동 프로젝트는 영구주택 설계, 어업 및 농업 기자재 분야에 지원될 예정이며 인도에서 귀국하는 스리랑카 피난민들도 포함됨.

4. 중국

□ 스리랑카와 중국 정부간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2005년 5월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됨.

- 스리랑카에 기술전수와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많은 타국 합의서들과 비슷한 형태를 띤 동 합의서는 제28조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을 고려해 스리랑카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동 합의서는 규정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스리랑카와 중국간의 정보공유를 제공하고 수입관세에 대한 탈세방지를 지원하며 배당금,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세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동의함

*배당금 : 10%, 이자 : 10%, 사용료 : 10%

□ 한편 스리랑카 정부와 중국 정부는 관광분야 협력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스리랑카는 2006년도에 BOI 및 관광청 사무실을 상하이와 북경에 설치할 예정임.

- 관광부문의 긴밀체계 논의를 위한 정기적 모임
- 관광산업, 특히 호텔산업의 합동투자 촉진
- 관광산업 관련 스리랑카의 중국호텔학교에 훈련프로그램 전수
- 관광산업 관련 스리랑카의 중국국가에 일반 관광 전수
- 중국시장에서의 스리랑카 관광 촉진 조장
- 중국 웹사이트 설치 지원

5. 파키스탄

□ 스리랑카와 파키스탄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금년도 양국간 교역규모는 3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파키스탄 타임지'는 예상함.

- 차, 구장잎, 면 등과 같은 상품 교역은 2배 이상 증대

□ 2004년도 파키스탄의 스리랑카 수출은 970만불, 2003년도 스리랑카의 파키스탄 수출은 480만불이었으며, 파키스탄 내각에서 지난 4월 12일 자유무역협정에 동의함에 따라 양국간 조약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함.

6.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으로 스리랑카의 투자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은행은 지적함.

□ 상기 2개 은행의 합동조사서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부패감소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재정접근, 빈약한 하부구조체계, 지속적인 불안정 등은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화적 협상 및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설명함.

□ 동 조사서는 또한, 열악한 교통편, 공공재정부문의 제한적 접근 및 빈번한 정전은 지방의 소규모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비록 90% 가까운 도로망 설치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로 유지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스리랑카 통신부문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고 의류, 농장 및 항공부문도 비슷한 경우라고 언급함.

[자료:주스리랑카 대사관]

對인도네시아 무상원조

Ⅰ. 핵심내용

1.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對인도네시아 무상원조 현황 및 평가'라는 주제로 관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세미나를 개최함.

2. KOICA의 중점지원 대상국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이 15년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실시된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적인 사업추진 방향 정립을 위해 국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부의 국별 원조평가 계획 수립시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Ⅱ. 상세내용 – 對인도네시아 무상원조 현황 및 평가[1)]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1) ODA의 종류

가. 양자간 원조

□ 무상원조

□ 유상원조(EDCF)

나. 다자간 원조

□ 국제기구 분담금, 출연 및 출자

□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융자

1)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자체 세미나 발표자료

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단위: 백만불)

구분	'00	'01	'02	'03
ODA 총계	**212.07**	**264.65**	**278.78**	**365.91**
□ 양자간 원조	131.19	171.54	206.76	245.17
-무상원조	47.78	52.97	66.70	145.46
-유상원조(EDCF)	83.41	118.57	140.06	99.71
□ 다자간 원조	80.89	93.11	72.02	120.74
ODA/GNI 비율(%)	**0.047**	**0.063**	**0.060**	**0.060**

3) 주요 국가 ODA 순위(2004)

□ 규모별 : 미국(190억불), 일본(89억불), 프랑스(85억불), 영국(78억불), 독일(75억불)

□ ODA/GNI 비율 : 노르웨이(0.87%), 룩셈부르크(0.85%), 덴마크(0.84%), 네덜란드(0.74%)

※ 미국(0.16%), 일본(0.19%), OECD DAC 평균(0.25%)

2. 한국의 무상원조

1) 연도별 추이

(단위: 억원/백만불)

연도/구분	총계(백만불)	증가율(%)
'91	184(22)	-
'93	265(33)	14.7
'95	383(48)	20.4
'97	607(76)	30.3
'99	471(36)	△22.5
'01	729(66)	39.7
'02	861(66)	18.1
'03	1,678(140)	94.9
'04	2,224(185)	32.5
'05	1,676(146)	△24.6

2) 2005년 사업계획

□ 127개 국가 및 6개 국제(지역)기구에 1,578억원 지원 계획

(단위: 천불/명,건)

구분	국가수	예산	점유율
총계	127국 6기구	1,578(370)	100%
아 · 태	25국	554(48)	35.1%
미주	31국	93(8)	5.9%
동구 · CIS	19국	81(7)	2.2%
중동	11국	5,994(52)	38%
아프리카	41국	97(8)	3.2%
국제기구	6기구	5(0.49)	0.3%
미배정	-	146(12)	9.3%

3) 상위 수원국

순위	2004년		
	국명	지원액(천불)	점유율(%)
1	이라크	59,523	33.5
2	아프가니스탄	17,378	9.8
3	베트남	9,851	5.5
4	인도네시아	6,565	3.7
5	필리핀	6,406	3.6

순위	2005년		
	국명	지원액(천불)	점유율(%)
1	이라크	50,000	36.4
2	베트남	8,406	6.1
3	인도네시아	5,338	3.9
4	스리랑카	4,750	3.5
5	캄보디아	4,059	3.0

3. 인도네시아 지원 실적 및 평가

1) 인도네시아 지원 실적

가. 지원금액(1991~2004년)

□ 지난 14년간 對인니 무상원조는 총 2,865만불을 기록하여 KOICA 지원 130여개 개도국 중 지원규모면에서 4위를 차지

□ 지원형태별로는 연수생초청 1,223명, 전문가 26명, 태권도사범 1명, 봉사단원 203명, 개발조사 10건 624만불, 프로젝트 8건 853만불 등

(단위: 천불)

연도	금액	순위
'91	331	7/120
'93	1,143.	2/133
'95	1,232	3/139
'96	1,690	4/140
'98	1,526	3/126
'00	1,984	4/133
'01	1,939	6/138
'02	2,770	3/141
'03	2,613	6/130
'04	6,565	4/138

나. 사업유형별 지원 비율(1991~2004년 총액기준)

□ 프로젝트, 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연수생초청을 위주로 실시

(단위: 천불/명,건)

구분	금액(인원,건수)	비율(%)	지원 순위
프로젝트사업	8,529(8)	29.8	1
봉사단파견사업	6,255(203)	21.9	2
개발조사사업	6,236(10)	21.8	3
연수생초청사업	5,024(1,223)	17.5	4
전문인력파견사업	1,663(26)	5.7	5
물자지원사업	944(17)	3.3	6
NGO사업	23(1)	0.1	7
계	28,650	100.0	

2) 사업별 지원효과 평가

가. 연수생초청사업

□ 1991~2004년까지 경제, 농수산, 과학, 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1,223명에 달하는 주재국 공무원 및 연구 · 기술 인력을 한국에 초청

□ 방한 연수생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최고수준의 IT산업, 새마을운동을 통한 빈곤퇴치 및 소득증대, 최근 IMF 위기 극복 등에 대한 연수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 표명

- 인니 중견 간부급 이상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로 친한 감정 확산 및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조성에 기여
- 우리의 산업기술과 수출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이해를 제고하므로써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 기대

나. 해외봉사단원파견사업

□ 1990년 최초 파견된 이후 2004년까지 총 203명이 파견

- 2005년 7월말 현재 86명(남자 51명,여자 35명)이 활동 중
- 파견분야별로는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농수산분야, 지역사회개발 등으로 구성
- 2004년부터 팀제봉사단 파견 착수

□ 특히 2004년부터는 파견단원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예년의 20여명 선에서 2005년 말까지는 100여명으로 전망됨.

- 노무현 대통령은 '발리 ASEAN+3 정상회의(2003년 10월)' 시 봉사단원 대폭 확대파견 계획 발표(연 220명→720명)

□ 현지인들의 봉사단원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매우 호의적

- 인니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는데 크게 기여
- 인니전역에 산재되어 Grass-root 계층의 주민

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술전수 및 소득증대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친화적인 원조수단으로 평가됨.

□ 봉사활동을 마친 OB 봉사단원 중 약 10명 정도가 현지에 정착 또는 국내 기업 파견근무로 활동 중

다. 전문가파견사업

□ 총 26명의 우리나라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니의 경제 · 사회 발전과 인적자원개발 노력에 우리의 개발경험과 신기술을 전수, 지도

□ 그동안 한-인니간 협력필요 분야인 자원개발분야, 농수산분야, 환경분야, 직업훈련분야 등에 전문가를 파견

- 주재국의 개발노력에 도움을 주는 한편, 우리나라에 필요한 對인니 분야별 정보축적과 경제협력 기반확대에 기여

라. 태권도사범파견사업

□ 1991년부터 파견되어 우리의 전통문화 보급을 통한 친한인사 확보 및 한류열풍 조성에 크게 기여

□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지도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시킴으로써 인니 태권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킴.

- 2003년에는 파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 1개, 호치민 동아시아게임 금메달 2개를 획득
- 금년 4월 사우디에서 개최된 아랍권 체육축전에서 금메달 1개, 동 메달 1개 획득
- 지방 순회활동을 통한 지방태권도협회 결성 지원, 현지인 태권도 지도자 육성,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1990년대 초 3만 명에 불과하던 인니 태권도 인구를 현재 60만 명선으로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

마. 개발조사사업

□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고 우리 기업의 인니 진출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력, 도로, 주택개발 등의 사회인프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

□ 광물자원, 농업 및 산림분야에 지원된 개발조사사업은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주재국에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인니 정부와 긴밀한 자원협력관계를 확대에 기여함.

바. 프로젝트사업

□ 프로젝트사업은 농업개발분야, IT분야, 직업훈련분야에 주로 지원

□ 직업훈련분야 프로젝트

- 인니직업훈련원 지원사업('85~'94/520만불)과 이동식 직업 훈련사업('94~'95)으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술 전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한국형 직업훈련 기술 및 제도발전에 기여
- 동 훈련원에서 교육받은 훈련교사들이 인니 소재 많은 직업훈련원에 근무, 기능 인력개발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농업개발분야 프로젝트

- 남부 깔리만탄지역 저습지 벼농사기계화 지원사업('98~'01/110만불)을 지원 완료한데 이어, 건기 농업개발을 위해 밭작물 농업 중점개발지원사업('02~'04/70만불)을 지원
- 저습지 벼농사 농기계화 지원사업은 식량증산에 대한 인니정부의 개발 정책에 부응, 해당지역 농민들에게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인니 정부의 농기계화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남부 슬라웨시 주정부의 기계화사업에 국산 경운기를 수출하는 효과 거양

□ IT분야 프로젝트

- 2000년 11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우리 대통령 지원 약속으로 250만불 규모로 2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 인도네시아대학 IT센터 설립지원사업('01~'03/125만불)
  - 중소기업발전센터 IT인프라구축 지원('01~'04/125만불)
- IT산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부족으로 인한 선진국과의 Digital Divide의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인 우리 IT산업의 인니 진출 및 수출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한-인니 친선 스포츠교류센터 지원사업

- 주재국 스포츠 발전과 특히 태권도 보급, 홍보를 위해 지원된 동 사업은 2005년 3월 13일 완공되어 청소년체육부에 기증되었으며 냉방시설이 완비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주재국의 열악한 스포츠 환경을 감안할 경우, 매우 우수한 시설로 한국의 지원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됨.

4. 2005년도 사업추진 현황

1) 2005년 사업 계획

□ 533.8만불 지원계획(지원대상 127개도국/6기구 중 3위)

- 연수생초청 41개 과정 84명, 전문가파견 6명, 태권도사범파견 1명, 봉사단파견 120명(신규 45명), 개발조사 3건 18.2만불, 프로젝트 2건 112.9만불 등
- 2005년 8월 현재 KOICA 파견인력은 총 91명(사무소 직원 4명, 봉사단 86명, 태권도사범 1명)

□ 사업별 지원 내역

사업명	지원규모	세부계획
연수생초청	362천불	41과정 84명
전문가파견	173천불	대테러전문가 3명(1주일), 농기계 1명(1년), 증권 인프라구축2명(3개월)
봉사단파견	2,263천불	120명(신규 45, 기존 75명) - 신규 45명 : 팀제, 일반, 협력요원 등
태권도사범파견	91천불	태권도사범 지속 파견 - 오일남/청소년 체육부
개발조사	3건/182천불	- 일본뇌염 예방 및 퇴치 백신사업 96천불('02~'06/210천불) - 카리안 다목적댐건설 F/S 82천불('04~'06/1,700천불) - 마나도 우회도로건설 F/S 4천불('04~'05/500천불)
프로젝트	2건/1,129천불	- 한-인니 친선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329천불('03~'05/2,800천불) - 임목개량 및 현대식 양묘장건립사업 800천불('05~'07/1,600천불)
긴급재난 구호	1,100천불	- 현금지원 400천불 - 긴급물품지원 700천불
NGO지원	37천불	- 학교 보건프로그램을 통한 아동건강 증진 사업(플랜 코리아)

2) 서남아시아 지진 · 해일 피해복구 특별지원사업

가. 우리 정부의 특별지원 내용(향후 3년 계획)

□ 아체지역 재건복구사업 : 1,500만불

–현금지원 : 60만불(지원 완료)

• 1차 20만불(2004. 12. 30)

• 2차 40만불(2005. 1. 17)

– 긴급 구호물자지원 : 70만불(1~3차 지원완료)

• 1차 의약품, 분유 등 17종(2005. 1. 28/항공운송)

• 2차 텐트, 담요 등 29종(2005. 2. 23/해상운송)

• 3차 물탱크트럭 등 3종(2005. 5. 17/해상운송)

– 잔여 1,370만불 재건복구사업추진 계획

• 재건복구사업 패키지(학교, 병원건립 사업 등 10개 프로젝트사업) 인니측에 제안(2005. 3. 24)

• 인니측은 피해지역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작성 후 재건 · 복구 사업 추진계획

· 마스터플랜 완료(2005. 4. 16)

· 아체 · 니아스 재건복구특별기구(BRR) 설립(2005. 4. 30)

• 우리측 제시 사업 중 6개 사업 선정 잠정합의 (2005. 7. 8)

· 학교 · 병원건립사업, 재건,복구 기자재제공, 연수생 초청, 망그로부 숲 복구사업, 어선 지원사업 등

나. 니아스섬 지진피해복구 특별지원

□ 현금지원 : 10만불(2005. 4. 8)

□ 물품지원 : 10만불(텐트, 담요 등/2005. 5. 4)

[자료 : 주인도네시아 KOICA 사무소]

참고자료

일본의 ODA

1. 일본 ODA 현황

□ 총 ODA 금액

– 2002년 : 92.9억불

– 2003년 : 86.7억불

– 2004년 : 89억불

※ JICA 주요사업 형태/실적

구분	2002년	2003년
대상국가/지역	158개국/지역	167개국/지역
연수생초청	15,466명	16,277명
전문가파견	2,802명	2,946명
개발조사팀파견(인원)	8,505명	7,753명
봉사단파견	1,234명	1,310명
봉사단파견(Senior)	529명	539명

2. 일본의 對인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Loan	991.7	908.2	889.4	938.8
Grant Aid	74.5	72.6	72.9	82.6
Technical Cooperation	100.7	107.7	106	123.2
계	1,166.9	1,088.5	1,068.3	1,144.6

3. 일본의 재건복구 지원사업 내용(5억불)

1) 복구지원사업(단기) : 2005. 1~12

□ 긴급의료지원

□ 기본 인프라 재건

– 반다아체 및 물라보 공항 시설복구사업

– 피해지역 토지대장 복구사업

– 상하수도 복구 개발조사사업

– 북수마트라 해안도로 복구 개발조사사업

참고자료

2) 재건지원사업(중기) : 2005. 3~

□ 재건복구 계획수립 지원

– Syah Kualaeogkr 재건복구 청사진작성 지원사업

– 아체개발 청년회의 지원사업

– 반다아체시 도시계획수립 개발조사사업

– BRR 지원사업

□ 사회, 공공시설 향상 지원

– 기초교육 지원사업

– 재난지역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능력배양사업

□ 지역사회 재건 지원

– Livelihood support(선박건조, 수산업, 농업, 가내공업 등)

– Post Trauma Syndrome Disease(PTSD) support

– 식수개발 및 공중위생 지원사업 등

□ 지역경제 재건

– 중소기업 진흥 지원사업(지역특화산업 및 전통산업)

□ 지방 공공행정 능력강화 및 분권화 이행 지원사업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 지역 선거지원

3) 쓰나미 조기경보 및 재난관리 시스템 능력배양 및 제도개발사업(중장기)

□ GIS maintenance, Mangrove project 등

Ⅲ. 기타

對중남미 원조평가와 정책 제언

최 원 식 / 한국국제협력단 봉사기획팀장

Ⅰ. 서언

중남미 대륙은 과거 멕시코,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하는 중미 카리브해 연안의 마야 · 아즈텍 문화와 페루 및 에쿠아돌,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지역의 잉카문명을 꽃피웠던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석유 · 동광 · 유황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4억 6천만 명에 총 GDP가 2조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의 국내 정국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제사회와의 신뢰관계 구축 그리고 BRICs 일원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중남미 지역 통합 가속화는 국제사회에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잠재력과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중남미 우호국인 스페인, 미국 및 EU 등 서방 선진국들은 물론 일본 ·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 및 국제무역을 위한 상품시장 확보 차원에서 동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 최근 들어 對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및 실질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이후 대통령의 중남미 주요국가 순방 등 중남미 지역과의 실질 협력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11월 칠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 2005년 하반기 중미에서 개최 예정인 한-SICA(한-중미 대화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남미 각국과의 실질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對중남미 대외 무상원조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對중남미 원조 전략 및 협력강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중남미지역에 대한 협력사업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실질 협력관계 강화에 일조코자 한국의 對중남미 ODA 원조사업 실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Central American Intergration System)

- 회원국(8개국)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돌,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준회원국)
- 사무국 : 산살바돌(엘살바돌) 소재
- 종래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미 통합운동을 총괄적으로 조정, 지원하는 구심체로서 중미 통합의 법적, 제도적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지역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Ⅱ. 중남미 지역의 정치 · 경제 환경

1. 정치환경

중미지역은 독립 이후 80년대까지 군부 쿠데타와 독재정권, 심각한 빈부 격차로 인한 정치, 사회의 불안정이 반복되었으나 90년대 민간정부 수립 이후 역내 평화 및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2000년대 들어 역사 및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 결속을 통한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남미지역 역시, 과거 군부체제를 벗어나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주요국가에서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온건하고 점진적, 실용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 정치안정 및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 민선 정부들의 역내 기반 약화와 중미지역 최대 국가인 멕시코의 국내 정국불안, 남미의 베네수엘라, 페루, 에쿠아돌 등의 대통령 탄핵시도 및 전국적인 시위 등 사회불안 요소 내재는 향후 중남미지역 정치, 경제적 안정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환경

중남미 경제는 중남미 주요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도움으로 2004년 5.5% 성장, 2005년도 4% 내외의 경제성장 등 과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경제 침체기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의 금융 및 대외채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교역 성장의 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조정 예상 등은 중남미 경제의 성장률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1_한국의 연도별 유.무상 원조 예산 비율〉

(단위: 백만불)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E)
합계(양자관계)	31.5	45.2	60.3	60.1	71.5	123.3	111.4	124.7	131.4	131.2	171.5	206.8	245.0	299.8(E)
무상원조	25.0	31.0	32.9	38.5	50.1	53.4	54.8	37.2	39.0	47.8	53.0	66.7	145.0	177.7
유상원조	6.5	14.2	27.4	21.6	21.4	69.9	56.6	87.5	92.4	83.4	118.6	140.1	100.0	122.1(E)
무상원조 비중(%)	79.4	68.5	54.4	64.0	70.1	43.3	49.2	29.6	29.7	36.4	30.9	32.3	59	59.3

※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보), 수출입은행 2004연보

Ⅲ. 한국의 對개도국 무상원조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원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누어지며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전담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對개도국 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 사업시행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 시행되며, KOICA에서 수행하는 대외무상원조사업은 프로젝트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공여 및 긴급재난구호 등 개발협력사업과 봉사단파견, 연수생초청, 전문가 및 의료단파견 등 인력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KOICA에서 추진하는 무상원조 실적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對개도국 무상원조

한국의 ODA 규모는 아프간 및 이라크 재건지원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기준 GNI 대비 0.06%로써 OECD/DAC 회원국의 평균인 0.25%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 경제규모(GDP 세계 11위, 총 교역량 12위)와 비슷한 스페인 0.23%, 네덜란드 0.80% 및 호주 0.25%는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그리스 0.21%, 포르투갈 0.21%, 뉴질랜드 0.23%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무상원조 사업은 91년 KOICA 설립 이후 2003년까지 약 150개국에 674백만불을 원조하였으며, 2003년 경우 무상원조 비중이 한국의 양자간 원조 총액의 약 59%를 점유하여 우리나라의 유 · 무상 ODA 구성비율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OECD/DAC 회원국의 경우 무상원조 점유율이 96%이고 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14개국은 100% 무상원조를 실시하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경우, 무상원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표 1〉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對개도국 무상원조는 OECD에 가입한 1996년(12월)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오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 국내경기에 매우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유상원조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유 · 무상 원조 비율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유상원조의 경우 '원조' 보다는 '상환해야 할 차관'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03년 경우, 양자간 원조는 245백만불로 ODA 총액(366백만불)의 67%를 차지하였고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는 145백만불로 양자간 원조의 59%를 차지하여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무상원조비율이 유상원조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이라크(2.6억불/'03~'07) 및 아프칸(45백만불/'02~'04) 재건지원 계획에 따라 무상원조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지역별 · 국별 원조 실적

한국의 對개도국 원조실적 〈표2〉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1년 KOICA 설립초기에는 아시아지역 20.86%, 아프리카지역 23.26%, 중남미지역 15.39%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2004년의 경우, 아시아지역이 34.57%, 아프리카지역 6.06%, 중남미지역 4.85%, 중동지역이 40.86%를 점유하여 우리의 대외 무상원조가 아시아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91~'04 평균 36.55% 점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동지역의 경우, 02년도(5.3%)에 비해 03년 35.1%, 04년 40.86% 등 약 8배(총액 대비 22배) 정도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이라크-아프칸 특별지원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의 對개도국 무상원조시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에 대한 증액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무상원조금액 증가를 위한 중 · 장기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_연도별 · 지역별 무상원조 실적〉

(단위 : 천불)

구분		Total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국가(기구)	166(42)	120(7)	128(9)	133(8)	143(8)	139(11)	140(15)	139(15)	126(16)	128(12)	133(11)	138(15)	142(8)	140(10)	148(10)
	금액	818,997	22,839	29,386	30,448	38,294	49,227	53,741	55,472	38,441	37,929	45,352	54,010	62,069	124,089	177,700
	전년대비			6,547	1,062	7,846	10,933	4,514	1,731	△17,031	△512	7,423	8,658	8,059	62,020	53,611
아시아	국가	23	19	18	18	21	18	20	19	22	21	19	19	21	21	21
	금액	299,361	4,763	5,325	7,481	11,170	15,482	18,593	18,596	11,876	19,043	22,667	24,654	28,827	49,450	61,434
	비율(%)	36.55	20.86	18.12	24.57	29.17	31.45	34.6	33.52	30.89	50.21	49.98	45.65	46.44	39.90	34.57
중동	국가	15	9	10	11	13	12	11	13	13	10	14	13	14	12	15
	금액	141,277	526	839	1,093	2,561	2,761	2,549	4,052	3,721	1,327	1,304	1,099	3,290	43,547	72,608
	비율(%)	17.25	2.31	2.86	3.59	6.69	5.61	4.74	7.31	9.68	3.5	2.88	2.04	5.3	35.1	40.86
아프리카	국가	52	41	44	44	45	48	44	40	32	33	41	40	43	38	38
	금액	83,013	5,312	5,976	5,552	5,826	7,341	6,871	5,394	4,910	2,643	4,570	4,034	7,174	6,647	10,763
	비율(%)	10.13	23.26	20.34	18.24	15.21	14.91	12.79	9.72	12.77	6.97	10.08	7.47	11.56	5.40	6.06
중남미	국가	33	31	29	28	30	26	30	31	26	32	29	31	32	31	32
	금액	66,397	3,514	2,984	3,594	3,554	3,616	4,216	7,811	4,683	2,539	3,800	3,101	7,635	6,725	8,625
	비율(%)	8.11	15.39	10.16	11.8	9.28	7.35	7.85	14.08	12.18	6.69	8.38	5.74	12.3	5.40	4.85
오세아니아	국가	14	10	11	11	10	12	11	12	11	8	5	11	8	6	9
	금액	13,857	878	1,327	1,083	1,031	1,422	1,530	1,719	821	671	476	642	732	738	787
	비율(%)	1.69	3.85	4.52	3.56	2.69	2.89	2.85	3.1	2.14	1.77	1.05	1.19	1.18	0.60	0.44
동구/CIS	국가	29	10	16	21	24	23	24	24	22	24	25	24	24	22	23
	금액	50,424	746	1,104	1,366	2,348	3,580	4,892	4,515	2,991	3,023	3,696	5,860	4,821	5,043	6,439
	비율(%)	6.16	3.27	3.76	4.49	6.13	7.27	9.1	8.14	7.78	7.97	8.15	10.85	7.77	4.10	3.62
기타	국가	42	7	9	8	8	11	15	15	16	12	11	15	8	10	10
	금액	164,668	7,100	11,831	10,279	11,804	15,025	15,090	13,385	9,439	8,683	8,839	14,620	9,590	11,939	17,044
	비율(%)	20.11	31.08	40.24	33.75	30.82	30.52	28.07	24.13	24.55	22.89	19.49	27.06	15.45	9.60	9.59

※기타는 국제기구지원, 개발인식증진비, 행정비용 및 지역구분이 불가능한 사업비 합계임(재경부 평균환율 기준, 지역별 지원실적은 KOICA 총 예산대비 실적).
※자료:KOICA 협력사업 연보 및 통계

3. 분야별 원조 실적

2004년도 사업분야별 지원 실적 〈표3〉을 살펴보면 공공행정분야 지원이 25.3%(44,964천불)를 차지, 2001년도 4,075천불(7.5%)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통신 14.96%(26,591천불), 교육 및 보건분야가 각각 11.42%와 10.55%의 점유율을 보여 인적자원 개발(HRD) 및 인간의 기본욕구충족(BHN)분야 등 사회 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_1991년~2004년 분야별 무상원조 실적〉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총계		22,839	100	29,386	100	30,448	100	38,294	100	49,227	100	53,741	100	55,472	100
사회 하부구조	교육훈련	1,182	5.18	1,192	4.06	3,054	10.03	5,589	14.59	7,345	14.92	8,073	15.02	8,827	15.91
	보건	3,568	15.62	2,273	7.73	3,431	11.27	2,986	7.80	6,915	14.05	7,654	14.24	4,990	9.00
	인구정책	–	–	227	0.77	13	0.04	19	0.05	166	0.34	129	0.24	124	0.22
	식수/위생	39	0.17	5	0.02	279	0.92	180	0.47	1,282	2.60	376	0.70	310	0.56
	공공행정	7,331	32.10	7,016	23.88	5,858	19.24	7,514	19.62	6,064	12.32	9,095	16.92	10,608	19.12
	사회인프라	665	2.91	1,092	3.72	1,279	4.20	1,356	3.54	2,364	4.80	3,098	5.76	3,530	6.36
경제 하부구조	운송/창고	27	0.12	388	1.32	481	1.58	1,284	3.35	362	0.74	489	0.91	1,002	1.81
	통신	366	1.60	388	1.32	342	1.12	309	0.81	269	0.55	733	1.36	499	0.90
	에너지	–	–	399	1.36	1,095	3.60	1,259	3.29	1,458	2.96	773	1.44	920	1.66
	금융	–	–	6	0.02	13	0.04	13	0.03	35	0.07	166	0.31	43	0.08
	기타 서비스	–	–	–	–	82	0.27	191	0.50	136	0.28	232	0.43	431	0.78
생산	농림/수산	1,387	6.07	2,265	7.71	2,299	7.55	2,208	5.77	3,020	6.13	3,129	5.82	4,315	7.78
	공업/광업	428	1.87	930	3.16	906	2.98	1,694	4.42	2,561	5.20	2,191	4.08	4,984	8.98
	무역/관광	46	0.20	70	0.2	155	0.51	234	0.61	169	0.34	209	0.39	547	0.99
다부문	환경보호	24	0.11	93	0.32	45	0.15	353	0.92	278	0.56	360	0.67	389	0.70
	여성개발	–	–	–	–	–	–	–	–	–	–	61	0.11	208	0.37
	기타	514	2.25	366	1.25	1,165	3.83	1,341	3.50	1,805	3.67	1,855	3.45	1,007	1.82
긴급원조	식량/재난구호	866	3.79	1,488	5.06	513	1.68	932	2.43	1,133	2.30	934	1.74	698	1.26
기타	행정비용	6,142	26.89	10,747	36.57	8,959	29.42	9,830	25.67	12,565	25.52	12,531	23.32	10,875	19.60
	NGO지원	–	–	–	–	–	–	–	–	634	1.29	669	1.24	651	1.17
	미배분	249	1.09	435	1.48	467	1.53	594	1.55	656	1.33	974	1.81	505	0.91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총계		38,441	100	37,929	100	45,352	100	54,010	100	62,069	100	124,089	100	177,700	100
사회 하부구조	교육훈련	7,377	19.19	7,956	20.98	11,414	25.17	8,534	15.80	8,562	13.79	24,996	20.1	20,299	11.42
	보건	4,781	12.44	4,020	10.60	6,998	15.43	7,686	14.23	7,478	12.05	14,540	11.7	18,740	10.55
	인구정책	85	0.22	161	0.42	208	0.46	126	0.23	186	0.30	74	0.1	75	0.04
	식수/위생	402	1.05	28	0.07	145	0.32	108	0.20	666	1.07	885	0.7	1,202	0.68
	공공행정	4,534	11.79	3,562	9.39	4,855	10.71	4,075	7.54	17,960	28.94	36,386	29.3	44,964	25.30
	사회인프라	3,189	8.30	3,627	9.56	3,804	8.39	4,064	7.52	3,555	5.73	7,405	6.0	11,012	6.20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경제하부구조	운송/창고	1,349	3.51	373	0.98	330	0.73	754	1.40	1,131	1.82	1,309	1.1	1,053	0.59
	통신	298	0.78	280	0.74	793	1.75	526	0.97	1,504	2.42	2,279	1.8	26,591	14.96
	에너지	511	1.33	270	0.71	783	1.73	536	0.99	1,069	1.72	975	0.8	5,557	3.13
	금융	116	0.30	177	0.47	184	0.41	166	0.31	187	0.30	170	0.1	136	0.08
	기타서비스	–	–	–	–	–	–	–	–	53	0.09			977	0.55
생산	농림/수산	3,533	9.19	3,361	8.86	2,756	6.08	3,494	6.47	4,872	7.85	3,676	3.0	11,126	6.26
	공업/광업	2,055	5.35	3,850	10.15	2,222	4.90	1,541	2.85	1,483	2.39	1,574	1.3	2,840	1.60
	무역/관광	325	0.85	402	1.06	685	1.51	696	1.29	736	1.19	776	0.6	973	0.55
다부문	환경보호	414	1.08	278	0.73	309	0.68	364	0.67	553	0.89	780	0.6	923	0.52
	여성개발	100	0.26	106	0.28	24	0.05	9	0.02	164	0.26	122	0.1	124	0.07
	기타	764	1.99	723	1.91	883	1.95	938	1.74	885	1.43	6,364	5.1	1,460	0.82
긴급원조	식량/재난구호	505	1.31	719	1.90	512	1.13	11,750	21.76	755	1.22	4,145	3.3	12,801	7.20
기타	행정비용	7,731	20.11	7,213	19.02	7,065	15.58	7,149	13.24	7,718	12.43	9,750	7.9	14,257	8.02
	NGO지원	234	0.61	357	0.94	546	1.20	788	1.46	1,386	2.23	6,625	5.3	919	0.52
	미배분	129	0.34	456	1.20	825	1.82	695	1.29	1,155	1.86	1,258	1.0	1,671	0.94

Ⅳ. 한국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현황

1. 무상원조 동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중남미지역이 아시아지역에 비해 지리적(원거리)으로 멀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對중남미 원조비율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일본이 중남미지역을 장기적인 원자재 공급기지, 일본제품의 직접적인 수출시장 그리고 지역간 블록경제하에서의 대미 우회진출 기지로 간주, 일찍부터 중남미지역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일본 경우 중남미지역에 대한 원조비율은 JICA 원조 예산의 약 17.1% 점유(2003년도 기준)

한편, 그동안 우리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중남미지역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및 지리적(원거리) 조건으로 인해 원조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비교적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지역이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수원태세가 양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Local Ownership)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對중남미 원조분야 선정시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HRD)분야, 의료보건 등 인간 기본욕구충족(BHN)분야, 사회 및 경제 하부기반시설 구축분야, IT 등 지식 및 정보격차 해소분야 등 저소득층 주민 다수가 직접적으로 원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중남미 국가 스스로 빈곤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남미 국가의 자국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원조일치/Alignment)하였기 때문에 원조규모에 비해 사업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무상원조 실적

우리의 對중남미 원조는 앞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 총 협력사업비의 4.85%인 9,873백만원(8,625천불/2004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61,434천불/34.57%)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 2002년 경우(9,545백만원/7,635천불/12.3%), 여수박람회(BIE) 유치를 위해 중남미지역에 대한 일시적 원조증가가 있었지만 2003~2004년은 이라크–아프칸 특별지원의 영향으로 중남미지역의 원조금액은 재감소

– 중남미지역에 대한 무상원조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원조규모가 결정되기 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큼.

1) 사업별 실적

2004년도 對중남미 원조금액을 사업별 규모로 살펴보면 총 원조규모 8,625천불 중 프로젝트사업 37.04%, 봉사단파견 28.02.%, 물자지원 6.48%, 연수생초청 13.88%, 재난구호 2.94% 및 전문가파견 2.7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프로젝트사업 경우, 2002년(6건/1,527천불/20% 점유) 이후 대폭 증가하였으나(03년–12건/2,809천불/41.77%점유, 04년–12건/3,195천불/37.04% 점유), 프로젝트 사업 1건당 평균 26만불로 프로젝트 규모는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사단파견사업 또한 2002년도에 비해 규모(21명→64명)면에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봉사단 파견국가 수는 3국에 불과한 바, 글로벌 시대의 개도국 지역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맞추어 중남미지역에 대한 봉사단파견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국가별 실적

2004년 중남미지역에 대한 무상원조는 총 원조금액 8,625천불 중 44.86%(3,869천불)가 중미지역에, 55.2%(4,756천불)가 남미지역에 지원되어 중미보다 남미지역에 대한 원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미지역 경우, 코스타리카(393천불), 도미니카(공)(122천불), 엘살바돌(305천불), 과테말라(893천불), 멕시코(1,021천불), 니카라과(313천불), 파나마(321천불) 등 한–SICA 협의체 구성에 따른 지원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10만불 미만의 소규모 물자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미지역도 페루(2,957천불), 파라과이(1,029천불), 우루과이(258천불), 콜롬비아(219천불), 에쿠아돌(106천불) 등의 프로젝트사업 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만불 미만의 소규모 물자지원 및 연수생초청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멕시코 경우,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시적 지원

〈표4_사업별 對중남미 무상원조 실적〉

(단위: 천불)

년도	구분	계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개발조사	물자지원	프로젝트	NGO	재난구호
'91	국가 수/건(명)	–	24국 58명	7국 12명	–	–	24국	2국 2건	–	3국 3건
	천불	3,514	259	34	–	–	2,587	308	–	326
	점유율(%)	100	7.37	0.96	–	–	73.61	8.76	–	9.27
'92	국가 수/건(명)	–	19국 52명	9국 13명	–	–	25국	2국 2건	–	6국 6건
	천불	2,984	233	86	–	–	2,198	391	–	76
	점유율(%)	100	7.81	2.88	–	–	73.66	13.10	–	2.55
'93	국가 수/건(명)	–	15국 35건	10국 11명	–	–	21국	6국 6건	–	2국 2건
	천불	3,594	186	111	–	–	1,557	1,720	–	20
	점유율(%)	100	5.17	3.09	–	–	43.32	47.86	–	0.56
'94	국가 수/건(명)	–	17국 33건	8국 11명	–	1국 1건	24국	4국 5건	–	1국 2건
	천불	3,554	204	217	–	157	1,860	897	–	219
	점유율(%)	100	5.74	6.11	–	4.42	52.34	25.24	–	6.16
'95	국가 수/건(명)	–	10국 22명	11국 15명	2국 4명	1국 1건	23국	6국 7건	–	6국 6건
	천불	3,616	125	246	134	280	1,727	977	–	127
	점유율(%)	100	3.46	6.80	3.71	7.74	47.76	27.01	–	3.51
'96	국가 수/건(명)	–	20국 62명	11국 15명	5국 19명	1국 1건	21국	8국 9건	–	3국 3건
	천불	4,216	376	277	417	148	1,426	1,491	–	81
	점유율(%)	100	8.92	6.57	9.89	3.51	33.82	36.36	–	1.92
'97	국가 수/건(명)	–	17국 102명	8국 14명	5국 31건	–	25국	11국 12건	–	4국 4건
	천불	7,811	569	317	568	–	2,279	3,964	–	114
	점유율(%)	100	7.28	4.06	7.27	–	29.18	50.75	–	1.46
'98	국가 수/건(명)	–	23국 115명	6국 8명	5국 38명	1국 1건	11국	8국 10건	–	9국 9건
	천불	4,683	503	332	447	0.7	347	2,834	–	219
	점유율(%)	100	10.74	7.09	8.55	0.02	7.41	60.52	–	4.68
'99	국가 수/건(명)	–	32국 134명	4국 5명	3국 34명	–	18국	2국 2건	1국 1건	4국 4건
	천불	2,539	513	198	434	–	943	317	13	118
	점유율(%)	100	20.20	7.80	17.09	–	37.14	12.48	0.51	4.64
'00	국가 수/건(명)	–	28국 138명	1국 4명	3국 34명	–	17국 26건	6국 8건	1국 1건	1국 1건
	천불	3,800	508	207	648	–	915	1,484	18	20
	점유율(%)	100	13.36	5.45	17.05	–	24.08	39.05	0.47	0.53
'01	국가 수/건(명)	–	28국 153명	3국 7명	3국 46명	–	16국 32건	3국 2건	1국 1건	5국 5건
	천불	3,101	663	151	743	–	697	646	20	181
	점유율(%)	100	21.38	4.87	23.96	–	22.48	20.83	0.64	5.84
'02	국가 수/건(명)		31국 230명	4국 4명	3국 21명	–	27건	9국 6건	1국 1건	3국 4건
	천불	7,635	1,061	131	994	–	3,828	1,527	24	70
	점유율(%)	100	13.90	1.72	13.02	–	50.14	20.00	0.31	0.97
'03	국가 수/건(명)	31국	27국 224명	5국 8명	3국 64명	1국 1건	21국 32건	12국 12건	1국 1건	3국 3건
	천불	6,725	1,130	197	1,325	13	1,137	2,809	43	71
	점유율(%)	100	16.80	2.93	19.70	0.19	16.91	41.77	0.64	1.06
'04	국가 수/건(명)	32국	28국 207명	5국 8명	3국 63명	2국 2건	18국	12국 12건	1국 1건	6국 6건
	천불	8,625	1,197	236	2,417	768	559	3,195	–	253
	점유율(%)	100	13.88	2.74	28.02	8.90	6.48	37.04		2.94

※ 자료: KOICA 협력사업 통계, 전문가파견사업에는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포함

〈표5_국가별 對중남미 무상원조 지원 실적〉

(단위: 천불)

Nation	Total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역합계(33국)	57,775	3,514	2,984	3,594	3,554	3,616	4,216	7,811	4,683	2,539	3,800	3,101	7,635	6,725	8,625
Antigua and Barbuda	322	28	19	19	20	51	17	15	13	23	0	7	96	9	42
Argentina	310	0	111	46	0	0	9	9	9	7	4	3	36	71	34
Bahamas	222	38	0	0	0	0	0	64	0	1	9	1	107		4
Barbados	416	88	52	43	42	27	28	22	4	4	3	5	86	7	
Belize	890	86	45	46	49	51	0	22	8	44	56	51	358	68	39
Bolivia	2,605	206	156	142	132	266	388	135	150	71	131	520	201	101	47
Brazil	86	3	0	8	16	0	6	8	3	12	0	9	8	9	78
Chile	444	8	49	48	105	0	4	68	35	29	32	20	7	35	14
Colombia	2,154	186	183	178	212	221	150	146	43	60	69	116	363	222	219
Costa Rica	3,069	207	121	99	117	110	296	514	85	315	242	211	386	362	393
Cuba	63	0	0	0	0	0	4	0	0	4	0	3	0	52	6
Dominica	533	33	19	0	20	41	0	32	15	7	0	39	278	46	44
Dominican Republic	2,619	131	200	413	28	50	309	745	218	193	35	95	78	119	122
Ecuador	2,605	199	158	213	229	235	204	256	43	82	109	74	533	266	106
El Savador	3,176	145	160	175	170	174	236	450	452	48	107	224	625	206	305
Grenada	431	47	26	21	52	31	28	28	0	32	24	147	119	19	31
Guatemala	5,226	142	232	310	581	397	243	955	443	95	171	211	252	1,188	893
Guyana	967	135	72	188	99	102	98	82	0	6	5	25	94	55	7
Haiti	984	4	0	0	219	104	96	182	0	36	1	39	224	76	94
Honduras	2,960	107	104	175	97	119	110	733	578	250	68	88	103	425	62
Jamaica	1,339	178	97	211	68	120	112	127	59	135	78	34	63	50	29
Mexico	362	38	64	12	4	0	8	94	28	57	4	2	6	41	1,021
Nicaragua	3,268	438	102	95	137	112	69	733	573	45	221	42	561	134	313
Panama	2,316	192	142	94	127	135	187	469	4	41	127	30	502	261	321
Paraguay	5,774	215	223	245	363	546	484	931	613	268	270	414	555	642	1,029
Peru	9,953	236	215	526	306	389	639	600	971	481	1,802	746	959	2,077	2,957
St.Kitts-Nevis	489	38	27	27	30	54	25	28	28	7	45	7	168		50
St.Lucia	440	37	29	22	29	31	25	36	0	24	4	0	193	5	46
St.Vincent	408	36	28	18	30	27	22	21	18	0	2	0	151	51	11
Suriname	719	99	106	99	104	103	64	50	4	20	50	1	3	11	26
Trinidad and Tobaco	1,094	108	115	89	135	103	173	86	58	2	6	15	160	39	10
Uruguay	1,170	80	98	0	14	6	159	156	216	74	50	20	222	71	258
Venezuela	342	13	17	17	4	0	10	0	0	50	62	35	123	7	14

따라서 협력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원조규모 증대 및 국가별 특성에 맞는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야 하며, 프로젝트사업과 봉사단, 연수생 등 인력사업이 연계되는 종합 원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분야별 실적

분야별로는 공공행정분야 51.8%(4,946백만원), 교육훈련 22.7%(2170백만원), 보건분야 12.9%(1,232백만원)순으로 나타나 IT, 보건, 교육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지원 중 IT분야에 대한 원조가 증가했다.

〈표6_분야별 對중남미 무상원조 실적〉

(단위: 백만원/천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4,296/3,800	4,000/3,097	9,545/7,630	8,016/6,725	9,873/8,625
사회하부구조	3,776/3,341	2,867/2,221	8,432/6,738	6,461/5,422	7,132/6,230
교육훈련	671/593	993/770	2,170/1,732	2,024/1,698	1,606/1,403
보건	2,003/1,772	1,041/806	1,232/986	2,657/2,230	3,681/3,215
인구	16/15	13/10	12/9	12/10	23/20
공공행정	1,042/922	742/575	4.946/3,953	1,577/1,323	846/740
식수공급		15/11	5/4	35/30	678/592
기타	44/39	63/49	67/54	156/131	298/260
경제하부구조	32/29	168/130	231/185	753/631	1,019/891
운송		15/11	17/13		60/53
통신	29/26	89/69	159/128	647/543	891/778
금융/재정서비스	3/3		5/4	16/13	
비즈니스/기타					23/20
에너지		64/50	50/40	90/75	45/40
생산부문	388/342	643/498	573/459	602/502	1,288/1,125
농림수산	160/141	332/257	216/173	266/224	501/438
공업 · 광업	191/169	177/137	212/169	200/167	603/527
무역관광	37/32	134/104	145/117	136/114	184/160
다부문	100/88	322/248	309/248	200/167	434/379
환경보호	57/50	34/26	30/24	35/29	58/50
여성개발				17/14	15/13
긴급 및 재난구호	22/20	233/180	88/71	84/71	289/253
기타 다부문		29/22		12/10	72/63
기타	21/18	26/20	191/153	52/43	
NGO	21/18	26/20	31/25	52/43	
비배분/비특정			160/128		

※ 자료: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 통계

Ⅴ. 한국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평가

1. 총 괄

1) Partnership이 중시된 중 · 장기 원조전략 부재

중남미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무상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간 Partnership이 중시된 중 · 장기 원조전략 수립이 결여된 채 외교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의 원조규모 및 원조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향후의 對개도국(중남미) 원조는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중시하고 이들의 국가개발 전략과 일치시키는 원조일치(Alignment), 우리의 원조제공시 수원국 스스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주인의식 강화(Ownership) 그리고 개발전략 수립 및 이행, 평가에 있어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 참여하는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 · 장기 원조전략 하에서 對중남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수원국의 중 · 장기 경제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여국의 일방적인 협력사업 추진시 사후관리 및 예산배정 등의 문제 발생으로 원조효과 반감 가능

2) 對중남미 협력사업 규모 저조

앞장의 여러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對중남미지역 무상원조는 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 이는 전체 원조규모가 선진국의 원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근본적으로 중남미 사업비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적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선진국의 對중남미 원조비율을 비교하면 우리의 중남미 원조가 적은 것은 단순히 한국의 총 ODA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남미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이 작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이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에 비해 중남미지역에 대한 지리적 여건(원거리)과 상이한 언어(서반아어) 및 문화적 차이(Iberoamerica 문화권)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지리적 · 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약17.1%)와 비교할 때 우리의 對중남미 지역 무상원조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규모가 작은 것은 단순히 ODA 예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전략이나 지역연구 및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원조 선진국과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중남미지역에 대한 성장 잠재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예상하고 장기적인 전략하에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외교적 · 경제적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한편, 각종 천연자원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지역과의 관계강화는 원자재 수입선의 안정적 확보 및 상품시장 확보 등 우

〈표7_일본 JICA(기술협력)의 지역별 원조 비율〉

(단위 : 천불)

구 분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분류	국제기구
2002년	45.7%(5,383)	3.1%(362)	17.3%(2,042)	8.6%(1,018)	14.1%(1,663)	2.4%(278)	8.5%(1,002)	0.3%(40)
2003년	43.0%(5,256)	3.3%(397)	17.1%(2,087)	9.9%(1,206)	14.0%(1,704)	2.7%(327)	9.9%(1,206)	0.2%(30)

※ 자료 : JICA 「Annual Report」(2004)

리의 식량 및 자원 안보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 對중남미 협력사업 규모 확대 및 중남미 각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WTO 및 FTA 체제 하에서 세계 각 지역이 경제 블록화 경향
- 세계 면적의 15.2%, 전 세계 인구의 9%인 468백만명 보유
- 총 GDP 2조 달러의 거대 상품시장 및 대미 수출 우회기지

〈표8_미국의 對중남미 원조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중남미지역 프로그램 지원	66.25	73.37	102.52	136.92
멕시코	43.00	50.87	91.72	67.57
카리브연안국	168.95	201.27	159.66	231.38
중미지역	214.48	319.76	321.29	374.04
남미지역	1,729.30	765.15	1,111.87	1,256.17
합계	2,221.98	1,410.42	1,787.07	2,066.08

※ 자료 : USAID 「LAC Databook」(2004)

2. 구체적 평가

1) 공여국 및 수원국 상호간 유익한 원조분야 선정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무상원조는 직업훈련 등의 교육분야, 의료보건분야, 식수개발 등의 환경위생 분야 및 IT분야 등 나름대로 우리에게 비교 우위가 있는 인적자원개발분야(HRD)와 인간기본욕구(BHN) 충족을 위한 분야로 원조분야를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개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원조규모가 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다분야에 소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원조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특정분야 개발이 시급함에도 자국 경제여건상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매우 유익하여 자연스럽게 공여국과 수원국간 원조일치(Alignment)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사업기간

우리의 對중남미 원조는 단년도 사업인 연수생초청과 물자지원사업 외 프로젝트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설립, 직업훈련센타건립, 의료센타건립 및 IT시설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는 프로젝트사업 경우 사업기간을 2~3년으로 설정, 사업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3년의 사업기간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실시협의 및 국가간 협정 체결 등의 행정기간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조사와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예산확보 계획 등이 심도있게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원국의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예산 회계기간의 차이로 인해 수원국측 부담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바, 사업기간 설정시 수원국의 예산 회계연도 및 행정 소요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국가별 협력사업의 특화분야 선정 및 추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對중남미지역 원조규모는 선진국의 원조규모에 비해 적고, 우리의 원조 중 중남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아 · 태지역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은 규모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국가별 경제규모, 사업추진 여건, 협력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국별 특성에 맞는 연수생초청, 프로젝트사업, 물자지원 등 협력사업 추진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다국가를 지원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적은 규모의 예산지원으로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 또한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페루 : 1991~2004년 동안 5개의 의료센터를 집중 지원하였고, 1개 의료센터 건립이 추진중에 있음. 또한 의료단 파견, 의료분야 봉사단 파견 등 인력협력사업도 의료분야에 집중 지원
- 과테말라 : 3개소의 아동복지원을 지원하였고 직업훈련소건립 등 HRD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컴퓨터 등 교육분야 봉사단원 파견 추진
- 파라과이 : 농업개발과 농촌식수공급 시설을 집중 지원하였고 농업분야 봉사단 파견 추진

4) 원조 수용태세

중남미지역은 대체적으로 협력사업 추진의 기본요소인 수원국의 개발의지, 지역주민의 참여정신 등 개발협력사업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구비되어 있으며, 도로 · 상하수도 · 전기 등 하드웨어적 요소인 사회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어 아시아나 아프리카지역에 비해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하고 사업추진 효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의료분야의 경우, 선진 의료행정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원조수용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 계획에 의거, 수원 계획 수립으로 기본 인프라(사업부지 및 의료인력 등) 사전 확보
- IT분야의 경우, 중남미권에서 IT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쿠바조차도 동아시아 저소득권 국가의 IT인프라 기반시설 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세
-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중남미지역 현지 상 · 하층부(정부 – 지역주민)의 사업당사자들이 국가 및 지방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보유

Ⅵ. 한국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유의사항 및 향후 추진 방안

1. 한국의 對개도국 무상원조 추진 기본방향

1)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무상원조는 외교적 · 정치적 고려, 인도주의 입장, 세계평화 기여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HRD)분야 중점 지원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 개도국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 강화
- 개도국의 빈곤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도국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를 위한 IT분야 협력사업 확대

□ 세계평화와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원 강화
- 빈곤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테러리즘, 난민문제 등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개도국 빈곤해소, 저개발문제 해소 등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 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등의 정부간 약속사업의 충실한 이행
- 긴밀한 국제적 연계 하에 보건 ·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지원
- 난민지원, 홍수, 지진 등 긴급재난구호 지원 강화
- 최빈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노력 지속 추진

□ 아프카니스탄 · 이라크 난민지원 및 재건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 난민지원 및 재건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2. 對중남미지역 무상원조 추진 기본방향

중남미지역에 대한 무상원조는 기본적으로 KOICA의 對개도국 협력사업 기본방향 및 사업목표에 의거 시행하되, 지역별 · 국별 지원 방향을 설정, 사업추진 방향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원조사업의 성과제고 및 균형적 추진을 노력한다.

또한 지역별 · 국별 예산의 최적 배분을 통한 협력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주요 협력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긴밀한 협력기조를 유지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 사업목표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은 무상원조 기본방향 아래서 사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개도국의 여건에 적합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등 비교 우위에 입각한 협력사업의 확대
- 연수생초청, 해외봉사단파견 등 인력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개발(HRD) 및 빈곤완화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지식 ·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지원을 위해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중남미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해소 지원

□ 인적자원개발(HRD) 지원을 통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및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

□ 교육, 의료보건, 식수 등 인간기본욕구충족(BHN 분야)을 위한 지원 강화

□ 절대빈곤 퇴치 및 초등교육 강화, 사회하부기반시설 건설 및 환경 · 여성문제 등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 지원(Global issues)

□ 중남미 국가의 지식 ·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을 위하여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긴급 재난구호 등에 대한 지원

3. 對중남미지역 무상원조 추진시 유의사항 및 발전과제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협력사업은 문화적 · 언어적 차이 및 국민 의식구조의 상이함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시 예기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사업지연 및 사업 선정 실패 등 원조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바, 우리의 對중남미 원조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여국간 상호보완성 유지 및 원조일치(Alignment)

유럽 및 미주지역 국가들은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문화적 · 역사적 · 언어적인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對중남미 원조규모도 크며, 원조분야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가에 비해 원조규모가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협력사업 분야 선정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으며 선진국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원조가 수원국의 경제개발 계획 및 개발우선 분야에 대한 공여국의 개발자금 및 기술지원 성격임을 고려할 때, 공여국 중심의 정치적 · 외교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익성과 순수성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원조전략을 일치시키고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수원국의 적극적인 주인의식(Ownership) 강화

대외원조의 성공여부는 수원국 및 수원국 정부관료들의 주인의식 및 책임감있는 사업 추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원국 측에서 개발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수립시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對중남미 협력사업 분야 및 대상기관 선정시에도 우리의 입장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 및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협력사업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중남미 국가는 물론 많은 수원국의 예산 회계연도가 우리와 달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수원국측의 예산확보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원국측의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치 않고 단순히 공여국의 예산 회계연도 준수와 같은 행정절차 적용에 집착할 경우, 공여국의 예산 회계연도 및 사업기간 준수라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공여국이 수원국보다 사업이행을 조급해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 계획만큼 사업효과를 제고치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조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할 것이다.

4) 수원국과의 Partnership 구축

수원국 정부 관계자와의 Partnership 구축을 통해 협력사업은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의 공동 발전

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및 동반자적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협력사업이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식전환과 이를 위한 Partnership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5) 지역연구 및 사전조사 강화

2~3년의 짧은 사업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및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시 단순히 사업실시를 위한 형식적 조사보다는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성 및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향후 중남미지역 무상원조 추진 방안

이상과 같이 중남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사업 실적 및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았는 바, 이를 토대로 향후 중남미지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원조 규모 확대

2003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의 비율이 59%(2004년도 59.3%로 추정)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무상원조 수준(9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중 중남미지역에 대한 점유율 또한 약 4.85% 수준에 불과하다.

- 2004년도 1국당 평균 지원액은 110만불이나 중남미 국가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26만불에 불과
- 중남미 국가 중 100만불 이상 지원 국가는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3국뿐이며 중남미 33개 지원국 중 10만불 이상 지원 국가는 12국에 불과
- 중남미지역 원조 규모는 아시아지역의 1/7 수준

향후, 정부도 2009년까지 ODA를 GNI 대비 0.1%까지 증대시킬 방침인 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ODA 예산 중 무상원조 비율의 증대가 필요하며 對중남미 무상원조 규모 역시 우리나라와 중남미간 무역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2004년 우리나라의 총 무역흑자액(293억불) 중 대중남미지역 무역흑자 비율은 16.7%(49억불) 점유

2) 지역연구 강화 및 국별 원조전략 수립의 체계화

협력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하여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정보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원조전략 수립 등이 중요한 바, 중남미지역의 국별 특성, 개발우선분야, 인적자원 보유 현황 및 사회 인프라 등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 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며, 협력사업에 대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및 전략적 지원분야 선정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 수립 및 집중 지원을 통한 원조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남미지역에 대한 지역 및 국별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 및 국별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여 국별로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선진 원조공여국과 對중남미 원조에 대한 효과적인 상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일본의 경우, 농업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중남미 각국의 농업연구소 건립 및 농업분야 공동 연구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입장에서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개발을 이룬 경험을 보유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인 바, 이러한 경험을 이용하여 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능동적으로 수립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추진할 경우 사업효과 배가
  - 의료보건, 교육, 직업훈련, IT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추진

3)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 추진

2000년 9월 전 세계 지도자들은 UN총회에서 새천년선언을 통해(Millennium Declaration)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는 한편, 2004년 12월 남아시아 지진해일 사태 이후에는 2005년 2월 '파리 선언문'을 통해 개발원조 조화의 필요성과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원조 관리방식의 대폭적인 변화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의 對개도국 원조는 공여국의 對개도국 원조실적뿐 아니라 공여국간 동료평가(Peer Review)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의 對개도국 원조 및 對중남미 원조 역시 원조규모 확대에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 추진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

-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초등교육의 의무화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개발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구축'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과
- 수원국 개발역량 및 주의의식 강화(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Harmonization), 개발원조 결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및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 등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목표 달성

4) 협력사업간 연계강화 및 한국형 협력사업 모델 정립

협력사업 추진시 개별사업 분야별 분산 실시보다는 협력사업간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하드웨어적 요소(프로젝트, 물자지원, 개발조사 등의 개발협력사업)와 소프트웨어적 요소(연수생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 인력협력사업)의 적절한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연수생초청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와 연계된 연수과정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사업과 연수생초청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봉사단파견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사업의 사후관리 및 프로젝트사업 추진분야의 수원국측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봉사분야를 선정, 봉사단파견사업과 프로젝트 사업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국형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시설지원, 기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적 요소에 연수생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파견 등을 통한 이론 및 기술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연계 실시

※ 페루 협력사업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의료단, 의료봉사단 파견을 연계하여 사업효과 제고

- 보건의료프로젝트의 경우, 의료진으로 구성된 특별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의료진을 초청,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교육함으로써 동 프로젝트 사업의 실시효과를 배가시키고 동시에 향후 수원국 현지에서의 의료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5) 지역전문가 양성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능력 배양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지리적 불리함(원거리) 및 상이한 언어(서반아어) 등으로 친숙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고, 학계에서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다 보니 협력사업 및 일반분야에 대한 중남미 지역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중남미 국가별 특성과 발전단계, 개발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별 원조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원조를 실시할 경우,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연구, 언어 등에 능통한 협력사업 자문인력그룹을 구성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토록 하며 중남미지역 해외사무소 파견인원 확대를 통해 협력단내 중남미지역 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경우, 단기적 사업효과 제고는 물론 장기적 업무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서반아어의 언어적 특수성, 지리적 영향,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지역전문가 부족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분야별 지역전문가 부족으로 전문가 파견활동의 효율성 저하(필요시 현지 전문가 활용)
- 중남미지역의 해외봉사단 파견국 및 KOICA사무소 확대를 통한 체계적, 전략적인 지역전문가 양성 필요

6) 해외조직망 및 업무영역 확대

對개도국 협력사업은 국내에서 추진하는 종합 행정업무는 물론 사업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는 현장 업무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사무소의 업무영역을 사업에 대한 단순 집행에서 정책개발 기능으로 확대하고 업무재량권을 강화하여 정보수집 및 집행, 프로젝트 사업의 감독 및 평가 등 해외사무소에서 현장감이 있는 원조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도모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수원국과의 실질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수원국 경제개발을 위한 동반자적 의식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협력사업 규모 및 해외봉사단 파견규모가 확대되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해외조직망 및 해외사무소 근무인원 확대는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인력 및 행정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협력사업 규모상 해외조직망을 단시간 내 대폭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에 운영중인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중남미지역은 남미지역의 페루사무소와 중미지역의 과테말라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이들 사무소가 현지의 치안상황, 지리적 · 정치적 중심국(중남미지역 각각의 지리적 · 정치적 중심) 및 협력사업 추진 여건에 맞게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재검토한 후, 이들 사무소를 중남미 거점사무소로 선정, 주변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7)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Feed-back 기능 강화

협력사업의 효과는 사업추진 당해연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수치로 계량화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성과 측정 및 효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화된 사업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등 Feed-back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력사업 추진은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완화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동료 공여국간 평가(Peer Review)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바, 협력사업 추진시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인 천년개발목표(MDGs)에 맞는 원조방향 설정과 추진이 필요하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방법도 DAC 평가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DAC의 사업평가 5항목

타당성(Relenence), 목표달성도(Effectiveness), 파급효과(Impact), 효율성(Efficiency), 자립발전성(Sustainability)

8) ODA 실시 조직체계의 일원화 추진

우리나라의 ODA 체계는 유 · 무상사업간 원조 실시체계의 이원화는 물론 무상원조사업 자체도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어 종합적인 원조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다원화된 원조 실시체계를 일원화하여 ODA 실시 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원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 이는 중남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원조사업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KOICA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사업 실시 현황의 예〉

기 관 명	무상원조 추진 내용
정보통신부	인터넷 봉사단, 연수생 초청(연간 1~2백명)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자 교류(연간 약 50여명)
교육부	APEC 청년인터넷봉사단, 외국인 유학생 초청(연간 60명)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연찬사업(연간 50~60명)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對중남미 원조동향

1. 주요 선진국의 원조동향

주요 선진국의 對중남미 원조사업은 빈곤추방, 환경보호, 마약퇴치, 여성개발, 국가현대화 지원, 교육분야 지원, 지방개발 등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별 협력사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1) 미국(USAID)

□ 정책목표 : 민주주의, 안보, 시장기반 개발의 역량 강화
(The future of this hemisphere depends on the strength of three commitments : democracy, security and market-based development.)
※ 2002년 1월 George W. Bush 대통령 연설

□ 원조금액 및 중남미 조직
- 연간 850백만불 이상을 동 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며 USAID는 삶의 질 개선과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강화하는데 주력
  - USAID 연간예산(2003 회계연도) : 85억불
- 16개국에 사무소가 있으며 본부 내 지역국(Bureau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 따로 있음.
  - 해외사무소 70개소
- 지원 대상국
  -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돌, 엘살바돌,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페루,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쿠바도 지원대상임)

□ 중남미 원조 분야
- 중점 지원 분야
  - 교육, 문화 및 경쟁력 제고
  - 빈곤감소 및 무역증대
  - 보건의료의 질과 서비스 향상
  - 남반구 자원의 보존
  - 재해경감과 복구
  - 마약대처와 대안적 개발
  - HIV/AIDS의 예방 및 교육
- 경제개발 지원
  - 소영농의 생산 다각화 및 생산량 증대 지원
  - 도농지역의 중소규모 자영업 지원
  - 지역적, 세계적 경쟁력 강화 지원
- 교육지원
  -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
  - 중등교육 강화
  - 기술훈련에 중점을 둔 직업교육
  - 교사 및 가족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자원 제공
- 민주적 절차와 제도 지원
  - 사법, 지방정부, 선거시스템 등을 포함

2) 캐나다(CIDA)

□ 정책목표
-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의 개선과 빈곤층의 생산력 및 소득 창출 역량 강화(BHN:인간기본욕구)
- 여성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
-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 인권, 민주주의, Good Governance 지원
-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환경관리 능력 강화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원
- 공평한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지원
- 지역통합 지원

□ 우선순위
- 인권, 민주정부, 마약퇴치 및 환경보전과 같은 이슈들에 관하여 미주기구(OAS)의 리더십 지원
- 2005년까지 미주지역에서의 FTA 협상
- 상호호혜적인 무역관계 발전
- 미주지역 내 이웃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CIDA 미주국의 지역적 프로그램
- 카리브(아이티 및 쿠바 포함)/Caribbean
- 중미/Central America
- 안데스지역 국가/Andean Countries
- 남미(Southern Cone), 브라질, 콜롬비아

□ CIDA의 對미주지역 원조
- 연간 약 300백만불 이상

참고자료

– CIDA의 對미주지역 원조는 주로 카리브 지역에 중점지원
(1990년도 기준, 對미주지역 원조총액의 약 55%)
–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외교정책의 주요 관심분야가 확대되면서 카리브 지역에 대한 원조 역시 감소하여 CIDA 對미주지역 원조는 원조총액의 40%를 밑도는 수준으로 감소됨
– 캐나다가 미주 전 지역에서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어짐에 따라, 이전의 카리브 연안에 집중되었던 자원이 중미 및 남미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어 카리브지역에 대한 원조비중이 높음
– 최대 수원국은 아이티(연간 40백만불)이며 페루 · 온두라스 · 볼리비아 · 니카라과 · 가이아나(연간 12~20백만불), 과테말라 · 자메이카 · 카리브동부지역 · 브라질 · 콜롬비아 · 엘살바돌(8~12백만불), 에쿠아돌 · 코스타리카 · 쿠바(5~8백만불) 등임

□ 협력사업 추진 형태
• 경제지원(물자지원 형태로 기자재, 식료품 등 지원)
• 긴급재난구호, 개발조사 및 연수생초청
• 전문가파견 및 NGO지원, 지역사회개발 지원

3) 일본(JICA)

□ 원조 방향

가. Central America & the Caribbean

JICA는 중미 및 카리브 연안국들에 대하여 인적자원 역량구축과 국가 제도 구축 분야에서 수원국들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이슈들을 우선 고려하고 있음.

• 남남협력을 활용하는 지역협력 증진
– 동 지역에는 비교적 개발된 국가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언어라는 공통 요소로 묶여 있음.
– 동 지역 내 국가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원조의 효율성과 집중성 등을 고려하여 동 지역 내 남남협력을 활용하는 원조 실시
– 지역 내 공통 이슈에 대하여 몇 개 국가에 대하여 공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재해방지, 전염병 예방, 환경 및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 등
• 자연재해 복구 지원(허리케인 등)
• 환경보호
• 내전복구 지원
– 내전으로 파괴된 사회적, 경제적 기반시설 복구 지원
– 상하수 · 보건의료 · 기초교육 · 농업개발 · 도로 및 교량 건설 · 민주화 · 공공안전 부문 개선 등

나. South America

JICA는 남미 국가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통해 원조 실시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 비교적 소득과 개발수준이 높은 국가로 열대우림의 파괴, 주요 도시에서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환경보존 등을 동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주요 요소로 고려
– 상기 3개국과는 Partnership Program이라는 협정(Agreement) 을 체결하며 지역 내 남남협력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
• 저개발국
–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과 같이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대하여는 보건의료 개선 · 농업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 분야(Infrastructure)를 우선 지원

□ 기타
• 남미지역에는 일본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JICA는 이들 일본 이민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사회 인프라 개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일본에서 실시하는 훈련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JICA는 이들 교포들을 남남협력에 있어서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 중남미지역 공히 지역 내 협력기구(SICA, MERCOSUR 등)를 통한 지원에도 적극적임.

□ ODA 총액 및 JICA 기술협력 실적

(단위: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ODA total	13,419	9,704	9,359	8,674
Japan's Technical Cooperation	3,705	2,811	2,754	2,828
JICA's Technical Cooperation	1,460	1,370	1,268	1,299
Other Japanese Assistance	9,714	6,893	6,605	5,846

자료: JICA 「Annual Report」(2004)

〈주요 공여국들의 중남미지역 원조 실적〉

(단위: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Arab Countries	21	17	1	.
Australia	1	0	0	1
Austria	18	80	15	18
Belgium	43	39	56	60
Canada	90	105	119	143
Czech Republic	1	1	1	2
Denmark	69	67	83	72
Finland	10	11	14	18
France	98	100	156	178

참고자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Germany	309	309	324	435
Ireland	6	6	9	11
Italy	-9	-18	17	41
Japan	785	736	590	459
Korea, Rep.	12	14	9	11
Luxembourg	17	14	16	22
Netherlands	307	300	307	270
New Zealand	1	2	2	2
Norway	50	74	47	63
Poland	3	0	0	0
Portugal	1	2	2	0
Spain	242	650	367	450
Sweden	135	112	103	113
Switzerland	53	51	64	88
United Kingdom	196	155	252	118
United States	609	1,099	1,069	1,626
Non-DAC Bilateral Donors	51	45	52	32
Other Bilateral Donors	13	12	41	19
Bilateral Donors	**3,133**	**3,986**	**3,716**	**4,253**

자료:USAID, 「LAC Databook」(2004)

2. 국제기구의 원조동향

□ 중점 지원분야

- 중남미지역의 빈곤추방 및 민주화지원, 환경보호 등

□ 국제기구의 주요활동

- 국제개발은행(IDB)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의 경제 · 사회개발지원을 목표로 하며 빈곤추방, 국가 현대화, 환경보호등에 지원
- 세계은행 :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증대 및 국가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며 사회 · 경제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유럽연합 : 유럽연합 소속국가를 통한 원조를 하며 주로 개발 협력, 산업 및 경제협력, 인적자원 개발 등에 지원
- 세계환경기금 : 생태계연구, 기후변화, 식수, 오존파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

〈국제기구 등의 중남미지역 원조 실적〉

(단위: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Arab Agencies	2	3	0	1
Caribbean Development	15	29	60	19
European Commission	314	517	297	435
Global Environment Facility	12	24	39	26
IDB Special Fund	138	240	140	258
IFAD	14	21	19	15
Intern'l Dev. Associaton	174	274	248	307
Montreal Protocol	4	4	2	3
Nordic Development Fund	9	5	6	12
SAF+ESAF(IMF)	7	-18	-45	-25
UNDP	18	14	11	17
UNFPA	13	21	45	29
UNHCR	10	12	12	12
UNICEF	21	23	19	19
UNTA	39	35	36	39
World Dood Programme	37	29	20	22
Other United Nations	132	137	147	126
Multilateral Donors	**959**	**1,370**	**1,056**	**1,315**

자료:USAID, 「LAC Databook」(2004)

〈OECD/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실적〉

(단위:백만불,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DAC 총액	56,428	0.24	53,737	0.22	52,335	0.22	58,292	0.23	69,029	0.25
호주	982	0.26	987	0.27	873	0.25	989	0.26	1,219	0.25
오스트리아	527	0.26	423	0.23	533	0.29	520	0.26	505	0.25
벨기에	760	0.30	820	0.36	867	0.37	1,072	0.43	1,853	0.60
캐나다	1,706	0.28	1,744	0.25	1,533	0.22	2,004	0.28	2,031	0.24
덴마크	1,733	1.01	1,664	1.06	1,634	1.03	1,643	0.96	1,748	0.84
핀란드	416	0.33	371	0.31	389	0.32	462	0.35	558	0.35
프랑스	5,639	0.39	4,105	0.32	4,198	0.32	5,486	0.38	7,253	0.41
독일	5,515	0.26	5,030	0.27	4,990	0.27	5,324	0.27	6,784	0.28
그리스	a194	0.15	226	0.20	202	0.17	276	0.21	362	0.21
아일랜드	245	0.31	235	0.30	287	0.33	398	0.40	504	0.39
이탈리아	1,806	0.15	1,376	0.13	1,627	0.15	2,332	0.20	2,433	0.17
일본	15,323	0.34	13,508	0.28	9,074	0.23	9,283	0.23	8,880	0.20
룩셈부르크	119	0.66	127	0.71	139	0.76	147	0.77	194	0.81
네덜란드	3,134	0.79	3,135	0.84	3,172	0.82	3,338	0.81	3,981	0.80

참고자료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뉴질랜드	134	0.27	113	0.25	112	0.25	122	0.22	165	0.23
노르웨이	1,370	0.90	1,264	0.80	1,346	0.80	1,696	0.89	2,042	0.92
포르투갈	276	0.26	271	0.26	268	0.25	323	0.27	320	0.22
스페인	1,363	0.23	1,195	0.22	1,737	0.30	1,712	0.26	1,961	0.23
스웨덴	1,630	0.70	1,799	0.80	1,666	0.77	2,012	0.83	2,400	0.79
스위스	984	0.35	890	0.34	908	0.34	939	0.32	1,299	0.39
영국	3,426	0.24	4,501	0.32	4,579	0.32	4,924	0.31	6,282	0.34
미국	9,145	0.10	9,955	0.10	11,429	0.11	13,290	0.13	16,254	0.15
한국	318	0.079	212	0.047	265	0.063	279	0.06		0.06

※OECD/DAC 회원국은 2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DAC 비회원국
-자료:OECD/DAC 2004년 통계

〈중남미 국가의 연도별 수원현황〉

(단위 : 백만불)

국가명	형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Argentina	양자간	166.2	270.6	255.1	229.3	147.0	110.4	104.8	91.6	38.1	40.5	58.5	17	114.7	116.4
	다자간	3.7	4.5	9.5	-2.5	1.0	33.2	39.6	30.3	51.0	64.1	25.3	137.9	-0.4	2.1
	합계	169.9	275.1	264.5	226.8	147.9	143.5	144.4	121.9	89.1	104.7	83.8	154.9	114.3	118.6
Barbados	양자간	1.4	1.7	0.9	0.4	0.2	0.3	-0.1	0.1	0.5	1.5	1.1	2.9	3	2.5
	다자간	1.5	0.7	-0.4	3.7	-1.0	-0.9	4.7	4.2	15.2	-3.5	-0.8	-4	0.5	17.5
	합계	2.9	2.5	0.5	4.1	-0.8	-0.7	4.6	4.4	15.7	-2.1	0.3	-1.1	3.5	19.9
Belize	양자간	19.3	18.9	16.4	17.2	16.7	15.1	22.2	11.3	10.1	37.6	4.1	11.2	16.9	4.3
	다자간	11.4	4.2	10.7	14.7	13.5	6.6	3.6	7.2	8.8	8.8	11.2	10.9	9.3	7.8
	합계	30.7	23.1	27.1	31.9	30.1	21.7	25.8	18.5	19.0	46.4	15.3	22.1	26.1	12.1
Bolivia	양자간	364.7	356.5	502.5	431.7	385.8	518.6	591.6	454.1	416.8	398.1	336.5	537.2	483.4	554.5
	다자간	182.6	149.6	168.7	132.8	183.3	200.5	240.4	246.5	212.3	171.4	138.3	198.9	198.2	376.1
	합계	547.3	506.1	671.2	564.5	569.1	719.1	832.1	700.6	629.1	569.5	474.8	736.2	681.7	930.6
Brazil	양자간	142.1	165.8	-278.6	148.6	202.5	197.4	186.8	192.4	221.1	100.6	225.6	158.8	199.6	187.4
	다자간	13.4	-1.4	24.8	52.7	50.6	72.4	98.9	95.4	114.9	87.6	98.4	191.1	131.0	110.2
	합계	155.5	164.4	-253.8	201.3	253.1	269.8	285.8	287.8	336.0	188.2	324.0	349.9	330.6	297.5
Chile	양자간	83.4	105.6	117.9	159.2	132.5	143.3	182.7	114.3	96.4	64.9	42.1	40.7	-12.9	63.1
	다자간	20.6	16.6	15.5	16.4	19.0	14.1	13.6	15.2	10.9	6.0	7.7	17.4	5.3	13.3
	합계	103.9	122.2	133.4	175.7	151.5	157.4	196.3	129.5	107.2	70.9	49.8	58.1	-7.6	76.4
Colombia	양자간	86.7	117.7	221.5	85.4	66.7	161.2	160.1	172.4	162.2	294.0	179.8	373.7	428.6	769.5
	다자간	2.9	-2.8	12.4	0.2	11.4	10.1	28.6	23.8	7.2	9.3	7.8	7.5	13.7	33.8
	합계	89.5	114.9	233.9	85.6	78.1	171.3	188.7	196.2	169.4	303.3	187.6	381.2	442.2	803.3

〈중남미 국가의 연도별 수원현황〉

(단위 : 백만불)

국가명	형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Costa Rica	양자간	209.2	174.0	146.2	107.9	81.2	42.5	-8.6	-4.7	23.6	-2.6	18.8	7.4	6.2	33.0
	다자간	21.7	5.7	4.2	4.0	2.1	4.6	0.8	-4.3	6.9	-4.9	-6.2	-4.6	-0.1	-3.7
	합계	230.9	179.7	150.4	112.0	83.3	47.1	-7.8	-9.0	30.5	-7.5	12.5	2.8	6.1	29.3
Cuba	양자간	69.7	44.2	11.8	14.4	18.7	33.7	27.0	32.6	57.4	36.2	31.5	34.5	50.5	60.3
	다자간	17.4	18.4	13.1	29.5	28.3	29.8	30.3	33.0	23.0	22.7	12.9	19.5	11.0	10.3
	합계	87.1	62.6	24.8	43.9	47.1	63.6	57.2	65.7	80.4	58.9	44.4	54.0	61.5	70.5
Dominica Repulic	양자간	74.9	69.1	56.1	-18.5	38.1	83.8	59.7	31.7	61.5	152.5	44.7	102.3	138.6	60.8
	다자간	28.2	1.1	11.9	19.4	24.7	37.2	41.1	39.5	60.0	42.8	17.8	5.6	7.0	8.4
	합계	103.1	70.2	67.9	1.0	62.8	121.1	100.8	71.2	121.5	195.3	62.5	107.9	145.6	69.2
Ecuador	양자간	123.1	171.7	206.4	169.3	175.0	162.4	222.7	145.9	156.1	134.6	139.1	148.8	206.3	173.8
	다자간	38.3	68.7	37.4	67.2	38.6	65.6	38.3	11.7	23.5	17.1	8.6	25.1	10.3	2.5
	합계	161.4	240.4	243.9	236.4	213.5	227.9	261.0	157.5	179.6	151.7	147.7	173.9	216.7	176.2
El Salvador	양자간	314.0	245.3	316.6	286.1	238.9	245.8	240.7	246.1	157.0	174.8	173.5	232.6	220.1	172.0
	다자간	34.7	51.8	88.2	117.4	67.7	52.4	67.1	38.5	25.4	9.3	7.1	5.7	14.5	20.6
	합계	348.7	297.1	404.8	403.5	306.6	298.3	307.8	284.6	182.4	184.2	180.6	238.3	234.6	192.6
Guatemala	양자간	152.3	160.7	179.4	182.8	161.1	165.2	144.3	215.5	183.3	231.3	231.4	202.1	200.6	218.9
	다자간	51.3	39.5	18.3	32.0	59.9	46.6	50.9	50.4	50.9	62.3	32.8	25.0	48.6	29.6
	합계	203.5	200.2	197.6	214.7	221.0	211.8	195.2	265.8	234.2	293.6	264.2	227.1	249.2	248.5
Guyana	양자간	35.8	35.5	24.7	27.6	28.3	23.4	41.3	206.3	51.8	39.7	51.9	46.1	34.2	28.8
	다자간	132.9	94.3	64.8	79.4	50.7	62.7	100.7	58.4	41.1	39.9	55.4	51.4	30.8	57.9
	합계	168.8	129.8	89.4	107.0	79.0	86.1	142.0	264.7	92.9	79.5	107.3	97.5	64.9	86.7
Haiti	양자간	117.5	140.9	77.6	96.8	598.1	510.2	151.4	176.6	250.9	157.5	154.0	136.2	126.0	153.5
	다자간	51.2	39.7	24.9	26.4	4.0	215.8	218.8	148.8	156.2	105.7	54.4	34.7	30.0	46.4
	합계	168.7	180.6	102.5	123.2	602.1	726.0	370.2	325.4	407.1	263.1	208.4	170.9	156.0	199.9
Honduras	양자간	385.6	230.1	250.1	206.3	181.7	235.7	180.1	175.2	199.9	360.2	319.7	425.5	298.9	236.6
	다자간	64.7	75.2	146.2	134.2	115.1	171.3	191.0	131.4	123.2	460.6	134.8	255.3	136.5	153.0
	합계	450.3	305.3	396.3	340.5	296.8	407.0	371.1	306.6	323.1	820.8	454.5	680.7	435.4	389.6
Jamaica	양자간	260.5	151.9	112.8	91.6	73.8	67.1	3.6	-5.3	3.4	-20.9	-13.5	20.6	-4.7	1.6
	다자간	19.3	8.7	6.0	8.2	35.1	41.2	54.3	76.9	15.8	0.0	30.0	44.2	28.4	2.1
	합계	279.8	160.6	118.8	99.8	108.9	108.3	57.9	71.6	19.2	-20.9	16.4	64.8	23.7	3.7
Mexico	양자간	144.8	261.1	300.9	397.0	396.9	365.1	274.3	90.0	5.1	22.9	-67.1	41.8	93.5	75.3
	다자간	14.5	16.0	14.7	25.6	28.1	20.0	12.4	15.4	39.6	14.8	13.7	33.5	42.5	28.7
	합계	159.3	277.1	315.6	422.6	425.0	385.2	286.7	105.4	44.7	37.8	-53.4	75.3	135.9	104.0
Nicaragua	양자간	328.5	702.8	475.5	276.0	419.6	494.4	769.1	263.8	337.7	324.3	326.7	715.5	291.8	531.1
	다자간	43.9	136.7	183.3	44.2	179.2	159.7	167.3	148.8	272.0	349.4	235.3	215.5	227.9	306.8
	합계	372.4	839.5	658.8	320.2	598.8	654.0	936.3	412.5	609.8	673.6	561.9	930.9	519.8	837.9

참고자료

국가명	형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Panama	양자간	98.0	112.9	196.1	77.4	33.7	35.9	50.5	52.8	23.0	15.5	27.9	38.4	24.6	32.0
	다자간	2.6	-6.5	-38.6	-4.9	-0.6	5.2	0.1	-1.4	-0.3	-0.8	-3.3	0.3	-1.7	-1.2
	합계	100.6	106.4	157.6	72.5	33.1	41.1	50.7	51.4	22.7	14.7	24.6	38.7	22.9	30.8
Paraguay	양자간	49.5	133.1	69.4	98.2	88.5	112.8	71.8	81.9	57.1	66.4	73.8	59.5	52.4	57.4
	다자간	9.0	15.1	31.0	33.0	8.7	30.3	21.7	32.5	20.3	12.1	8.5	2.5	5.1	-5.7
	합계	58.4	148.2	100.4	131.2	97.2	143.1	93.5	114.4	77.4	78.6	82.3	62.0	57.5	51.7
Peru	양자간	354.8	600.6	378.4	514.6	295.3	327.8	279.0	366.4	384.7	407.3	377.6	428.2	467.7	454.1
	다자간	49.8	13.0	29.5	52.4	41.8	45.5	51.0	29.2	120.0	45.0	26.0	25.8	30.7	49.4
	합계	404.6	613.6	407.8	567.0	337.1	373.2	330.0	395.6	504.7	452.2	403.6	454.0	498.5	503.4
Suriname	양자간	51.2	31.8	73.2	75.0	57.7	70.5	102.4	69.8	52.3	30.2	29.2	20.0	7.7	4.1
	다자간	10.5	12.2	6.9	4.4	2.8	6.7	6.8	6.6	6.6	5.8	5.2	3.2	3.9	6.9
	합계	61.7	44.0	80.0	79.3	60.5	77.2	109.2	76.4	58.8	36.0	34.4	23.2	11.6	10.9
T & T	양자간	6.1	-4.8	-3.0	-1.4	-0.6	-1.6	-0.8	-0.3	-2.2	0.2	4.4	4.4	6.0	5.2
	다자간	12.1	3.1	11.0	3.4	22.1	27.1	17.9	33.5	16.0	26.1	-5.9	-6.1	-13.1	-7.4
	합계	18.2	-1.7	7.9	2.0	21.5	25.5	17.1	33.1	13.8	26.2	-1.5	-1.7	-7.1	-2.3
Uruguay	양자간	41.7	38.4	60.1	108.1	67.8	57.6	29.7	31.0	20.9	20.1	16.8	12.4	13.7	13.1
	다자간	11.3	11.0	9.4	5.4	6.6	10.2	5.5	4.1	5.3	2.7	1.4	3.9	3.2	6.3
	합계	53.1	49.4	69.5	113.5	74.4	67.8	35.1	35.1	26.2	22.8	18.2	16.3	16.9	19.4
Venezuela	양자간	75.8	23.9	30.7	35.0	21.8	29.0	26.0	-1.1	21.9	35.0	62.7	34.2	42.9	65.5
	다자간	1.8	5.3	3.5	6.4	5.2	14.9	12.1	10.4	20.7	9.8	14.6	10.9	14.6	17.4
	합계	77.6	29.1	34.2	41.4	27.0	43.8	38.1	9.4	42.7	44.8	77.3	45.1	57.5	82.8

자료: USAID, 「LAC Databook」(2004)

유엔개발계획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송 기 순 / UNDP 인도네시아 사무소 Programme Specialist

평화는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으며, 개인과 나라들이 자유를 누릴 때 유지될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논의는 성장 위주의 개발론을 넘어 사회, 문화, 경제 차원에서의 인간복지 및 인권, 환경보호 등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복잡 다양한 개발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와 여타 민간기구들이 각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엔의 개발 네트워크로서 개발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 자원을 제공하는 유엔개발계획은 전세계에 걸친 조직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를 도와 포괄적, 통합적, 다차원적, 성과 중심의 개발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유엔개발계획의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필자가 2003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활동,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Ⅰ. 유엔개발계획 개요

1964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개도국의 기술원조 및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별기술원조(Special Technical Assistance) 기금과 개발프로젝트의 기획 및 평가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Special Fund)을 모태로 하는 유엔개발계획을 건의하였다.

1965년 유엔총회의 의결에 따라 1966년 1월 유엔개발계획이 설립되었다. 이후 발전과 사업분야의 확장을 거치면서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여성기금(UNFEM), 유엔프로젝트지원사무소(UNOPS) 등이 유엔개발계획에서 분리되었다.

2005년 현재, 전 세계 166개국에 걸친 개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발의 지식과 경험,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변화를 종용하는 조직으로서 유엔개발계획은 다른 개발원조 기구들과 협력하여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자국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을

돕고 있으며, 특히 과거 오랜 활동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협력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정부, 민간단체의 능력을 배양하고 개발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천년을 맞으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절대빈곤층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동의하고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유엔개발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한 세계적 및 각 국가별 노력을 서로 이어주고 조율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유엔개발계획은 목표달성의 성과를 관측하고 MDGs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엔개발계획의 주안점은 개도국과 최빈국들이 ①민주적인 통치체제(Governance) ②빈곤퇴치 ③위기방지와 회복 ④에너지와 환경 ⑤HIV/AIDS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다른 국가들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남녀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장려한다.

유엔개발계획은 전체 유엔조직 내에서 개발분야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엔개발계획은 유엔 전체의 개발담론을 주도해 왔으며 둘째, 전 세계에 걸쳐있는 사무소 조직망을 바탕으로 유엔 주재 책임자(Resident coordinator)제도를 주도하여 각국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기구들의 활동을 지원, 조율하는 것이다.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이라는 용어는 유엔개발계획의 Mahbub Ul Haq이 1990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발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며 이는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뛰어넘어 지적 성장, 영양과 건강 상태의 개선, 보다 안정적인 생계,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여가선용, 정치적 · 문화적 자유 및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를 포함한다. 즉, 개발의 목적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창조적이며 장수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개발의 개념과 개발정도의 측정을 주제로 한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인간개발과 관련되는 주요 주제들을 다루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경제, 사회, 정치 및 문화와 관련된 개발현안들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선택을 논의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개발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인간개발지수는 국가별 비교와 연도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994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지역별 인간개발보고서는 개발 성과의 측정 및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도구의 목적을 띠고 있으며 그 지역에 해당하는 특정 개발 문제들, 예를 들면 인권, 빈곤, 교육, 경제개혁, HIV/AIDS 및 세계화 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국가별 보고서는 인간개발의 문제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서 인간개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다자간 협력관계증진, 불평등 문제의 분석 및 개선된 상태의 측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1992년 카메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24건의 국가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인간중심의 개발이라는 개념은 1995년 유엔개발계획 행정관이었던 James Gustave Speth에 의해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로 확대된다. 모든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은 인간중심, 환경적으로 적합해야 할뿐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반적인 개념을 실질적인 차원, 즉 개개의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차원으로까지 적용한 것이었다.

MDGs는 세계 각국 정부가 합의한 개발 목표이며, 2015년까지 유엔기구만이 아니라 세계은행을 비롯한 각종 개발은행, 각국 정부의 개발협력기구들, 비정부단체 등 빈곤퇴치와 인간, 사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각급 기구들이 노력을 모아 달성하기로 결의한 목표이다. 유엔 내 MDGs 캠페인을 주도하는 기구로서 유엔개발계획은 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엔기구들의 개발원조사업의 모든 측면에 MDGs를 통합하고 다른 국제 기구들과 협력하여 개도국들이 MDGs 달성을 향한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돕고 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캠페인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우선시하고 재원의 효과적인 이용 등 국가적인 합의를 도출하도록 돕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또 다른 유엔개발계획의 역할은 주재 책임자(Resident coordinator) 제도를 통해 한 국가 내 다양한 유엔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주재 책임자는 주재국 내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유엔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유엔 원조 활동의 효과를 증진하도록 모든 유엔 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유엔개발계획 국가사무소의 대표(Resident representative)가 주재 책임자의 역할을 맡으며, 분쟁지역이나 분쟁 후 지역에서는 인도주의 지원 책임자(Humanitarian coordinator)의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이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1997년 취임하면서 시작된 유엔개혁의 일환으로 각 기구의 전문분야를 살리면서 여러 분야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주재국의 개발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기구간 제도를 간소화, 일련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엔 기구간 조화(Harmonization)와 더불어 유엔개발계획은 주재국 정부를 도와 각종 해외 원조를 조정하여 원조 효과(Aid effectiveness)를 높이는 일에도 기여하고 있다.

Ⅱ. 유엔개발계획 인도네시아 사무소

7,000여 개에 달하는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3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400년이 넘게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있던 인도네시아는 1940년대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잠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45년 8월 17일 독립하였다.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 1969년 네덜란드 통치 하에 있던 서파푸아를 이리안 자야주(현재 명칭은 파푸아)로 병합하였고 2002년 동티모르가 정식으로 분리 독립하면서 현재의 인도네시아

가 되었다. 독립 후 53년간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두 대통령의 독재가 지속되었고,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맞물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로 수하르토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6년간 무려 4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경제위기 이전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신흥 경제강국으로 떠오르던 인도네시아는 1997~98년 경제위기로 인구의 26%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고, 이후 정치적인 혼란이 겹치면서 2002년까지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대대적인 지방분권화는 불분명한 법제도와 지방 공무원 및 시민사회의 미숙, 뿌리깊은 자카르카 중심의 통치구조로 인해 지역간 개발 격차를 심화시키고 기초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3년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기를 거쳐 2004년 사상 최초의 의회 및 대통령 직접 선거를 성공리에 마친 인도네시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이끄는 연합 행정부를 필두로 '단일성 속의 다양성(Diversity within Unity)'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정치 개혁, 지방분권화의 내실화와 균형잡힌 지방개발, 국민생활 향상 및 빈곤 퇴치, 테러위협과 지역분쟁으로부터의 국내 안정확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재정립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서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정, 부패, 족벌주의를 타개하고 국민생활 수준 향상 및 사회 불안요소를 배재하여 국내 안정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의


UNDP 인도네시아 사무소

과제로 꼽히고 있다. 53년간 지속된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의 결과물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도요노 정부의 성패여부를 가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여 인도네시아도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개발계획의 주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이러한 개발의 당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개발계획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2001~2005 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me)은 MDGs 달성과 정부의 국가 개발계획 목표에 맞추어 ① 정부개혁(Governance Reform) ② 빈곤층을 겨냥한 정부정책의 입안과 시행 개혁(Pro-poor Policy Reform) ③ 분쟁 및 재해방지와 회복(Crisis Prevention and Recovery) ④ 환경관리(Environment Management)를 주요 과제로 인도네시아의 빈곤퇴치를 위한 다각적 접근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남녀평등,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HIV/AIDS 등의 여러 분야와 관련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동부 인도네시아의 개발 정도가 상당부분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동부 인도네시아[1]에 치중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보다 가시적인 개발의 효과를 겨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2]

유엔개발계획은 인도네시아 개발에 관여하는 여러 관련 단체들(정부, 민간, 국제)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유엔기구 특유의 중립성을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여타 국가기관(의회 및 사법부)과 쌓아온 건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여타 외국 원조기구(Bilateral donor agency)들이나 개발은행들이 관여하기에 민감한 분야들, 특히 분쟁지역에서의 활동 및 주요 국가기구의 개혁 관련 현안들에서 촉매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04년 의회, 지방 의회,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양자 및 다자간 외국 원조기구들이 제공한 자금을 이용,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선거를 마친 것은 유엔개발계획이 쌓아온 기술적 능력과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과의 신뢰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사무소 규모와 프로그램 재원 측면에서 세 번째로 큰 사무소이며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를 강타한 지진과 해일 피해의 복구과 최근의 평화협정의 결과로 협정 사항 이행을 위한 기술 자문, 귀환 반군의 사회 재통합 등으로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직원 수는 자카르타 및 각 지역 사무소를 합하여 전체 37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3] 유엔개발계획 자체 재원과 다른 기관들에게서 위임받아 실행된 프로그램의 재원은 2004년 총 5,600만 달러에 육박하였고, 2005년에는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중기 개발 계획과 맞추도록 기획되어 있으며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 하에 통합적인 원조활동을 위해 공동국가보고서(Common Country Assessment) 및 전 유엔 차원의 개발원조구상(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에 기초하여 유엔개발계획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기와 같이 4개 분야의 프로그램 틀을 유지하고 있다. 동부 인도네시아를 겨냥한 지역적 중점 전략을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개발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여 좀더 가시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 술라웨시, 말루꾸 및 북부 말루꾸, 누사떵가라, 파푸아 등
2) 2004년 12월 지진과 해일을 당한 아체주와 북부 수마트라주는 분쟁, 재난 지역이므로 포함되었음.
3) 이중 정규직원의 70% 이상이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임.

Ⅲ. 유엔개발계획의 당면문제

유엔개발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면 유엔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회원국들의 유엔 분담금 납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보다 많은 재원이 각 국가별 해외원조기관들(Bilateral aid agencies)로 가면서 독립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엔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국가별 해외원조기관들도 수원국의 요구를 우선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원조공여국의 정책적 제한이나(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한) 단순한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조의 액수나 방식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유엔개발계획의 프로그램 중 상당부분은 공여국이 재원을 지원하고 유엔개발계획이 기획, 실행하는 경우인데 때로 재원 확보를 위해 수원국의 조건을 간과한 원조공여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이해 상충을 유엔개발계획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균형있게 조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한 예로 2005년 현재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총 재원은 7천만 달러이며 이중 10%만이 유엔개발계획의 재원이고 나머지 90% 중 상당부분이 원조공여국으로부터 확보한 재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통적으로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해 온 원조(Grant) 중심의 개발 프로그램 분야들에 다른 기구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유엔개발계획의 주도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은행들이 개발의 중점을 차관(Loan)을 이용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에서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부분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서 유엔개발계획의 분야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비정부기구들(NGOs)의 급성장도 몇몇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관료적인 유엔 체제에 얽매인 유엔개발계획을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같은 유엔 체제 내에서도 목적자체가 뚜렷하고 그 역할도 매우 가시적인 다른 기구들(예를들어, 국제아동기금이나 세계식량기구)에 비해 전반적인 개발 문제, 특히 복합적이고 때로 그 효과가 직접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며(예 : 지식 네트워크 개발, 정책 개혁, 능력배양, 개발을 통한 평화구현 및 유지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도 정부기관으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유엔개발계획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당면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벌써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대 유엔개발계획 행정관인 Mark Malloch Brown이 2000년부터 주도한 지식과 실행(Practice) 중심의 개발 네트워크로서의 브랜딩 및 조직체계 개선 등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Mark Malloch Brown을 유엔 사무총장의 참모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조직개혁 노력을 유엔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Ⅳ. 유엔개발계획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

필자는 2003년 3월 유엔 자원봉사단(UN Volunteers)의 일원으로 유엔개발계획에 배치되었으며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분야(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담당자로서 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통신 관련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정보통신기술의 인간개발에의 기여 및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2개의 프로젝트를 정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 관리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관련 정부기관에 기술 자문 역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중반부터는 정부개혁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되었고, 현재는 유엔 자원봉사단 기간이 끝나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보통신분야 이외에 지방분권화 분야의 프로그램 시행도 담당하고 있다.

처음 유엔 자원봉사단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 필드에 배치되어 수혜자들과 직접 부딪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연구 및 행정업무를 보고, 기술자문을 위해 정부관청을 드나드는 일이 주업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1년쯤 지난 후에야 새로 개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비로소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통해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함께 경험할 기회가 생겼다. 사무실에서 탁상공론으로 이어지기 쉬운 연구 및 기획 단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드 경험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유엔개발계획이라는 조직체계와 업무흐름에 대해 아는 것도 필드에서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1년간 여러 부서를 오가며 인사나 재무,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해 묻고 배웠던 것이 필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필자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는 보다 나은 정보 및 통신활동을 통해 낙후된 농업지역 빈민층에게 교육, 의료, 농업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의 사회,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 주정부와 시/군 정부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각 주당 한 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 주민들의 정보, 통신 활동을 조사하여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는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만일 정보통신상의 문제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정보 통신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사한 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발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빈곤퇴치와 인터넷, 컴퓨터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아직 갈 길이 멀



쓰나미 피해지역

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보는 인간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 적시의 정보로 인해 많은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도,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등,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히나 통신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빈민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가 간과되고 있다. 올해 중반에 중부 자바와 동부 자바의 3개 마을에 정보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이미 여러 가지 고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 머지않아 이러한 선입견들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중부 자바에 설치된 센터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이슬람 기숙학교의 조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교육용 슬라이드 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한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얻었고, 동부 자바에 설치된 센터를 통해 얻은 정보로 멜론 농부는 고품질의 멜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엔개발계획에서의 근무연수도 2년 반 정도이고,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이 전부이므로 필자의 경험을 유엔개발계획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이 유엔개발계획과 인도네시아를 더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유엔개발계획 http://www.undp.org
- 인간개발보고서 http://hdr.undp.org
- 유엔개발계획 인도네시아 사무소 http://www.undp.or.id
- 유엔자원봉사단 http://www.unv.org
- 정보통신을 이용한 빈곤퇴치 프로그램 http://www.ict4pr.org

월드비전

김 보 경 / 월드비전 홍보팀장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100개국에서
긴급구호사업, 개발사업, 옹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NGO입니다.

Ⅰ. 월드비전 소개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 목사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월드비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과 기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활동해왔고 현재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구호 및 개발 NGO(직원 : 2만 2천 명, 예산 : 미화 15억 달러)로 성장,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억 명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지역개발, 옹호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월드비전 한국은 1950년부터 1990년까지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전쟁고아와 미망인, 한센병 환자 그리고 저소득 가정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1991년부터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본격 전환, 사랑의 빵, 결연, 기아체험 24시간 등의 자체 모금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북한과 제3세계 빈곤 국가들을 돕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정기후원자 10만 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단체로서 국내 사회복지 및 기부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Ⅱ. 월드비전 핵심가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We are Christian.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어린이와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차별없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poor.

우리는 지구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삶의 여건이 변화되도록 돕는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We value people.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며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돕는 자, 월드비전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유일성을 존중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We are stewards.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이 우리의 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후원자들이 위탁해 주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We are partners.

우리는 법적, 구조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는 전 세계 월드비전의 동역자이며 도움을 받는 자, 도움을 주는 자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We are responsive.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며, 기꺼이 위협을 무릅쓰되 지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민감



하게, 그리고 경험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 또한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사회 경제적 빈곤에 대해서도 응답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헌신의 자세를 견지한다.

※ 월드비전은 1950년부터 1998년까지 베풀 선(宣), 밝을 명(明)을 쓴 '선명회' 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특정 종교 소속 기관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으나, 월드비전은 순수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국제구호개발기구이다.

Ⅲ. 월드비전 사업

1. 긴급구호사업

월드비전은 대규모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구호/재건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구호식량, 생필품, 의약품 제공은 물론 긴급대피소와 난민촌을 운영하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일단 어느 정도 긴급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복구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1) 구호사업의 분류

월드비전은 긴급구호 사태를 재난 규모에 따라 카테고리 I, II, III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표1〉

2) 긴급구호 준비사항

월드비전은 재난 발생 후 응대하던 사후처치 형태의 긴급구호사업에서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발생 이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재난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긴급구호사업(ERDM: Emergency Relief Disaster Mitigation)' 을 실시하고 있다.

가. 긴급구호 전문 인력

긴급구호 각 분야의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세계 긴급구호팀(GRRT: Global Rapid Response Team)이 세계 9개 지역 및 국제본부에 배치되어 긴급상황 발생후 24~72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 대기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긴급구호를 위해서 아시아지역 긴급구호팀(ARRT: Asia Regional Relief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구호 유사상황 발생시 즉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또한 분쟁예상 지역에 직원들을 사전에 배치해 더욱 즉각적이고 원활한 긴급구호활동이 가능케 하고 있다.

나. 긴급구호를 위한 비상자금

긴급구호에 있어 시간이 지연될수록 인명손실이 커지므로 월드비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구호활동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비상자금을 준비해 두고 있다. 비상자금은 일종의 순환자금으로서 재난발생시 즉시 집행한 후 상당부분이 모금을 통해 다시 채워지도록 상비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긴급구호물자 및 장비 사전배치

월드비전은 전 세계의 전략적인 지점(미국,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지역)에 긴급구호물자 및 장비를 비축, 관리함으로써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 긴급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고 있다.

〈표1〉

	카테고리I	카테고리II	카테고리III
정의	피해 당사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재난	피해 당사국의 자체 대응이 어려워 해당 대륙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비교적 큰 규모의 재난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오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재난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피해규모	10,000~50,000명 희생	인구25% 혹은 50만 명 이상의 난민 발생	인구 50% 혹은 100만 명 이상의 난민 발생
복구/구호기간	3개월 이내	6개월~1년	1년 이상
사업비 규모	10만불	100만불 이상	1,000만불 이상
예	국내 수해 등	이란 밤시 지진 등	이라크, 쓰나미 등

3) 월드비전 한국의 긴급구호사업

〈표2〉

국가	기간	재난유형	사업(지원단체 및 기업)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가자)	2005. 4~9	내전	•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교육환경 개선사업 – 학령기 아동 2,75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실 및 화장실을 건축
라이베리아	2005. 2~7	내전	• 심리치료 – 내전 후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전문 상담사 교육 및 양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
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미얀마)	2004. 12~현재	쓰나미	• 긴급구호활동 – 식량 및 긴급구호물품 배분 – 의료진 파견 및 의약품 공급 – 이재민 대피소 운영 – 식수 및 위생시설 제공 – 아동쉼터 운영 등 심리치료활동 • 복구활동(재난 발생 후 90일~3년(복구단계)사업에 중점) – 학교 개보수 및 지원사업 (월드비전 한국의 개발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건축 및 개보수) – 영구/반영구 거처 건축 및 지원사업 (한국 월드비전의 기존 개발사업장 인접지역인 스리랑카 남부해안 함반토타 지역의 영구거처 건축사업을 지원) – 쓰나미 피해지역 생계지원사업(어척지원)
수단-다르푸르	2004. 6~2005. 4	내전	• 보건 진료소 운영 – 난민캠프 내에 보건 진료소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건강관리 • 긴급구호물품 지원 –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담요, 비누 등을 지급하여 동절기 건강관리 방안 마련
이란	2003. 12~2004. 9	지진	• 긴급구호활동 – 식량 및 긴급구호물품 배분 – 이재민 대피소 운영 – 의료활동 – 식수 및 위생시설 제공 – 아동쉼터 운영 등 심리치료활동 – 지역사회 및 사회기반시설 재건 – 경제력 회복
이라크	2003. 3~2004. 11	전쟁	• 초 · 중학교 식수 및 위생사업(KOICA 1차 지원사업) – 모술 및 알룻바지역의 부분 파괴된 초중학교에 식수대 및 화장실 설치(20개교), 완전파괴된 학교 1개교 전면 개축공사 • 의류지원사업(영원무역, 이랜드 지원사업) • 알룻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사업(KOICA 2차 지원사업) – 이라크 서부 알룻바 지역에서 개인 및 공공위생에 관한 보건교육교재 개발 – 모술 및 알룻바 지역에 의류 및 신발을 지역주민 3만 8천여명에게 지급 • 알룻바 지역 학교건축사업(가온미디어 지원사업)
남부 아프리카	2002. 7~2003. 9	기근	• 긴급구호사업 – 극심한 기근상황에 놓인 말라위, 잠비아, 모잠비크 등 3개국에 급식사업, 농업회복사업 및 HIV/AIDS 예방사업 실시
아프가니스탄	2002. 1~2004. 12	전쟁	• 서부 아프가니스탄 긴급 보충급식사업(KOICA 1차 지원사업) • 겨울철 재난대비 긴급보충급식 및 보건의료사업(KOICA 2차 지원사업) • 아동용 운동화 및 의류 지원사업(영원무역 지원사업) • 식량지원 및 보건의료사업 –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 대상 •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사업(KOICA 3차 지원사업) • 성 전염성질환(STI) 예방 및 치료사업(KOICA 4차 지원사업)
인도	2001. 1	지진	• 인도 구자라트 지진 긴급구호사업
케냐	2001. 1	기근	• 케냐 와지르 기근 긴급구호사업

2. 해외사업

1)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Transformational Development : TD)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업지역의 통합적인 지역개발과 빈곤퇴치라는 기본 목표 하에 장기적인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월드비전의 지역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단계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월드비전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개발을 계획, 실행, 평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월드비전은 일방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일부 사업비 부담과 노동력 제공 등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갈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월드비전이 사업을 마치고 지역에서 철수하더라도 지역사회가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월드비전만의 사업이 아닌 진정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며 자생력을 갖도록 돕고 있다. 아동중심의 개발구호단체로서 월드비전은 지역개발사업 진행 시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점을 둔다. 특히 제3세계에서 어린이는 여성과 더불어 가장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며 보건, 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되어야 할 존재인 동시에 향후 지역개발의 주체가 될 존재이므로 월드비전은 어린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충족받고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지적으로도 원만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사업부문	중점 사업내용(예시)
보건	기초보건교육, 정기건강검진, 영양급식센터 운영, 지역보건소 지원, 기초예방접종 외
교육	학교 건축/보수, 교육비/학용품 지원, 학교에 교육비품/시설 지원, 학부모 교육 외
소득증대	직업기술훈련, 소규모사업 운영 위한 소액융자 외
에이즈	에이즈 예방교육, 에이즈 감염자/환자 자조모임 운영, 에이즈 환자가정 지원 외
식수/관개	식수시설 건축(우물, 펌프, 물탱크 등), 농업용수 확보 위한 관개시설 건축 외

지역개발사업장의 재원은 10만 명의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낸 후원금으로 충당되지만 월드비전 한국은 정부, 기업, 학교, 교회 등 여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장에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다. 2005년에도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빈국 모잠비크 도무에 지역에서 '초등학교 건축 및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의 지원으로 베트남 다낭시에 '중등학교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영원무역에서는 매년 상당규모의 의류를 신규 제작하여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몽골, 북한 등 다수 나라에 지원해주고 있다.

2) 월드비전 한국이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장(2005년 9월 기준)

대륙	국가	사업지역	사업기간	직접수혜자수
아프리카	우간다	카총가	2005~2019	2,600명
	케냐	로로키	2002~2017	30,000명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노노	1997~2008 2002~2013	6,810명 3,895명
	짐바브웨	유엠피	1995~2005	46,000명
	모잠비크	도무에	2004~2019	63,000명
	말라위	쳇사	2005~2019	30,000명
	잠비아	뭄브와	2005~2019	15,000명
	콩고	풍구르메	2006~2020	40,000명
아시아	방글라데시	쿨나	1999~2012	50,907명
		보그라	2001~2015	8,700명
		락삼	2006~2021	83,160명
	인도	뭄바이	2001~2015	46,000명
		더그	2005~2020	48,000명
	베트남	호아방	1998~2009	57,808명
		트라미	1997~2009	29,512명
	몽골	날라이흐	2002~2014	26,351명
		아르항가이	2004~2019	90,000명
	미얀마	피지다곤	1999~2014	20,000명
		미야난다르	2005~2020	–
	스리랑카	세바나갈라	1997~2009	36,758명
	네팔	모랑	2005~2020	60,000명
합계				794,501명

3) 월드비전 한국이 지원하는 특별사업(2005년 9월 기준)

대륙	국가	사업명	사업내용
아프리카	모잠비크	초등학교 건축 및 식수사업	수년간의 내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테테 주 도무에 지역에 430명 수용규모의 치리츠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치리츠 마을에 식수펌프 설치
	케냐	와지르 재건사업	1996년 케냐 북동부 와지르지역의 대규모 가뭄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구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46,000명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 및 식수개발사업 골자로 하는 재건사업을 진행
		논토토 초등학교 건축사업	마사이족이 거주하고 하고 있는 삼부루지역에 아동 80명 수용규모의 유치원을 건축하여 취학 전 아동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
	에티오피아	고아 및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사업	아디스아바바지역 내의 4개의 마을에서 살고 있는 고아들,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동들, 지역사회에 의해서 취약성을 가진 것으로 판별된 아동 250명에게 교육자료, 교복, 의료 및 등록금을 지원. 가장 가난한 50명의 아동이나 그들의 보호자들을 선발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이 끝난 후, 이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자본이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 지역 내 6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선별하여 가정별 서비스 및 상담에 대해 훈련을 실시

대륙	국가	사업명	사업내용
아프리카	르완다	화해 및 치유사업	르완다의 지배종족이자 수적 소수인 투치족과 다수족인 후투족간의 전통적으로 불균형한 관계에서 초래된 종족 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유 및 화해 워크샵 및 심리치료를 실시, 교회 리더자들을 중심으로 심리치료자 훈련지원사업을 지원
	시에라리온	마담김 프로젝트	2002년부터 시작된 마담 김 프로젝트는 코노지역에서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다양한 기술훈련, 경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정신적/경제적 안정을 도모
	우간다	납치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야간 보호소	우간다의 내전지역인 북부 키트남지역의 반군을 피해 3시간 이상 매일 밤 지역을 이동하는 7,500명의 아동들을 위한 야간 보호소를 건축하여 이 지역 아동들이 소년병으로 축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심리치료를 통해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을 도모
아시아	몽골	TEE 사업	몽골 현지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통신교육 지원 및 기독교 자료 번역
	베트남	호아산 중등학교 건축사업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의 지원으로 베트남 중부 다낭시에 20개 교실을 갖춘 중등학교를 건축하여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인도	아동노동예방사업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벨로레 구디야담 지역에서 빈곤한 가정환경 때문에 담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을 구출, 재활하는 한편 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이 속한 가정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나아지도록 소득증대활동 지원
중동/동유럽	아제르바이잔	장애아동통합교육사업	구소련 국가로서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아제르바이잔에서 정부, 교육계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일반교육 통합/편입을 위한 홍보, 옹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교사교육 실시, 다양한 관련자료 발간
	우즈베키스탄	에이즈예방사업교육 환경개선사업	에이즈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도인 타쉬켄트의 정부지원 에이즈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에이즈 감염 위험집단(매춘부, 마약중독자 등)을 위한 다양한 에이즈 예방활동 실시
	알바니아	교육환경개선사업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동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알바니아의 빈곤 지역인 레자 지역에서 아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학교 내에 도서관, 화장실 등을 건축하고 아동들에게 보건교육 실시 외 다수
	파키스탄	지중해성빈혈 치료예방사업	지중해, 중동지역 등지에서 발견되는 유전병인 지중해성빈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혈, 약물투입 등의 치료를 실시하며 유전병인 지중해성빈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

월드비전의 각 지역개발사업장에서는 보건, 교육, 소득증대 등의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10~15년간의 장기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중점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3. 국내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아동결연 및 지역복지사업	복지관사업	전국 11개 주요도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정개발사업	복지관이 운영되지 않는 7개소 1,313명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저소득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결연사업	강원, 태백, 화순 폐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폐환자가정, 장애인가정, 만성질환자가정 3개소 430세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와 협력사업을 사업을 진행한다.
	시설지원사업	총 71개 시설(영아시설 6개, 육아시설 46개, 모자시설 10개, 장애아동시설 9개)을 지원하여 시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기독교교육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명	사업내용
개발사업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운영	경기 · 인천 · 강원 · 충북 · 대전충남지부, 정읍 · 동해 · 무진 · 연제구복지관 등 9개 지역에서 지역 어르신 및 결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끼 식사를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 옹호사업	아동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참여정신을 가지고 아동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비전과 모습에 대하여 사고하고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정책 결정에 반영시키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사회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권리위원회 조직, 대한민국 아동총회 참석, 월드비전 아동총회 개최, 아동권리캠프 등으로 구성된다.
	긴급구호사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식수를 비롯한 생활 기본물자를 제공하며 재기의 의욕을 북돋워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복지사업	강원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여 의료, 교육, 재활 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중증 장애로 가정 내에서 방치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해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과 그룹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단체들과 협력하여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소년소녀가정세대장학금지원, 저소득가정아동학비지원, 영유아보육시설교육비지원, 난치병학생돕기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과의 파트너십 사업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월드비전과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창조적인 복지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 SK텔레콤 :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지원 – 암웨이 : '암웨이스쿨' 공부방 지원 – 한화그룹 : '사랑의 친구 미래의 친구' 아동공부방 지원

4. 북한사업

월드비전은 1994년부터 긴급구호지원활동을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부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북한 전역에 6개의 국수공장을 세워 운영해왔다. 그리고 최근 보다 근본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채소 및 씨감자, 과수 분야 등 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씨감자 생산사업

북한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하고 예로부터 구황작물로써 널리 알려진 감자는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높아 북한 식량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감자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자의 무바이러스화' 이다. 이를 위해 월드비전은 2000년부터 씨감자생산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스스로 무바이러스 씨감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전체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북한 내 5개 지역에 씨감자생산사업장(원종장)을 건설하고 전문가들의 기술 지도를 병행하였다.

현재 북한 전역의 주요감자생산지를 중심으로 5개의 씨감자생산사업장(평양, 양강도 대홍단, 평안북도 정주, 함경남도 함흥, 황해남도 배천)이 건설되어 생산을 계속해오고 있다. 2000년 씨감자생산사업을 실시한지 5년 만에 무바이러스 씨감자 원원종을 당초 목표인 연간 1,000만 알을 훨씬 초과하는 1,850만 알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남북 농업과학자들은 원원종 생산의 성공을 공식 확인하였다.

씨감자생산사업은 단순히 감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씨감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씨감자생산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감자증산'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신문과 기타 언론에서는 감자 혁명을 주축으로 종자 혁명의 중요성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있다.

2) 채소생산사업

월드비전은 오이와 토마토를 생산해 극도의 영양부족 상태에 놓인 어린이와 임산부,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비타민을 제공하며 새로운 농업기술(관비재배) 전수를 통해 식량문제 해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100평 규모의 태양열 온실을 육아원, 고아원, 병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8년 평양 만경대 구역에 1,000평 규모의 온실을, 2000년에는 평양 두루섬 지역에 1,500평 규모의 온실을 건설하여 매일 평균 약 2톤의 채소를 생산, 인근 지역 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에 분배하고 있다. 매년 종자 및 농약 · 비료 지원과 온실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방북하여 분배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분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3) 과수묘목 및 채소 육종 사업

월드비전은 북한 주민에게 비타민, 무기질 등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하고 북한 농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채소육종 및 과수묘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채소종자개량과 채소묘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 채소생산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채소 공급량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을 통해 사과 재배 노력 절감을 꾀하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며 앞으로 배, 복숭아 등 품종을 단계별로 확대하고자 한다. 2004년 시작된 이 사업들은 201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4) 남북농업과학 심포지엄

월드비전 농업개발사업은 남 · 북한 농업과학자들 간의 기술교류와 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는 형태의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으로 북한의 근본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전과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월드비전은 물자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연구인력, 제반 운영을 담당하는 등 양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사업을 진행시켜오고 있다.

남북한 농업과학자들간의 기술 교류의 가장 큰 결실은 바로 남북한 최초의 농업과학 심포지엄이다. 2001년 12월, 중국 북경에서 최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평양과 북경을 오가며 매년 남북한 농업과학자들이 모여 월드비전 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남북 농업기술분야의 활발한 협력 관계를 위해 진지한 토론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5) 국수공장 운영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위해 1996년 북한 최초의 국수공장을 평안남도 평원군에 세웠다. 이후 1997년 평안남도 평원, 개천, 안주,



평안북도 선천,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신창 등 북한 전역 6개 지역에 국수공장을 추가로 세우기로 결정했으며 6개의 국수공장에서 인근 지역 어린이와 노약자들 6만 명에게 하루 한 끼니의 국수를 제공해 왔다. 이중 최초로 세워진 평원 국수공장은 현지의 식량사정이 많이 완화되어 2001년 9월, 사업을 종결하고 현재 5개의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약 5만 명의 주민들에게 국수를 제공해 왔다.

5. 옹호사업(Advocacy)

옹호사업은 우리가 가진 영향력(월드비전의 존재, 전문지식, 사업)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기적, 지속적 혜택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구호사업 및 개발사업과 함께 월드비전의 3대 정책의 하나이다. 즉, 힘 없는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비영리 기구(NPO, NGO)들이 힘을 합쳐 연대를 결성, 그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아가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월드비전의 옹호사업은 아동권리(아동참여, 소년병, 여자어린이 문제 등), 세계 경제문제(외채 탕감, 화이트밴드데이 캠페인 등), 에이즈(HIV/AIDS 예방교육, 치료, 네트워킹-교회/종교계와 연대) 및 평화구축 등 네 가지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 음악원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은 1960년, 월드비전 창립자인 밥 피어스 목사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창단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수백 회의 공연으로 감동을 전하던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은 1978년 영국 BBC 방송 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동양권 국가로는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마침내 세계 일류 합창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의 초대 지휘자 장수철 박사는 동네에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모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가꾸어냈다.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은 국내 최고의 합창 지휘자인 윤학원 교수를 거쳐 지금의 김희철 원장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홍혜경, 카운터테너 이동규 등을 배출해 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Ⅳ. 향후계획

1. 비전 헌장(Vision Statement)

월드비전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70여 개국 6,0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2000년부터 3년에 걸쳐 비전헌장을 수립했다. 앞으로 월드비전 사업의 근간이 될 비전헌장은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며, 후원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풍성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 ; Our prayer for every heart, the will to make it so.

2. 빅 골(Big Goals)

월드비전은 2015년까지 전 세계 결연 아동 수 400만 명, 후원자 수 1,600만 명(세계) 확보를 최고목표(Big Goals)로 삼고 매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가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범세계적 운동을 펼쳐나가는 '정의구현' 사업과 전 세계 극빈 아동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삶의 변화' 사업을 향후 10개년 목표로 설정, 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5개년 목표를 잡았다. 옹호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복지에 역점을 두고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사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수혜자와 후원자의 삶의 변화를 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세계 2만여 직원이 함께 발맞추어 전진하고 있다.

월드비전 연혁

1950. 9.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 목사가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한국선명회(현 월드비전) 설립
1954. 6. 남부지방 선명회 시설아동의 치료 및 진료를 위하여 대구시 남산동 1번지 소재 대구 동산기독병원 내에 선명회 아동진료소 개설
1955. 5. 외원단체 등록법 제정 공포에 따라 보사부에 외원 민간 구호단체 보사허 제81호로 등록함으로 법률로 보장된 본격적인 구호사업 개시(186개 사회복지시설지원)
1959. 5. 밥 피어스 목사,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사회복지분야 공익 포상훈장 수상
1959. 5. 나병의 치료 예방 계몽 연구를 위하여 서울 남대문로 5가 84번지에 선명회 특수피부 진료소 개설
1960. 5. 대전 및 중부지역 선명회 시설 아동의 치료 및 진료를 위하여 대전시 대흥동 458-1에 선명회 대전진료소 개설
1960. 8.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창단
1964. 1. 한경직 목사 초대 이사장 취임
1964. 3. 밥 피어스 목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964. 4. 보사부 재단법인 설립 허가
1964. 9.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선명회 시설아동의 치료 및 진료를 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산 77-10에 선명회 아동병원 개원
1971. 10. 음성나환자 정착촌 지원사업 개시(전국 32곳)
1972. 6. 선명회 직업보도소 개설(서울시 등촌동)
1973. 5. 이윤재 제3대 한국회장에 취임
1974. 7. 월드비전 리틀야구단 극동아시아대회 우승
1974. 10. 경기도 성남시 성남사회복지관 개관
1974. 10. 5.16민족상 사회부문 수상
1976. 6. 화전민 지원사업 개시(강원 춘천)
1978. 5.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세계합창경연대회(영국 BBC) 최우수상 수상
1978. 5. 국내결연사업 개시
1981. 1.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개시(강원 평창군 · 춘성군, 충북 제원군, 전남 고흥군 · 해남군 지역)
1983. 12. 박대선 박사 제4대 회장 취임
1987. 5.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로 법인 명의 변경 등록
1987. 11. 강원도 춘천시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88. 11. 서울특별시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89. 4. 정진경 목사 제2대 이사장 취임
1990. 4. 부산광역시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1. 1. 이윤구 박사 제5대 한국 회장 취임
1991. 1. 탤런트 김혜자 친선대사로 임명
1991. 4. 광주광역시 무진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1. 5. '사랑의 빵' 운동 전개
1991. 10. 해외 결연사업 지원(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짐바브웨)
1992. 11. 대구광역시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3. 2. 강원 춘천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1993. 9. 대전광역시 한밭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3. 11. 인천광역시 선학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4. 7. 탤런트 박상원, 친선대사로 활동 시작
1994. 8. 기아체험24시간 캠프 제1회 개최
1994. 11. 북한사업 개시(한우 60두 및 평양 제3병원에 침대 500개 지원)
1994. 12. 강원 태백시 광산촌 진폐환자 가정결연사업 개시
1995. 2. 충북 청주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5. 3. 강원 동해시 동해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5. 3. 전북 정읍시 정읍사회복지관 개관
1995. 5. 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지원 NGO 등록
1996. 11. 북한 국수공장 설립 운영(평남 평원)
1997. 1. 김선도 감독 제3대 이사장 취임
오재식 제6대 한국 회장 취임
1997. 11. 북한 국수공장 5개 추가 설립 운영(평남 개천 · 안주, 평북 선천, 함남 신창, 강원 원산)
1998. 6. 기아체험 24시간 캠프 13,000여명 참가 ARS 1,187,775통, 23억 7천 만원 모금
1998. 9. 월드비전 국제총회에서 각국 선명회 명칭을 '월드비전'으로 명칭 통일
1999. 3. 제주지부 창립
1999. 6. 북한 수경재배농장 첫 수확
2000. 3. 통일부 남북교류 협력기금 7억 9,800만 원 지원받음
2000. 4. SBS 후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전국 9개소 운영
2000. 7. 월드비전 2000 세계어린이합창제 개최
2000. 10. 북한 씨감자 생산 지원 사업 성공리에 씨감자 첫 수확
2001. 3. 월드비전 경기북지부 및 일산지회 창립
2002. 3. 월드비전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개관
2002. 10. 월드비전 울산지부 창립
2003. 1. 박종삼 교수 제7대 한국 회장 취임
2004. 3. 김혜자 친선대사의 에세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출간
2004. 4. 북한 용천 폭발사고 긴급구호, 민간단체 최초로 구호물자 지원
2004. 7. 월드비전 2004 세계어린이합창제 개최
2004. 8. 북한 가수 묘목 재배 온실 및 과수원 시설 완공(숙천 과수학 연구소)
2004.10. 사랑의 빵 배부 10,000,000개 돌파
2005. 1. 태백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공부방 개소
2005. 5. 정애리 홍보대사의 에세이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출간
2005. 8. 국내 정기 후원자 10만 명 돌파
2005. 9.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씨감자 생산사업 지원 위한 '사랑의 감자꽃을 피워요' 캠페인, 중앙일보와 공동주최
2005. 9. 한비야 긴급구호팀장의 긴급구호 에세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출간

〈협력정책 2005-2-12〉

국제협력 동향

발 행	2005년 10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신라애드/(02)3444-0223